

# 2006 독일통일백서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2006



통일연구원

## 2006 독일통일백서

인 쇄 2008년 5월

발 행 2008년 5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남북협력연구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4 (팩시밀리) 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8,000원

© 통일연구원, 2008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2006 독일통일백서 =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2006 / 통일연구원 [편]. — 서울 : 통일연구원, 2008  
p. : cm.

ISBN 978-89-8497-452-8 93340: ₩8000

340.925-KDC4  
320.943-DDC21

CIP2008001601

# 목차

## 제 1 부 신연방주 개발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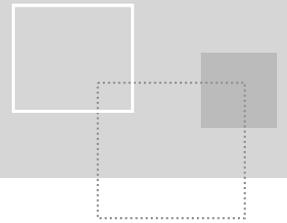
---

I. 신연방주의 발전 동향	10
II. 발전 및 개발정책의 전개	24
III. 내적 통일	42

## 제 2 부 동독재건 프로그램과 정책분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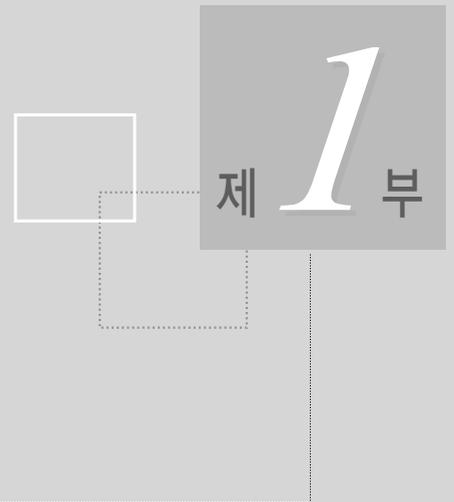
I. 경제력과 고용 증대	49
II. 기술과 혁신을 위한 이니셔티브	71
III. 지역 및 사회 결속력 지원	91
IV. 국제협력 및 유럽협력	132



## 제 3 부 신연방주지역 경제통계

---

I. 지역통계	138
II. 국민소득	142
III. 경제지표	152
IV. 노동시장지표	158
V. 재정지원지표	162
VI. 회사설립	166
VII. 연구개발(R&D)	168
VIII. 투자활동	169



제 *1* 부

신연방주 개발 및 과제



독일통일백서

독일의 최우선 과제는 신연방주의 경제를 살리고 실업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일이다. 신연방주의 발전이 독일의 경제력에 좌우되기도 하지만 독일의 번영 역시 신연방주의 발전에 달려 있다. 이러한 상호성 때문에 신연방주 경제의 자생력을 키워 신연방주가 특별재정이전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자립하도록 하는 것이 독일의 전사회적 과제이다. 게다가 유럽 이웃국가와의 경쟁까지 고려한다면, 이 중요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어떠한 추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분명해진다. 신연방주의 재건은, 재건의 과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국민적 합의 하에 동서를 가리지 않고 수행되어야만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이 통일백서가 정부의 신연방주 재건사업을 상세히 다루고 있는 있으나, 신연방주의 경제발전은 일차적으로 국민 전체의 다각적인 노력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강조하는 바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앞으로도 정치적, 재정적, 경제적 제반여건을 마련해갈 것이다.

정부는 분단으로 인한 피해와 동독의 경제운용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1990년부터 독일 전 국토의 1/4이 채 안 되는 구동독지역의 재건을 지원해왔다. 지금까지 2,500억 유로 이상 재건에 직접 동원했고, '연대협약 II'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60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2006년 현재 신연방주는 긍정적인 성과와 미해결과제, 발전에 대한 희망과 극복하지 못한 도전이 공존하고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상황이다.

현 상황을 이성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킵의 물이 반밖에 차지 않았는지, 반이나 찼는지'와 같은 감정적인 논쟁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교통, 도시기반시설과 대학의 현대화, 기업의 경쟁력 확립 등 부인할 수 없는 발전을 이루긴 했으나 신연방주의 자체적인 경기회복은 달성되지 못했다. 노동시장을 보아도 경제 전반의 발전이 충분치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연방주의 실업률은 지난 10년 간 구연방주의 약 두 배에 이르는 실정이다.

신연방주민이야말로 그 간의 성과와 부족한 점에 대해 현실적인 평가를 원하고 있다. 노동시장을 관찰해보고 경제상의 통계와 국민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그 간의 노력이 성공적이긴 했으나 앞으로도 오랜 기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부분 동감한다. 또한 지역별 특성화 전략이 경제의 자생력을 갖추는 열쇠라는 사실도 인정한다.

따라서 강점을 살리고 성장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키워야 할 것이다.

2005년 말부터 독일의 경기가 확연히 좋아졌다.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국내경기도 갈수록 좋아지고 있으며 노동시장도 처음으로 개선의 조짐이 보인다. 신연방주도 이러한 발전의 혜택을 보고 있다. 물론 지금의 경제성장이 고용과 저소득, 특히 장기실업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구동독 재건정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 혁신, 지역사회의 협력과 이를 통해 국내에서, 나아가 유럽과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이룬 성과를 지키고 그 위에서 기존의 노력을 이어나가 새 길을 여는 것이다. 경제여건을 계속 강화하고 구동독에 잔존하는 구조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심각한 장기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실업자를 고용시장에 편입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사회법전 II’와 ‘이니셔티브 50+’이다. 이들 정책은 5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고, 고급인력에 일자리를 공급하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하여 실업자를 고용시장에 흡수하는 것이 최우선과제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 간 정부는 생산시설을 확장하고 현대화하는 지원으로, 국제경쟁에서 쳐지지 않는 산업부문과 경제 클러스터가 생겨났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전자공학, 자동차, 화학, 조선, 광전자공학, 보건센터, 관광 등 유망한 서비스산업을 들 수 있다.

이렇듯 발전이 이뤄지면서 신연방주 내에서도 지역적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일단 많은 발전을 이룬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이 여러 곳 있다. 연초에 실시된 한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장지역의 주민 역시 이러한 발전을 인식하고 있다. 설문조사 중 ‘내일의 성공지역’이라는 항목에서 신연방주의 많은 지역이 상위권에 올랐다. 이들 지역을 살펴보면 학문과 교육이 발달한 곳에서 경제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하위권 지역들도 미래에는 전망이 좋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1 독일 전망 2005/6.

이와 반대로 일자리 감소, 주민이탈로 인한 인구 감소,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악순환이 거듭되는 곳도 있다. 특히 젊은층의 이주로 인해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며 민주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을 잃어가고 있다.

이처럼 전망이 밝은 지역이 있는가하면 어두운 곳도 있다. 신연방주의 현실을 기술하고 나아가 향후 재건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적 격차를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차이는 심층적인 구조변화와 역동적인 발전의 결과이다. 따라서 정부가 할 일은, 특히 구동독 재건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은 앞으로도 균형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실천해 가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별, 부문별로 성장이 특화되면서 생기는 차이는 다양한 성장가능성의 바탕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과감하게 이런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신연방주에 체계적으로 대규모 지원을 할 것이다. 이 바탕 위에서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개선하고 신탁청의 잔재를 제거할 것이며 그 밖에 다음 일곱 가지 목표에 주력할 것이다.

## 1. 투자유치전략 개선

신연방주는 이미 매력적인 투자여건을 갖추었다. 크고 작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 결정이 이를 뒷받침한다. 신연방주의 발전을 위해서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외국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에 신연방주가 가진 장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신연방주를 알리는 입지마케팅이 절실하다. 현재 ‘지역경제구조개선’ 사업, 투자보조금과 같은 투자촉진정책과 재건은행(KfW)의 대출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산업투자위원회(IIC)와 ‘독일투자청(Invest in Germany)’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게 할 것이다. 이처럼 국가가 신연방주의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국내외적으로 하나되어 움직여야 한다.

## 2. 중소기업 지원

투자유치와 더불어 기존 기업의 현대화와 경쟁력 확보도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기초여건이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진흥책을 시행하며 신연방주 내 중소기업의 자본조달에 주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생계형 창업을 장려하고 성장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며, 벤처기업의 설립을 후원한다. 그 외에도 혁신력 개선, 직업훈련 현대화, 대외무역 지원, 특히 동유럽시장 개척을 위한 조치들이 있다. 이들 정책은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3. 연구개발투자 강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다. 정부는 유망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60억 유로를 출연해 ‘혁신과 성장을 위한 신동력’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로부터 신연방주가 큰 수혜를 입고 있다. 신연방주가 발전하려면 산학협동이 필수적이다. 이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경제의 버팀목은 중소기업이라는 점이다. ‘지역 기업’ 사업 또는 ‘낙후지역 성장동력을 위한 R&D 지원사업(INNO-WATT)’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은 새로 열리는 ‘경제가 과학을 만나다(Wirtschaft trifft Wissenschaft)’ 대회를 통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 대회는 지역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학문적 연구성과를 경제에 보다 잘 접목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 4. 노동시장 활성화

정부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신연방주의 높은 실업률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대량실업에도 불구하고 신연방주는 머지않아 전문 인력의 부족현상을 겪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업의 인력수요를 충족할 지역인재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청년실업 극복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청년층에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일자리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일자리

가 없어 자신의 일과를 직업적 리듬에 맞출 기회가 없다면 현재에도, 미래에도 노동시장에서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과제는 장기실업자에게 직접적인 동기를 부여해 노동시장에 편입시키는 일이다. 장기실업자 대부분은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일을 할 것이다. 정부는 이미 ‘사회법전 II’의 일환으로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두었다. ‘이니셔티브 50+’도 있다. 이들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기실업자를 노동시장에 수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장기실업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려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 여당은 2005년 11월 연정협약에서 ‘취업능력이 부족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정부는 현재 실현방안을 모색 중이다.

## 5. 지역 간 연합, 지방의 성장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집중적 지원

신연방주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하려면 지역별 잠재성을 집중 활용해야 한다. 성장 지역에는 연구, 기술과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제반조건이 존재하고 그 결과 서비스산업까지 일어난다. 이런 지역에서 성장과 고용에 필요한 ‘창의력’이라는 생산요소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조건을 갖춘 창의적인 지역경제의 특징은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고 유인을 가지고 있고, 산업 내 기술의 비중이 높으며 개방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 주변으로는 마치 자석처럼 인구가 유입되기 마련이다.

고도의 성장세를 보이는 지역은 해외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허브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연방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제단체, 학계는 주정부, 연방정부와 분야별 회의를 열어 교류의 장을 갖는다. 이 회의를 통해 해외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형성되며 지역별, 분야별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다.

한편 성장지역의 주변지역도 성장의 수혜를 입도록 발전이 빠른 지역과 더딘 지역을 연결시켜 상호 생산적 관계를 이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 간 연합은 구동독 재건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며 성장과 고용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지역연합은 필요하다면 전국 어디로든 확대될 것이다.

## 6. 농촌의 생활수준 향상과 성장가능성 활용

신연방주의 농촌지역에서도 지난 16년 간 눈에 띄는 구조변화가 일어났다. 농업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순조롭게 발전하였고,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상태이다. 그 밖에 잘 보존된 자연환경은 여가와 휴식을 제공해 높은 경제적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면 고갈되지 않는 무한자원의 상품화를 추진하고, 관광과 에너지산업이 가진 잠재력을 집중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인구구조는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며 변화하는데 특히 구동독의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 인프라와 생활터전의 기반을 훼손할 정도로 심각하다.

연방정부는 인구가 적은 지역의 주민이 생활터전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변화된 환경에서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공공 인프라를 보장하기 위해 각 주정부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공공 인프라의 위치 선정 시에는 앞으로도 ‘중심지 콘셉트’를 이용해 공공시설과 서비스가 공간적 효율성을 갖도록 구성한다. 또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유연성과 이동성을 띠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최선의 해법은 해당 지역별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7. 적극적인 시민사회 장려

독일의 내적 통일을 공고히 하려면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사회적 연대를 위해서는 국민이 함께 해야 한다.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외국인 적대와 극우세력에 반대해 발족된 시민단체들의 역할도 기대된다.

정부는 시민들 스스로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 특히 인구감소로 발생하는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신연방주의 도시개발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이는 구연방주 지역에게까지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구서독지역이 구동독지역으로부터 이 사례를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구서독의 일부 취약지역이 새로운

동서 파트너십을 맺는 것을 환영한다. 구동독의 모범적인 사례는 오늘날 이미 독일 서부, 남부와 북부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상호 건전한 자극을 주어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독일과 유럽의 취약지역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best practice-해결’을 활용하여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은 지역들이 서로 배울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라우징처 지역의 경험으로부터 겔젠키르헨 또는 오버팔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가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제해결도 훨씬 수월하게 할 것이다. 논의의 대상이 일방적으로 구동독에만 집중돼 구연방주에도 일부 취약지역이 있음을 간과할 때가 많은데, 배움의 문화가 정착돼 서로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구동독과 구서독 사람들의 머리속으로부터 두 지역의 상이한 역사와 이력에 대한 인식이 점차 멀어져가고는 있으나 구동독 재건 문제는 절대적 중요성을 갖는 국정과제이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새로운 동서연대와 독일통일의 완성에 대한 전망은 밝다.

# I

## 신연방주의 발전 동향

### 1. 현 경제동향

지난 5년 간 신연방주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1.0%로 구연방주(+0.8%)보다 다소 높았다.<sup>2</sup> 하지만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의 부담을 덜기에는 경제동력이 너무 약하다. 경제활동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실업률은 1997년 이래 17%가 넘는다.

전반적인 상황은 그러하지만 구조적 변화는 많이 진행되었다. 제조업과 생산업 관련 서비스업은 부분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제조업은 지난 5년 간 평균 5.6%의 성장률을 보여 구동독 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 입지를 굳혔다. 경기에는 부담이 되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설업과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지속되었다.

이렇듯 전체적으로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제구조의 기본여건은 여전히 구연방주보다 불리한 실정이다. 따라서 아직은 ‘자생력 있는 경제’라 할 수 없다.

---

<sup>2</sup> 2002년부터 3년 간 신연방주는 구연방주 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다가, 2005년에 들어서 약 1포인트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경제성장률: 신연방주/구연방주 [2001: 1.1% / 1.4%;] [2002: 1.1% / 0%;] [2003: 1.0% / -0.3%;] [2004: 1.9% / 1.7%;] [2005: -0.1 % / 1.1%]. (신연방주, 베를린 제외)  
출처: 연방주 통계청 거시경제지표 연구분과.

구동독 경제의 주요 취약점을 살펴보겠다.

- 신연방주에 입주한 대기업, 또는 기업 본사의 수가 매우 적다. 이에 따라 제조업 비율은 비교적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비율은 매우 낮다.
- 기업의 연구활동이 활발하지 않다(전체 기업의 연구활동 가운데 구동독 기업의 연구활동 비율은 약 6%에 불과).
- 기업이 외부자본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네트워크와 클러스터 형성의 어려움이 있다. 이 때의 네트워크와 클러스터란 성장 속도가 상이한 분야들을 연계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개념도 포함한다.

### ○ 생산성과 가격경쟁력

경제전반의 생산성(베를린을 포함하는 신연방주의 취업자 1인당 GDP)은 2005년 구서독 평균의 약 79%까지 증가했다.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의 생산성 역시 구서독 평균의 78%(2000년)에서 85.5%(2005년)로 증가했다. 제조업 하나의 생산성만 보아도 구서독의 약 80%에 근접해 있다. 신구연방주 간의 생산성 격차는 매년 약 1.5%p씩 감소하는 것이다.<sup>3</sup>

생산성 증가에 따라 임금단위비용도 상대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아직 구서독지역의 임금단위비용 상대치(+3.5%)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제조업(건설업 제외)에서는 구연방주보다 12.8%나 낮았다. 이로써 구동독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다.<sup>4</sup>

지난 몇 년 간의 임금 변화추이 역시 가격경쟁력에 크게 기여했다. 구동독의 총임금은 구서독과 비교하여 더 이상 오르지 않아 구서독(베를린 포함) 평균 임금의 81%를 기록했다. 노동시간도 대부분 구서독보다 많다. 2004년 말 산별임금 기준으로 동서독 기본임금비율은 94%였다. 산별임금협약 체결비율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구서독지역 노동자의 68%가 2004년 단체협약 임금을 받는 반면 구동독지역은 53%에 불과했다. 하지만 단체협약을 준수하는 수준은 훨씬 더 높아, 근로자 3/4의 노동조건이 협약에 완전히, 또는 대체로 부합하고 있다.

<sup>3</sup> 생산성 및 임금단위비용에 대한 수치는 신연방주에 베를린을 포함하여 산출했다.

<sup>4</sup> 제3부 도표 2.8, '임금비용, 생산성 및 임금단위비용' 참조.

## 2. 노동시장과 직업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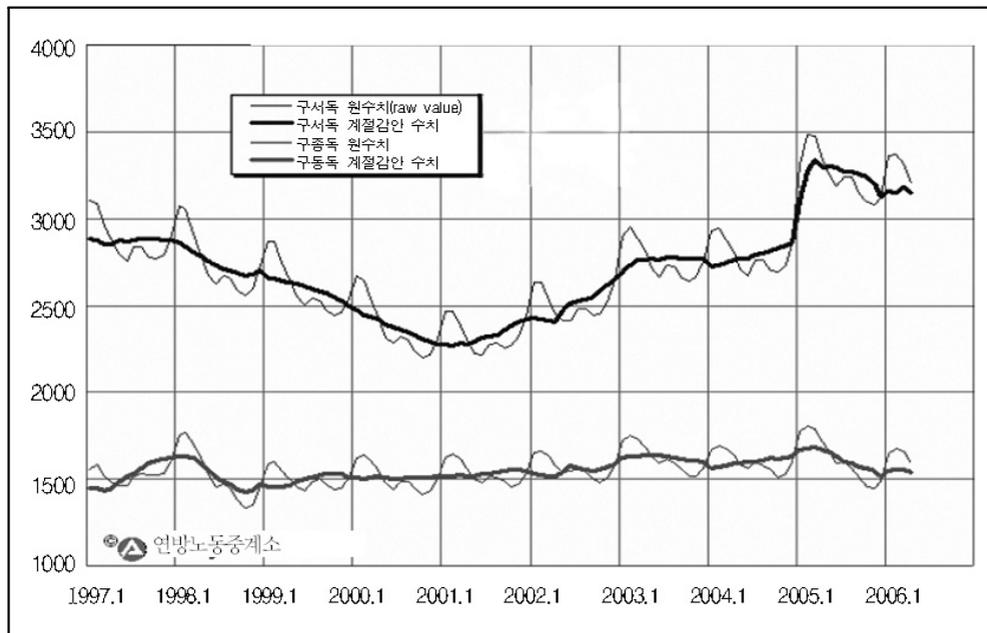
### ○ 노동시장 현황

구동독의 실업자 수는 2005년 평균 1,614,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16,000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여성 실업자 수는 200명이 증가하여 거의 변동이 없었던 반면 남성 실업자 수는 약 15,000명(1.8%) 증가했다. 이로써 신연방주의 2005년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18.7%를 기록했다(2004년 18.4%). 구서독 실업률(9.9%)보다 여전히 거의 9%p나 높다. 구서독 실업률은 전년대비 1.4%p, 구동독은 0.3%p 증가했다. 구동독은 여성보다는 남성 실업자가 다소 많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남성 실업률은 19.0%를 기록했다(여성 18.6%).

구동독지역의 25세 미만 실업자 수는 2005년 평균 207,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25,000명(13.8%)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써 2005년 청년 실업률은 19.3%에 달했다(2004년: 16.2%).

그림 1-1-1 구서독과 구동독 실업률

(단위: 천 명)



지난 7년 동안 구동독 실업수준은 큰 변화가 없었다. 연평균 실업자 수는 150만 명(1999년)에서 162만 명(2003년) 사이였다. 하지만 이 수치만 보아서는 그 속에 숨은 상당한 역동성을 읽어낼 수 없다.

2004년(2005년에는 해당 수치가 남아있지 않다) 구동독 실업자 수가 266만 명이었으며 그 중 136만 명은 기존 취업자였다. 동시에 262백만 명이 실업자 신분을 벗었는데, 그 중 106만 명은 취업에 성공했다.

2005년 실업률 추이를 볼 때 「하르츠(Hartz) IV」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 「하르츠(Hartz) IV」는 노동시장 내 서비스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이 법으로 지금까지 가려져 있던 실업인구가 새로이 실업자로 등록됨으로써 장기실업인구 측정에 투명성이 한층 높아졌다. 2004년 말까지는 경제활동가능인구 중 사회보장비 수혜자들이 모두 직업소개소에 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기본생활보장법에 따라 실업수당을 받게 되고 연방직업소개소를 통해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 한편, 3세 이하 자녀 육아 등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 한 실업자 스스로 구직에 적극 나설 의무를 부여받고 강제적으로 실업자로 등록된다.

이외에도 2005년 1월부터는 기존 실업수당 수혜자 중,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이들 또한 -일을 못하는 객관적 사유가 없는 이상- 의무적으로 구직에 나서야 한다. 이 집단 역시 2005년 초부터 실업자로 등록되었다. 위의 두 조치로 구동독지역의 실업자 수는 2005년 초 약 5만 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상 이전부터 실업자였다. 한편 취업자와 실업수당 I 수혜자가 실업등록을 하는 경우는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2005년 신연방주에서는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자가 계속 감소했다. 2005년 6월 측정 당시 500만 명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는 전년대비 14만 명 또는 2.7% 감소한 것이다. 사회보험에 의무가입된 남성근로자는 2005년 6월 전년 동기대비 3.4% 감소하여 242백만 명, 여성근로자는 2.0% 감소하여 245백만 명이었다. 동시에 신연방주 내 저소득근로자의 수도 18.4%나 급증한 전년과 달리 감소세를 보였다. 2005년 6월 측정 결과 834,000명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약 41,000명, 즉 4.7%가 감소한 수치이다.

베를린을 포함하는 구동독의 취업률(15~64세 노동자와 실업자의 합계/15~64세

인구 - 2005년 75.7%)은 구서독보다 높았다(2005년 73.2%). 여성의 경우 차이는 훨씬 더 두드러진다(신연방주 72.1%, 구연방주 65.5%). 이는 자녀가 있는 여성은 구서독보다 구동독의 취업과 구직활동이 보다 활발하기 때문이다.

## ○ 직업훈련

2004년 10월~2005년 9월 동안 구동독 직업소개소에는 100,355개의 직업훈련 자리가 등록되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12,200개(-10.8%)가 감소한 수치이다. 같은 기간 직업훈련 신청자는 총 202,000명이었는데 이 역시 전년대비 10,400명(-4.9%)이 감소한 것이다. 이런 감소세는 신구연방주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즉 구서독지역에서는 대학 졸업자 수가 여전히 증가하는 반면, 신연방주에서는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직업훈련 신청자 중 2006년 이전의 졸업생 수도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직업훈련을 소개받지 못한 신청자 중 이른바 '취업재수생'의 수는 현저히 줄었다.

직업훈련의 실태는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아직 직업훈련 정원보다 신청자가 많지만 직업훈련 신청자 감소로 대차대조표 상으로는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다. 신연방주에서는 직업훈련 자리 1개당 신청자가 13명인데 비해 구연방주에서는 2.5명이다. 초기 직업훈련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남녀 구분 없이 청소년의 60%가 기업의 직업훈련을 받았다.

직업훈련 공식마감시점(2005년 9월 30일)까지 자리를 얻지 못한 신청자는 총 11,150명이었다. 그러나 독일 직업훈련협약을 통해 2005년 말 이 중 6,400명이 감소했다.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은 약 25%선에서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향후 직업훈련 여건을 갖출 기업까지 예상에 넣는다면 약 26%의 기업이 직업훈련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제조업체의 45%가 직업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건설업의 침체는 직업훈련에서도 읽을 수 있는데 그 비율은 27%에 불과하다.

직업훈련생에서 정규직이 되는 비율 역시 완만하게 유지되었다. 신연방주에서는 약 46%가, 구연방주에서는 약 55%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한편 직업훈련 후에 채용되지 못하는 제일 큰 원인은 예나 지금이나 불경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원인은 직업훈련을 시키는 기업의 1/3이 필요 이상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전문인력의 수급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IAB 설문에 따르면, 전문 인력을 요구하는 분야의 80%가 채용인력에 만족을 표시했으며 불만족을 표한 곳은 기업의 서비스업, 신용 및 보험업뿐이었다. 이 외에도 현재 중소기업과 전문 인력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 3. 분야별 성장률

2005년 경제지표에 따르면 신연방주의 총생산은 계속 증가하여 현재 18.3%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증가세에는 '6.0%'라는 평균치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제조업의 힘이 컸다. 이처럼 지난 수년 간 재산업화가 꾸준히 진행되어 분야별 중심산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표 1-1-1** 신연방주 산업부문별 총부가가치생산 전년대비 성장률

(1995년 물가기준, 단위: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경제전반 총부가가치 총계	3.2	2.0	0.8	2.7	1.9	1.3	1.3	1.1	2.3	0.1
농업, 임업, 어업	-1.2	9.2	-3.3	13.1	-7.9	7.4	-9.0	-1.5	20.6	-5.2
생산업(건설업 제외)	8.9	5.5	2.0	5.5	10.1	2.8	1.9	5.8	7.9	4.5
* 제조업 포함	5.7	11.2	4.9	7.4	12.8	4.0	2.6	6.1	9.2	6.0
건설업	-4.4	-4.7	-11.2	-7.6	-12.4	-13.3	-5.7	-3.4	-2.5	-9.4
상업, 요식숙박업, 교통업	2.2	0.1	3.1	5.4	2.4	2.6	2.7	-0.8	1.5	1.0
금융업, 임대업, 서비스업	9.2	6.2	7.9	3.5	4.2	6.9	4.5	2.2	2.1	0.9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업	1.7	1.3	-0.1	2.3	1.1	-0.6	0.4	-0.5	-0.8	-1.9

1) 1995년 유럽 거시경제지표(ESVG) 산출기준.

2) 2005년 8월/2006년 3월 현황.

3) 베를린을 제외한 신연방주지역.

출처: 연방주 통계청 거시경제지표 연구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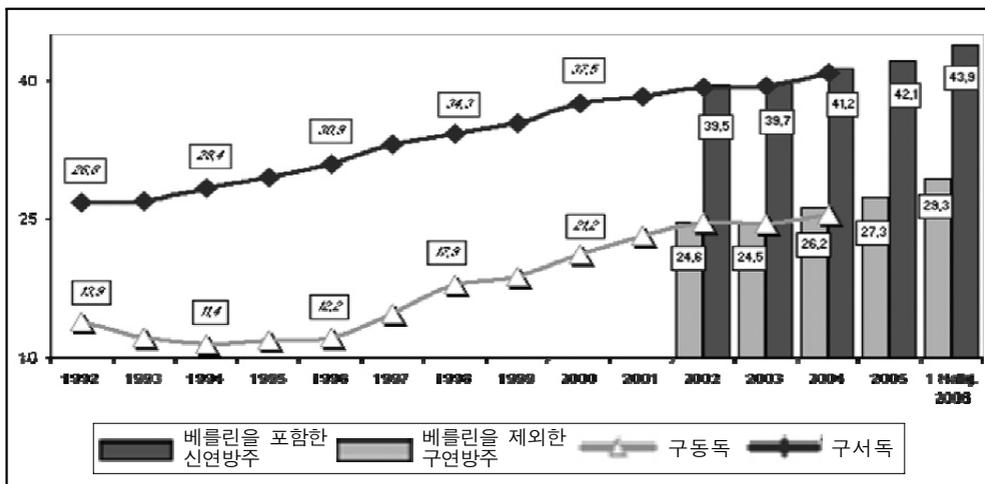
생산부문의 성장 동력(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은 2000년부터 특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자동차(+49.4%)와 사무실기기 및 마이크로전자공학 부문(+47.0%) 등 첨단기술 분야이다. 화학(+26.3%), 제지, 출판·인쇄업(+22.4%), 식품업(+29.1%)이

나 목재업(+20.6%)과 같은 전통제조부문(+29.1%) 역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이런 발전동향은 신연방주가 점차 자립적인 성장거점을 늘려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제조업과 광물업의 수출량으로 살펴본 신연방주의 국제 경쟁력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06년 상반기에는 총 매출의 30% 가까이가 해외시장에서 달성되었다. 하지만 구서독 기업의 수출이 44%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신구연방주의 격차는 많이 좁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신연방주의 수출비중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내수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신연방주의 잠재된 가능성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림 1-1-2 광물업과 제조업 수출 비중<sup>1)</sup>

(단위: %)



- 1) 종업원 20인 이상인 기업체에서 총매출의 해외매출 비중.
  - 2) 구동독: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
  - 3) 구서독: 전 연방공화국 지역.
  - 4) 2005년부터: 신연방주에 베를린 포함, 구연방주 베를린 제외.
  - 5) 1995년부터 새로운 분류체제로 전환되어(wz93) 1995년 이전의 수치는 비교적 제한적이다.
- 출처: 연방 통계청, 자체 산출 통계.

제조업 다음으로 구동독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은 기업-서비스 부문이다. 이 분야는 현재 총생산의 약 25%를 차지하는데 29.5%를 기록하는 구연방주보다는 분명 낮은 수준이다. 지난 1995~2005년 사이 기업-서비스 부문의 총생산이 25% 증가했는데

제자리걸음을 했던 고용(구동독지역 7%, 구서독지역 17%)상황과 어우러져 신연방주의 생산성이 구서독의 약 80%까지 증가했다. 이로써 구연방주와의 생산성격차를 약 20%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 구연방주에 비해 신연방주(베를린 제외)는 제3부문 취업률이 약 10% 적다. 하지만 베를린이 몇몇 분야(대학이나 보건분야)에서 취업률이 높으므로 베를린을 포함하면 격차는 3%에 지나지 않는다.

신연방주에서 특히 중요한 서비스산업인 관광은 내수시장에서 입지를 굳혔다. 신연방주(베를린 포함) 내 방 8개 이상의 숙박업소와 야영장의 숙박 건수는 전년보다 약 3% 증가한 7,880만이었다. 베를린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2005년에도 10%가 넘는 평균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 외에도 신연방주와 베를린을 다녀간 일일방문자 수는 2004년 약 6억 1,300만 명으로 이는 상당한 매출 및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왔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는 관광업이 고용창출에 중요하다. 예컨대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머른 주에서 관광산업은 주민소득의 7.4%를 차지하고 총 매출은 35억 유로로 그 어떤 지역에서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한편 건설업의 구조조정은 2005년에도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신연방주(베를린 포함) 건설업의 실질규모는 약 4.1% 감소했다. 건설업의 실질규모가 감소한 것은 지난 몇 년 간 이뤄진 홍수피해 복구작업이 끝났기 때문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일반공사 부문은 감소세가 6.1%로 평균을 넘었으며, 확장공사 부문에서는 4.0%, 나머지 생산부문(완제품, 설치, 건축설계 등)은 -0.8%를 기록했다. 건설업의 최약체는 총부가가치가 5.4% 감소한 주택부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5년 1/4분기 침체 이후로는 모든 부문이 안정을 찾았다.

신연방주와 베를린의 2005년 일반공사 경기지수를 보면 고용창출 -8.5%, 근로시간 -9.3%, 공사수주 -7.0%로 전년보다 나쁘다. 하지만 공사수주율은 시간이 흐르면서 안정을 찾았다. 신연방주 건설경기가 계속 하강하는 주원인은 산업시설과 주택부문에서 모두 공급과잉과 수요부족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업의 규모를 수요의 지속성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 ○ 경제부문으로서의 연방군

연방군은 신연방주의 중요한 경제부문으로 노동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신연방주 105개 지역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인은 약 44,000명이며 그 중 직업군인이 7,900명, 의무복무 군인이 약 23,100명, 군무원이 약 16,800명이니 연방군 역시 중요한 고용주에 속한다 하겠다.

2005년 자원입대 신청자 비율은 전체의 30%에 가까웠다. 그 중 여성 신청자의 1/3이 신연방주 출신이었다.

1991~2005년까지 연방군은 신연방주에서 47억 유로 상당의 계약을 발주했다. 발주분야는 서비스업, 석유 채굴, 선박, 경비용역, 항공우주산업과 식료품 등이다.

#### 4. 지역발전

지난 수년 간 성장부문의 집중화와 인구변동으로 인해 지역간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졌다(다음 단락 참조). 외곽지역에서는 인구감소세가 눈에 띄는 반면, 도심지역에서는 특별한 인구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구가 급감했던 대도시에서는 1998/1999년 이후부터 인구감소의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예: 쾰른, 게라, 쾰른). 심지어 일부 도시에서는 몇 해 전부터 인구유입과 증가가 시작되었다(예: 라이프치히, 로슈토크, 에르푸르트, 포츠담).

이처럼 지역별로 발전 가능성에 차이가 나면서 장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지역별 발전 가능성은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상황, 경제구조, 인프라구조의 규모와 질, 전문 인력의 확보뿐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 풍광 같은 소프트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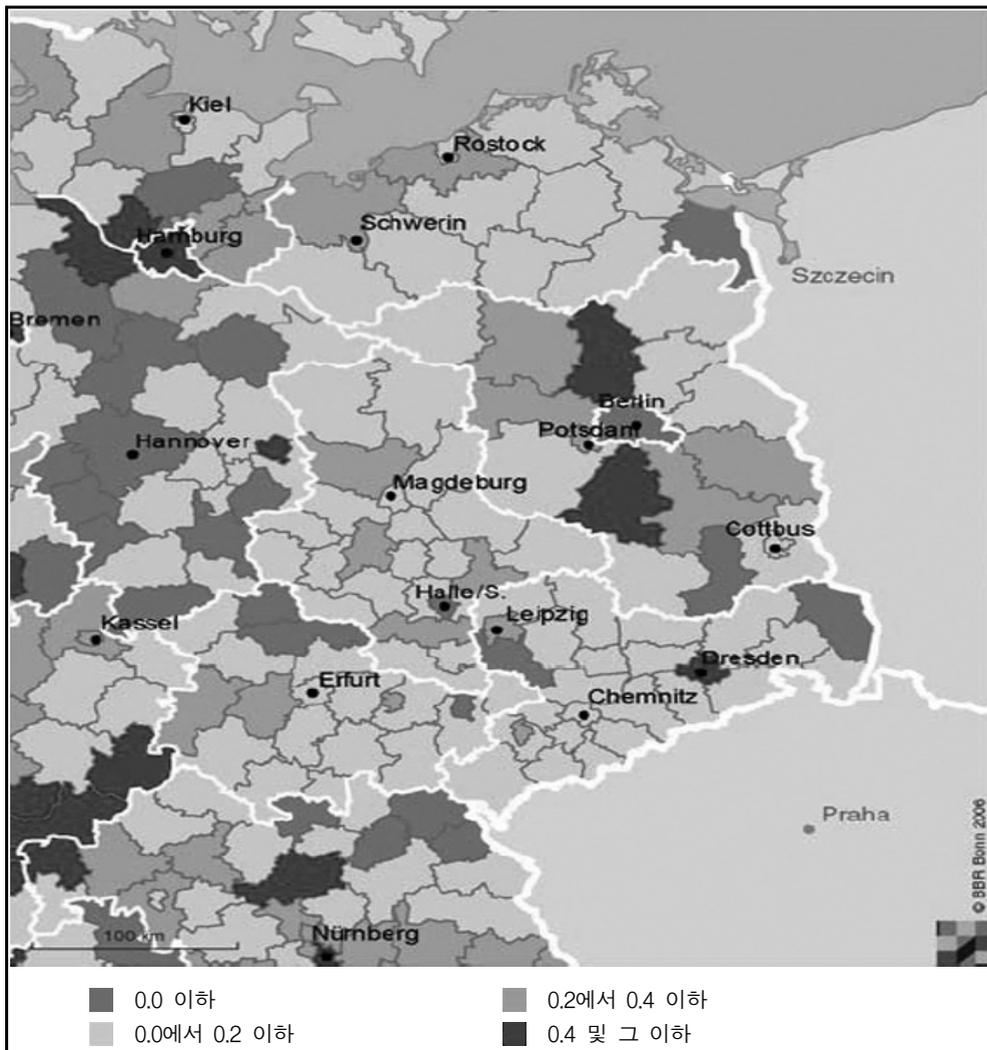
지역별 종합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sup>5</sup>

- 경제발전의 가능성이 질과 양의 측면에서 모두 지역마다 다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는 경제성장 종합기여도와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데서 확인할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구동독 전역에는 매우 특수한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자립적인

<sup>5</sup> 지역지표: 제5차 종합보고서,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의 연방건설청(BBR), 본(Bonn) 2004 국토계획 보고서 2005,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의 연방건설청(BBR), 본(Bonn) 2005.

-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지역의 잠재 구매력 저하, 인구 고령화의 가속, 고소득 전문 인력의 유출로 인해 구동독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다.

그림 1-1-3 핵심지역의 성장기여도 1994~2003년



- 1) 1994년부터 2003년까지의 종합 경제적 국내 총생산(GDP) 변화 중 지역의 국내 총생산(GDP) 누적비율
  - 2)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의 연방건설청(BBR) 본(Bonn) 2006 핵심지역: 2002.12.31기준.
- 출처: '지역의 국민경제 국민 총생산(GNP)' 연구소

지역별 성장기여도, 즉 1994~2003년 사이에 핵심지역의 GDP 증가율이 독일의 GDP 증가율에 기여한 정도를 보면 핵심지역 중 15%가 독일 전체 경제성장률의 50%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신연방주의 핵심지역은 드레스덴 시, 텔토우 프래밍, 오버하펠이다.

핵심지역인 바드 도버란, 하펠란트, 라이프치히 시, 다메-슈프레, 메르제부르크-켈푸르트, 아이제나흐/바르트부르크 행정구 및 프랑크푸르트/프랑크푸르트 안데어 오데르-슈프레 그리고 오레 행정구는 잠재적인 성장동력으로 볼 수 있다. 이 지역들의 GDP 성장률은 1994년부터 해마다 증가해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성장기여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간 불균형심화 현상은 **지역별 취업동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취업자의 수가 신연방주 전역에서 감소했는데, 외곽과 도심초입의 중간지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 반면 새로운 일자리는 도심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일자리와 인력 현황은 신구연방주에서 큰 격차를 보이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지역별 특수성에 기인한다. 그 틈새를 부분적으로는 원거리 통근자들이 채우고 있다. 구동독에서 통근자(50km 이상의 원거리 통근자)가 가장 많은 곳은 베를린이다. 그 주변으로 대도시 권역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중심지가 없는 주변지역에 주요 노동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신연방주의 막데부르크, 할레-라이프치히, 드레스덴, 에르푸르트, 켐니츠, 콧부스, 부분적으로 북부 중심지인 슈베린, 로스토크, 노이브란덴부르크 등이 이같은 도시권역에 속한다. 보통 구동독의 권역이 구서독보다 크고 중앙집약적이기 때문에 외곽지역으로부터의 원거리 통근자가 많은데 그 근본원인은 지방외곽지역에서 일자리가 줄기 때문이다.

한편 밀집도가 높아질수록 서비스업 종사자수도 증가한다. 이에 따라 도심밀집지역에서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가장 높다. 신연방주에서는 특히 드레스덴, 베를린, 라이프치히가 그렇다. “인적 자본의 확보” 측면에서 하펠란트-프래밍, 엘프탈 상부/오스테르츠 산맥, 중앙 메클렌부르크/로스토크가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자영업도 밀집지역에서 그 수가 가장 많다. 잠재력이 매우 낮은 지역은 알트마르크와 작센주 남서부이다. 이 지역은 “지식집약형, 기업친화적 서비스”와 “교육수준(고급능력)” 지표에서 독일 평균의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

## 5. 인구구조의 변화: 신연방주가 직면한 도전

신연방주 내 발전의 지역편차는 향후 인구변동에 의해 더욱 벌어질 것이다. 독일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구서독의 출산율은 약 30년째 인구치환 수준(현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생률)의 2/3에 불과하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신연방주도 1990년대 초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2001~2004년 사이 베를린 포함한 신연방주의 인구는 연평균 10만 명 가까이 줄고 있다.

신연방주의 인구감소 원인을 보면 구연방주로의 **이주**가 전체의 약 1/3를 차지한다. 현재 이러한 불균형 추세는 일단 감소했지만 (2002년 84,000명에서 2004년 53,000명으로 감소)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주자들의 연령 구조이다. 이주자 중 청년층(18~30세)의 비중은 지난 몇 년간 계속 증가하여 2004년 54%에 달했다. 연령대별 전체인구를 살펴보면 20~26세의 이주자가 4%로 가장 많고 49세 이상에서는 0.5%도 안 된다. 반면 신연방주는 외국인이 유입되는 일이 매우 드물고, 농촌에서는 거의 전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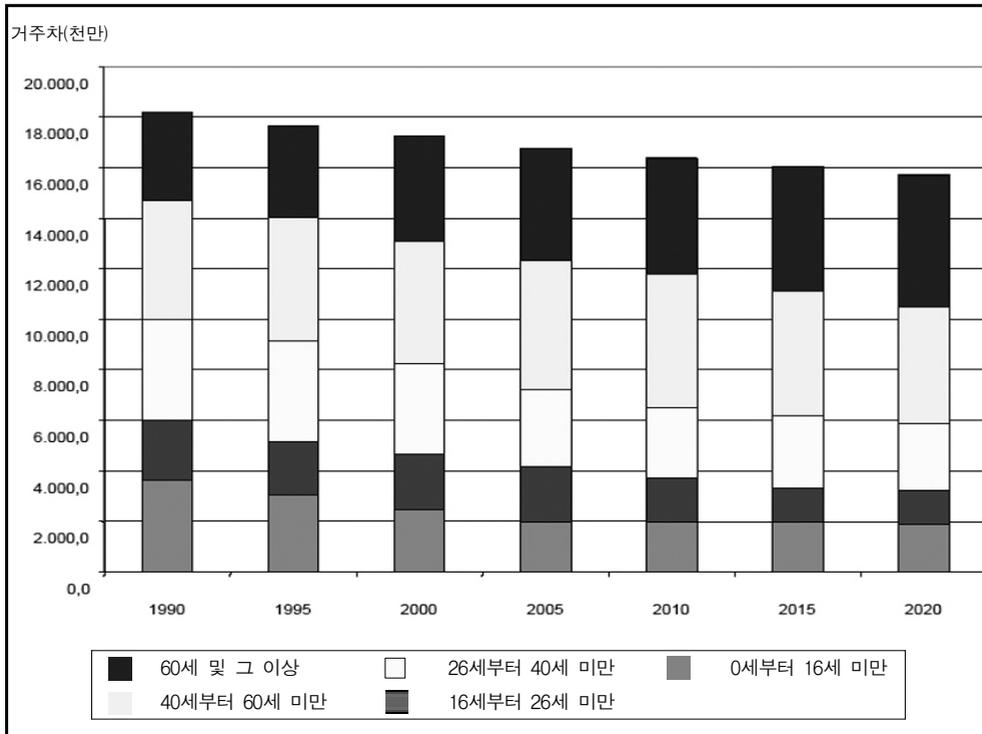
향후 신연방주는 구연방주보다 인구변동으로 인한 타격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의 연방건설청(BBR)이 작성한 **2020년까지의 미래예측**에 따르면 독일의 전체 인구수는 8,250만 명에서 8,210만 명으로 약 0.5% 감소하는 데 그칠 것이다. 그러나 신연방주는 2020년까지 7.7% 줄 것으로 보여 2002년 1,700만 명에서 2020년 1,57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신연방주의 인구감소세는 결정적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하기 때문이다. 출생자수보다 많은 사망자수는 2002년 59,000명에서 2020년 11만 명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자연 인구손실은 2020년 1,400만 명으로 누적되어 외국인 이주로도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외국인 이주자는 60만 명인데 비해 신연방주를 떠나는 인구는 50만 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외곽 지역에서는 인구감소폭이 평균보다 클 것이다. 우커마르크, 메클렌부르크 젠플라테, 알트마르크, 프리그니츠, 프래밍, 라우지츠 또는 튀링겐주 및 작센주 중부 산악지대를 비롯해 많은 지역에서 2020년까지 10% 이상의 인구손실이 예상된다.

신연방주에서는 이미 심각한 **인구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취학 전 아동수가 거의 반으로 줄었고 취학 아동수는 1/6, 청소년(20~26세) 수는 1/4 가

까이 감소했다.

그림 1-1-4 신연방주 인구의 연령 구조



출처: 1990~2000년 통계청.

2005~2020년 2020년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의 연방건설청(BBR) 국토계획 미래 예측.

이 추세는 앞으로 구연방주에서도 나타나겠지만 신연방주에 비해 강도와 속도는 낮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20년까지 75세 이상 인구는 신연방주에서 66%, 구연방주에서는 40% 가까이 증가할 것이다. 16~26세에서는 신연방주에서는 40%로 떨어지는데 비해 구연방주에서는 완만하게 감소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신연방주에서는 40세 이하의 비중이 1990~2000년 사이 55%에서 48%로 감소한데 이어 2020년까지는 38%가 될 것이다.

인구고령화와 이주현상이 맞물려 결과적으로 2020년 **경제활동 가능 인구수**가 신연방주에서는 16% 줄고 구연방주에서는 5% 가까이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지금처럼 유

지될 전망이다. 신연방주 경제의 핵심 성장부문은 다행히 인구감소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변화로 젊은층이 감소해 고령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신연방주 내 4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수의 절대적인 증가세는 2020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젊은 구직자 층에서도 아직은 노동공급 과잉을 겪고 있다. 그러나 구동독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인구유출로 인해 45세 이하의 경제활동인구 수가 2020년까지 2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독일의 기업들은 혁신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젊은 전문인력 유치에 나서고 있다. 노동시장·직업 연구소에 따르면 독일 내 기업 중 약 40%는 50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존 직원의 작업능력 향상과 기업의 혁신을 위한 대책이 그만큼 빨리, 절실히 필요하다. 기업 설립도 연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인구변화에 의한 영향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II

### 발전 및 개발정책의 전개

앞 장에서 신연방주의 발전과정에 주(州)마다 차이가 있음을 보았다. 특히 지역별 격차가 있다. 산업과 서비스, 교육과 연구기관이 집중된 인구밀집지역이 있는 반면 농촌지역도 있고, 인구유출이 심각한 외곽지역도 있다.

신연방주는 그 밖에도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경제의 글로벌화, 유럽 내의 자본유치 경쟁,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을 비롯하여 인구변화 문제 등이 그것이다.

염두에 둘 점은 신연방주가 여전히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산업입지로서 취약하며 (앞 장 참조) 그것이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변화와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동독재건계획 안에서 뚜렷한 목표에 따라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구동독 재건의 핵심과제는 네 가지로 정리된다.

#### · 성장 및 고용 강화

신연방주는 새로운 활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제한된 지원금을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효율적으로 투입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지역 성장잠재력의 합목적적 활용, 산업투자 촉진, 클러스터 육성, 행정절차 간소화, 기획절차의 신속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 · 혁신력 강화

지속적인 번영과 발전의 기회, 사회 안전망은 끊임없이 새로이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노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특히 기업이 연구와 혁신을 거듭해 세계와 경쟁해야 할 것이다.

### · 지역사회 통합

지역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만이 구동독의 재건과정에서 폭넓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장지역과 문제지역 간의 긴밀한 교류가 필요하다. 구동독의 도시지역에는 주거, 여가, 근로, 교육, 학술, 문화, 통신 등이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다. 이 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해당 지역이 성공적인 경제입지로 성장할 수 있는지, 또한 몇 년 내로 생산적인 지식·기술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지 결정된다.

### · 유럽과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

이미 신연방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1/3 가까이가 해외시장에 판매되고 있다. 현재 신연방주 제품의 가장 중요한 시장은 유럽연합과 북미 순이다. 신연방주의 판매시장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동유럽과 아시아와의 투자관계도 성장할 전망이다. 따라서 구동독 재건과정 전체를 관통하는 목표는 상품과 서비스, 투자지로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 ○ 탄력적 합목적적 지원

현재 신연방주가 직면한 여러 도전을 극복하고 지역별 격차를 줄이려면 구동독 재건전략을 재고해 보아야 한다. 즉 탄력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계속하여 구동독에 남아있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극복하는 한편, 재건사업을 지역별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특성화에 기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함께 구동독재건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지원은 탄력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

다. “지역경제구조개선(GA)”을 위한 공동과제, “농업구조 및 해안보호 개선(GAK)” 등의 사업이나 중산층 지원대책, 구조기금과 농촌발전을 위한 유럽연합 지원 등은 모든 지역에서 제공되며,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도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한다. 제조업과 생산 관련 서비스업의 초기투자과 확장투자를 지원하는 투자보조금도 이 같은 맥락에서 주어진다.

동시에 투자장려, 혁신지원, 인프라구축 등 다양한 지원장치를 통해 강점과 잠재력을 키우고자 한다. 예를 들면 주정부 차원에서 “지역경제구조개선”을 위한 공동과제의 일환인 투자 보조금을 성장가능성이 특히 높은 지역과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지원의 효율성이 현저히 높아져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게 된다. 클러스터 형성, 산업의 가치사슬 창조, 지역 성장잠재력의 개선을 위한 정책 등이 모두 이에 포함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양한 정책(경제지원정책, 교육정책, 연구정책, 노동시장정책 등)이 통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별, 분야별 핵심부문에 지원하는 각종 지원대책의 확대 또한 중요하다. “지역경제구조개선”을 위한 공동과제는 2005년 초부터 협력네트워크 및 클러스터경영계획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기존의 지역별, 분야별 잠재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그 외 경제주체, 기관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성장가능성이 큰 핵심분야를 선정하는 과정에 재계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산업분야별 회의가 열리기 시작했으며 올해와 내년에도 개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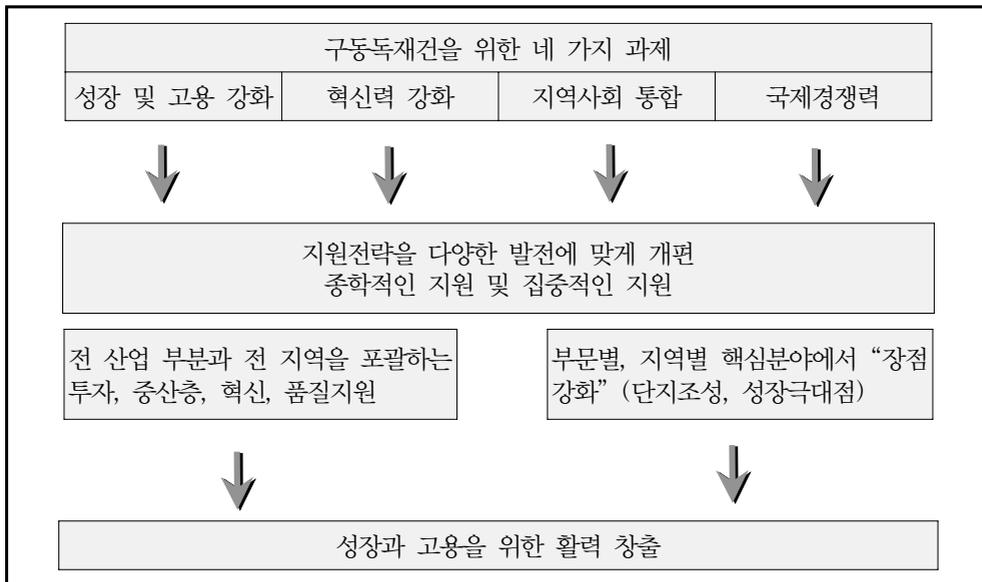
성장과 고용의 활력은 지역의 성장잠재요소에 보다 집중함으로써 얻기도 한다. 예컨대 구동독의 여러 지역에 학술 및 산업 핵심기관이 설립되었는데 그 결과 주변에 교통망이 구축되고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등 소프트 요소를 갖추게 되었다. 인근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핵심도시와 주변지역, 그리고 “장점 강화 - 특성 개발” 전략에 포함시킬 수 있는 농촌지역 간에 역할분담이 이뤄지면서 이 지역들은 점차 발전해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지역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분야에 따라 내용별, 지역별, 상황별 핵심안이 결정되고 그에 맞는 지원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각 지역은 “미래의 활동주체”로서 더욱 자립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도시지역이 발전하느냐 못 하느냐는 교통망의 유지와 확대에 좌우된다. 교

통망이 잘 구축되어야 주변지역과 농촌으로까지 파급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통망이 취약한 곳을 찾아내 개선하고 유럽연합 회원국가와의 교통망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도시지역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다양성을 제공하며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다. 도시지역은 중요한 혁신과 경쟁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곳이다. 신연방주의 곳곳에는 여러 대학들로 구성된 긴밀한 네트워크가 지식생산과 경제발전을 위한 항구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1-11-1 지원전략의 전개



○ 재정기반: 재정정책적인 과제

신연방주를 위한 지원정책의 재정적인 토대는 연대협약II이다. 연대협약II는 2004년 종료된 제1차 연대협약을 잇고 있다. 연대협약II에 따라 신연방주는 2019년까지 기간 별로 차감되는 형태로 총 1,050억 유로의 특별 연방할당금(Korb I)을 지원받는다. 이로써 신연방주는 구동독재진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되었다. 신연방주는 규정에 따라 이 재원을 분단으로 인해 낙후되었던 인프라구조를 개선하고 지역별 재정격차를

줄이는 데 사용하고 매년 발전보고서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그 밖에 연방정부는 같은 기간에 대해 총 510억 유로를 지원하는 대대적인 지원책(Korb II)을 채택했다. 이 지원금은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고, 구동독의 잔재를 제거하며 분단으로 야기된 구조적 약점을 보완하는 정책과 시행프로그램의 형태로 사용될 것이다.

지난 6월 연방정부와 신연방주는 연정협약에 계획된 대로 Korb I과 연례보고서 작성에 합의했다. 그 결과 재원의 사용기준은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신연방주는 이미 착수한 재건사업은 투자유치를 위해 계속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연방주의 각 지역은 향후 몇 년 간 큰 재정난을 겪게 될 텐데, 이는 포괄적인 예산 안정화로만 극복할 수 있다.

- 현재는 재정형편이 좋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Korb I이 2006년부터 감소하고 2019년 21억 유로를 끝으로 종료하기 때문이다.
- 게다가 머지않아 인구변화가 도래할 것이므로 지출제한이 필요한데 -인구고령화로 인해서라도-, 이는 지출구조의 조정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 신연방주의 부채도 지난 몇 년 간 크게 증가했다(1995년 470억 유로에서 2005년 890억 유로로 증가). 커져가는 금리부담이 종래의 성과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지 않으려면 순부채액을 지속적으로 낮춰야 한다.

현재의 지출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안정을 이룰 여지는 있다. 특히 신연방주에서 이미 진행 중인 인건비 감소, 행정절차 개편 등을 계속해야 한다.

연정협약에서 계획된 대로 연방정부는 Korb II의 관련 정책분야를 결정하는 동시에 신연방주가 계획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연방정부는 2006년부터 2005년에 대한 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Korb II의 재원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 1. 경제력 및 고용 강화

정부지원의 목적은 신연방주가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자립적인 경제로 이행하여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폭 넓은 토대 위에서 더 큰 성장과 고용 창출을 노리고 있다. 이 목표를 이루려면 가장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에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지원금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더욱 성장 가능성이 있고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에 지원금이 집중될 것이다.

지난 몇 년 간 신연방주의 가장 중요한 성장원동력 중 하나는 외국자본의 투자였다. 따라서 전문적인 산업입지 마케팅과 함께 독일투자청(Invest in Germany)과 산업투자위원회(Industrial Investment Council)을 하나의 강력한 기관으로 통합해 외국투자자 유치에 적극 나서는 데 주력할 것이다.

### 가. 클러스터 및 핵심분야

지난 수 년 간 몇몇 성장·혁신분야가 생겨났다. 메르제부르크/할레/비터펠트의 화학 산업, 예나의 옵토틀로닉(Optotronic), 드레스덴의 마이크로전자, 아이제나흐/츠비кау/라이프치히/할레의 자동차생산, 베를린/브란덴부르크의 항공우주산업, 베를린과 그라이프스발트의 의학 및 생명공학, 각 해안의 조선업뿐 아니라 기존의 제지, 목재, 원자재 산업지역과 농촌에도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태양열산업과 같은 핵심분야가 생겨났다.

이런 핵심분야와 유망종목을 살펴보고 지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여러 분야를 결정할 수 있다. 핵심분야는 시장을 통해 결정되는데, 이 때 무엇보다도 기업의 관심사와 연방주마다의 우선분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신연방주에서는 아직 지식 집약적이고 중개적 성격을 갖는 범지역적 서비스가 부족하지만 서비스부문은 날로 커가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아직은 제대로 접목되어 있지 않다. 이는 구동독의 많은 기업들이 특성상 단순제조만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순제조업에서는 그다지 서비스의 격차가 크지 않지만 고부가가치 업무(연구/개발, 경영, 내부 상담)에서는 구서독지역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제조업-서비스 클러스터를 강화하여 구동독 지역의 지식집약적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지원대책의 방향을 재설정한 브란덴부르크 주를 살펴보자. 브란덴부르크 주는 16개의 유망종목을 선정했다. 그리고 산업분야와 입지와는 상관없는 기초지원, 산업분야와 입지에 따른 잠재력육성 안을 구분함으로써 농촌지역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목표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지원을 실시할 수 있었다.

#### ○ 동독의 산업분야 회의: 경제와 정계 간의 대화

2005년 초부터 연방정부는 재계와 신연방주와 함께 구동독 산업분야별·주제별 회의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이 회의는 신연방주에 이미 생성된 지역별, 분야별 핵심산업을 공고히 하고 확대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개최된 회의에서는 그간의 분야별 성과와 전망이 소개되었다. 또 앞으로 해결할 과제도 다뤄졌으며 새로운 정책이 소개되고 일부 결정되기도 했다. 분야별 회의를 잇는 후속회의도 진행돼 항공우주산업과 보건산업분야 회의가 열렸다. 그 밖에도 클러스터 형성, 네트워크 구축 등이 전국적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확대되었다. 예컨대 신연방주 자동차산업회의는 전국적 차원의 네트워크인 “동독 자동차 클러스터(ACOD, Automotive Cluster Ostdeutschland)” 구축에 기여했다.

이런 활동들은 2005년 초부터 클러스터경영 지원장치를 갖추기 시작한 GA 사업을 통해 지원받는다.<sup>6</sup> 산업분야 회의는 2006년에도 이어지며 주제별 회의를 통해 내용적으로 보완된다.

<sup>6</sup> p. 49, ‘(1) 공동과제 “지역경제구조개선(GA)”’ 참조.

표 1-11-1 이미 개최되었거나 개최가 예정된 신연방주 산업분야 회의

회의	일정	장소
<i>현재까지 개최된 회의</i>		
혁신회의	2005년 3월 31일	베를린
관광회의	2005년 5월 9일	바이마르
자동차산업 및 자동차부품산업 회의	2005년 7월 11일~12일	드레스덴
항공우주산업회의	2005년 9월 6일	콧부스
보건산업회의	2005년 12월 7~8일	로스토크-바르네민데
인프라구조회의	2006년 9월 12일	베를린
<i>후속회의</i>		
항공우주산업의 날	2006년 5월 15일	빌다우
보건산업	2006년 7월 6~7일	로스토크-바르네민데
<i>예정</i>		
미래를 위한 식품산업 구동독 기업재정회의	2006년 10월 11~12일 2007년 초	막테부르크 베를린

2006년 9월 12일에 건설교통부와 베를린 주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동독 인프라 회의”에서는 집중적인 인프라구조정책이 다른 산업입지요소와 연계될 때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기존의 인프라구조는 기업의 입주와 경제활동의 확대와 보충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자산”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인프라는 경제 발전에 가장 기여할 만한 곳에 구축되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 나. 투자자유치 강화

신연방주의 산업입지요건을 보다 강력하게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유치노력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2007년 1월 1일 독일투자청과 산업투자위원회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2007년 연방정부 예산안에 따라 구동독 투자자유치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독일은 산업입지로서 외국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곳이다. 이는 컨설팅 회사인 에른스트 & 영(2005)이 최근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설문에 응한 기업들은 독일의 16개의 지역 중 12개 지역을 유럽 내 1, 2위의 산업입지로 꼽았다. 구동독지역도 이에 포함되었다. [표 1-Ⅱ-2]는 신연방주 내 외국자본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표 1-Ⅱ-2 1990년 이후 누적된 신연방주 내의 외국자본

(일부 선별, 단위: 100만 유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베를린	
Eurowasser Suez Intercont.	461	Sony Deutschland	770
Recycling Corp.	410	TotalFinaElf	551
Kvaner Warnow Yard	256	Gillette Deutschland GmbH	268
브란덴부르크		작센안할트	
DaimlerChrysler	370	Dow Chemical Co.	4,400
Campina	273	TotalFinalElf	2,610
E-Bay	273	Mercer International	1,000
튀링엔		작센	
General Motors	512	AMD	4,600
Mercer International Inc.	266	Infineon Technologies	1,023
Allied Signal	100	Motorola	767

출처: IIC Economics Overviews 2006.

이 같은 대규모 투자 외에도 신연방주에서는 다양한 소규모 투자들이 이뤄졌다. 국내외 기업의 투자는 특히 제조업분야의 일부 종목에서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와 구연방주를 앞지르는 성과를 낳았다. 게다가 외국기업의 투자로 신연방주에 평균 이상의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 노동시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구동독이 산업입지로서 갖는 장점은 여러 가지이다. 우선은 숙련된 근로자가 많다. 또 근로시간이 탄력적이다.

여기에 지역의 혁신능력을 들 수 있다. 신연방주 지역의 각종 연구·개발시설은 오늘날 지식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입지 요건이다. 특히 최첨단기술분야에서는 생산지와 연구시설의 근접성은 큰 장점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수년간 신연방주에는 지역마다 수준 높은 전문대학교와 연구기관이 설립되었다. 학술연구기관들은 연구부

문이 취약한 신연방주 경제를 보완하고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신연방주 기업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한다. 베를린 외에도 드레스덴, 라이프치히, 쾰니츠와 할레가 평균보다 많은 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연구·개발기관은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데 있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유지하는 파급효과를 낳는다.<sup>7</sup>

우수한 인프라구조 역시 투자유치에 중요한 입지요건이다. 통일 이후 신연방주의 인프라구조는 크게 개선되어 같은 유럽연합 회원국인 중동부 유럽 국가에 비해 산업입지로서 훨씬 유리하다. 교통 인프라와 통신기술 모두 잘 갖춰져 있다. 특히 신연방주의 고속도로망은 생산입지와 접근성을 높여 동유럽의 경쟁국에 비해 유리하다. 폴란드와 체코의 전체 고속도로 길이가 각각 483km, 518km인데 비해 브란덴부르크 주 하나만 해도 790km에 달한다.<sup>8</sup> 전화와 초고속인터넷(DSL) 보급에 있어서도 신연방주는 이웃 동유럽 국가에 비해 우위에 있다. 게다가 독일의 통신요금은 유럽 내에서도 매우 저렴하다. 이런 바탕 위에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주는 현대적인 콜센터에서부터 우수한 소프트웨어개발업체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우수한 인프라 외에 신연방주의 저렴한 지가도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다. 구연방주의 평균 지가가 평방미터당 138유로인데 비해 신연방주는 53유로에 불과하다. 가장 저렴한 곳은 작센-안할트 주로 평방미터당 평균 39유로이다.<sup>9</sup>

신연방주의 인건비는 얼핏 보아 유럽연합의 신규 회원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듯 하지만 서유럽국가와 비교해서는 하위 30% 수준이다. 구연방주 지역의 평균 시간당 임금이 27.87유로인데 비해 신연방주는 17.37유로로 구연방주보다 약 38% 정도 낮다. 독일경제연구소에서 최근 발표한 세계인건비 비교 조사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sup>10</sup> 반면 중동부유럽 국가의 평균 임금수준은 신연방주의 1/3에서 1/4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나라들도 외국기업의 임금은 현지기업에 비해 훨씬 높고 임금이 신연방주의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 차이는 어느 정도 상쇄된다. 또 독일경제연구소의 조사는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만을 조사했을 뿐 사무직은 제외되었다. 그

<sup>7</sup> p. 71, '1. 산학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력 강화' 참조.

<sup>8</sup> p. 65, '3. 산업인지 요건으로서의 인프라' 참조.

<sup>9</sup> 독일경제연구소: 32호, 2006년 5월 4일.

<sup>10</sup> IW-Trends, 33호, 3/2006권 참조.

리고 근로자 숙련도와 임금체계가 나라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조사결과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독일 근로자의 수준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편이라 임금도 높은 것이 당연하다. 반면 사무직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전체 인건비(생산직과 사무직)를 살펴보면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게다가 동유럽 경쟁국들에 비해 훨씬 높은 생산성을 감안하면 신연방주가 경쟁에서 뒤질 이유가 전혀 없다.

투자결정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세금이다. 독일은 지난 수년 간 세제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정부는 법인세를 25%로 줄임으로써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해왔다. 또한 2008년에 발효될 기업세 개편안을 통해 기업의 세제환경이 재차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연방주 기업에는 매출이 두 배가 될 때까지 세금을 유예해주는 이른바 1차과세(합의된 매출금액에 따라 판매세를 산출)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 2.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위한 결단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오늘날 사회전반에 걸친 혁신은 국가의 성장과 부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신연방주는 다음 두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고자 목표하고 있다. 기업의 연구 및 혁신, 지역 학문의 계발이 바로 그것이다.

구동독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이 발달했다. 높은 혁신 잠재력을 바탕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성장률은 과거 몇 년 간 독일 전체의 평균성장률을 꾸준히 웃돌고 있다. 중소 혁신기업은 앞으로도 구동독 경제의 근간을 이룰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기술집약적 기업의 수를 늘리고 그 역량을 신장시켜 낙후된 경제력의 격차를 메우는 것이 과제이다.

신연방주의 기업들이 그간 거둔 성과 뒤에는 중앙정부의 혁신정책이 있었다. 중앙정부의 혁신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기업 연구역량 강화
- 산학협동
- 혁신기업과 생계형창업 육성, 자본시장진입 지원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일련의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업 지역”사업(산학협동 클러스터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장려정책<sup>11</sup>,과 혁신적 성장동력을 위한 R&D 지원사업(INNO-WATT<sup>12</sup>)이 그것이다. 60억 유로의 정부예산이 배정된 연구개발 지원사업 중 특히 INNO-WATT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 이로써 신생기업과 고속성장기업의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지원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산업기초연구”라는 새로운 사업으로 외부 공익 연구기관의 기초연구를 장려해 기관들의 연구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그 밖에도 “기업 지역” 혁신안이 “이노프로필(InnoProfile)”로 확대돼 지원받는다. 총 1억 5천만 유로가 할당된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에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춰 대학과 연구기관의 젊은 연구자를 양성하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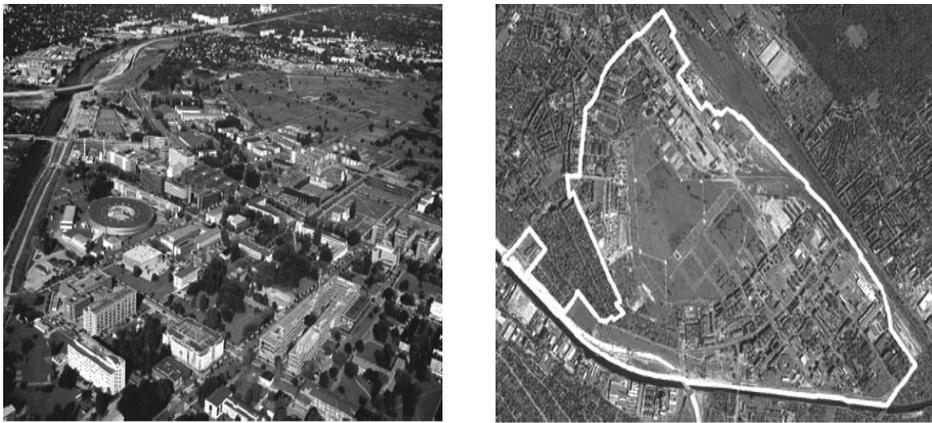
정부의 이 같은 혁신정책은 무엇보다 **지역성장동력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혁신지원”에는 구동독 재건이라는 큰 과제가 자리한다. 지난 수년 간의 연구 경험으로 보아 정부지원이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면 중앙과 지방간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sup>11</sup> p. 73, ‘다. 지역의 역량 강화: 지역 기업’ 참조.

<sup>12</sup> p. 71, ‘가. 기업의 연구 지원’ 참조.

그림 1-11-2 베를린에 위치한 아들러스호프(Adlershof) 과학기술단지



베를린 아들러스호프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 내 가장 성공적인 첨단기술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이다. 1991년 4.2평방킬로미터 대지 위에 세워진 이 산학협동 미디어 단지는 1만 2천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현재 이곳의 401개 하이테크 기업에는 3,97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고 약 1,450명(과학자 795명)이 근무하는 12개 대학 외 연구기관이 있다. 이들 기업과 기관은 주로 정보/미디어, 사진/광학, 재료/마이크로시스템, 환경/바이오/에너지 총 네 분야를 연구, 개발, 공급하고 있다.

그 밖에도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최신 전문센터들도 들어서 있다. 이 센터들은 교류의 장이 될 뿐 아니라 수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 과학기술단지에는 베를린 훔볼트대학의 자연과학대도 들어서 있다. 전산, 수학, 화학, 물리, 지리, 심리학과에서 약 6,300명의 학생이 수학 중이고 130명의 교수와 8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과학기술단지 바로 옆에는 베를린의 124개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는 최고의 미디어단지가 자리하고 있다.

출처: WISTA 매니지먼트.

나아가 학문적 연구성과를 경제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혁신과정의 전반에 걸친 지원계획이 필요하다. 이에 “경제가 과학을 만나다”라는 사업을 시작해 2006년부터 연구소와 기업 간 지속적인 협력을 장려할 계획이다.

한 지역의 성장은 연구기관과 혁신적인 기업이 밀집된 곳에서 뚜렷이 나타나는데 그 단적인 예가 바로 베를린 남부에 위치한 아들러스호프 과학기술단지이다.

### 3. 지역적, 사회적 결속력 장려

#### 가. 성장과 책임

국제적인 경제도시, 핵심산업과 클러스터 등 국가적, 지역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지역적, 사회적 결속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즉 성장지역과 주변지역 간의 긴밀한 협력을 비롯해, 지역의 자립적 발전 잠재력을 키우는 일이다. 지역적, 범지역적 책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핵심지역과 주변지역 간 기존의 파트너십을 확대·상설화하는 한편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그 목적은 대규모 경제권의 상호 의존성, 상호 보완성이 점차 커지는 추세에서 공고한 네트워크, 범지역적 성장 유대관계, 연대적 협력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의미 있는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시에 성장지역의 주변지역에 지속적인 존립을 보장하는 공동의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더불어 중앙과 지방, 기업과 대학, 시민사회 간 광범위하고도 심도 있는 협력의 문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도 역할을 다할 것이다. 연방정부는 도시개발의 일환으로 구동독의 도시재개발을 계속해 성장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그 효과가 주변지역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다. 또 구동독의 도로와 철도를 정비해 성장지역과 주변지역의 연결성, 또 구서독지역과의 접근성도 높일 것이다. 통독 이후 최대의 교통망 구축사업이 이미 상당부분 완료된 상태이다. 도로는 83%가 완성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도 여전히 미흡한 부분을 손보는데 집중할 것이다.

#### 나. 시민 참여

현재 신연방주에는 인구가 크게 감소하는 지역들이 있다. 이런 곳은 공공 존립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나아가 미래의 삶을 어떻게 보장받고 일어나갈 것인가 하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생활, 연대공동체 내에서의 새로운 역할 분담, 특히 **시민사회의 참여**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사업모델(“농촌·외곽지역을 위한 변화대책”, “지역의 활성화”<sup>13</sup>)를 내놓았다. 이 사업은 특히 의료, 근거리 대중교통, 학교와 직업교육, 시설

과 서비스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정책결정과정, 행정제도, 시민참여가 지역 차원으로 더욱 파고들어 새로운 형태의 지자체 간 협력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에 연방건교부는 2005년 “지자체 간 협력” 대회를 출범시켰다.

이러한 구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책임공동체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지역사회에 확립되어야 한다. 지역균형 외에도 지역의 경쟁력과 성장을 증진하려면 강점을 강화하는 전략, 즉 성장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는 성장지역과 비성장지역 간 연대를 맺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간 협력과 특히 시민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이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연방주에서 사회적 참여, 특히 청소년들의 참여가 과거 몇 년 사이 현저히 증가했다. 1999년에만 해도 28%에 머물렀던 시민활동 참여율이 2004년에는 약 31%로 늘어났다. 구동독지역의 다양한 단체와 조직의 저변이 확대된 것이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구연방주에 비해 신연방주의 시민단체는 여전히 정부지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지원 대상 기관에는 자원봉사단체, 노인기관, 자조기관, 시민재단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은 지역 차원에서 시민운동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역 네트워크의 중심역할을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기관을 위해 자문이나 재교육을 제공하는 연방 자원봉사중개소의 실무단과 국가상조와 같은 상부조직을 지원하고 있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자체, 공익단체, 교회, 기업, 노동조합이 함께 만들어가는 전국시민네트워크는 시민운동을 범지역적으로 연계하고 고무시키는 중요한 근간이 된다.

자원봉사 및 공동체 봉사의 해(FSJ)와 자원 환경생태 봉사의 해(FÖJ)에 참여하려는 수요는 과거 10년 간 크게 증가했다. 이는 신연방주의 청소년들에게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제공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학업이나 취업이나를 두고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은 의미 있는 일을 해봄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쌓고, 자기를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시민참여를 배우고 이를 실천해나간다. 이에 연방정부는 아동·청소년 예산을 들여 이러한 활동이 교육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방향을 잡는다.

<sup>13</sup> p. 92, ‘나. 농업 및 농촌지역 지원대책’ 참조.

#### 4. 국제적, 범유럽적 협력

신연방주는 경제적으로 국제 경쟁에 처해 있다. 따라서 기업 경쟁력의 개선은 구동독 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신연방주의 수출은 지난 수년 간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신연방주의 기업경쟁력 향상을 보여준다. 신연방주는 2004년 약 11%, 2005년 약 10% 수출성장을 기록했다. 제조업 부문의 수출은 2006년 1분기에 29.4%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구연방주 기업과의 수출 격차는 43.9%로 여전히 크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대외경제 촉진의 일환으로, 특히 구동독 기업을 위한 특별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구동독기업의 해외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 구동독 수출물량의 절반이 유럽연합 15개 구회원국으로 갔다. 이들 국가로의 수출증가율은 8.5%로 이는 평균보다 낮은 수치이다. 이와는 달리 유럽연합 신규회원국에 대한 수출증가율은 19%를 웃돌았다. 특히 폴란드로의 수출증가율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35% 가까이로, 구동독 수출의 원동력임을 입증했다. 유럽연합 신규회원국에서 신연방주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14.3%로 구연방주 기업(8.2%)보다 월등히 높다. 이로써 구동독 기업과 동유럽 간 경제 네트워크는 바람직하게 발전해가고 있다.

##### 가. 유럽에서의 기회

구동독은 지난 수년 간 경쟁력을 갖춘 유럽의 경제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구동독의 미래는 점차 확대되는 유럽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데 달려있다고 하겠다. 특히 폴란드, 체코와 같은 접경 국가에서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간 협력 외에도 지역발전에 힘쓰고 있는 시군구 지자체 간 협력이 요구된다. 오늘날 한 지역이 경제입지로서 성장하느냐의 문제는 더 이상 지리적 위치나 인프라 설비, 경제구조에만 달려있지 않다. 오히려 유럽 내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공동의 정치적 목표를 지향하는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수십년 간 유럽의 경제적 통합과 단절되어 있던 구동독이나 유럽연합의 신규회원국은 더욱 이러한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연방정부는 다국적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인터렉 프로그램(INTERREG III B)을 도입했다. 예산지원 기간(2000~2006년) 동안 신연방주는 발트해지역, 중동

및 남동 유럽지역의 다국적 협력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신연방주의 시, 지자체, 기관은 범유럽 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여러 면에서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 외에도 입지홍보, 경험 획득, 네트워크를 통한 소득이 있다. 프로젝트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데 경제협력, 관광촉진, 문화유산의 활용, 홍수예방, 군축, 바이오에너지 획득, 자원관리, 교통, 도시개발과 재건축, 주거지 현대화 등이 있다.

인접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은 해당 국경지역을 넘어 파급효과를 낳는다. 구동독, 폴란드, 체코는 파트너를 이루어 이미 다양한 다국적 프로젝트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나. 유럽의 결속과 리스본 협약

1991년 이래 유럽연합은 구조조정기금으로 구동독의 경제 재건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의 목표는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좁히고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다. 구동독의 경제력은 전 유럽의 수준과 비교해 여전히 평균 이하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구동독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이런 격차를 줄이는데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게 된다.<sup>14</sup> 유럽연합은 리스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 같은 결속정책을 강력히 실행할 것이다.

유럽연합은 기술발전의 결과, 직면하게 되는 세계화, 사회의 노령화와 같은 시대적 도전에 사회통합, 경제부흥, 경쟁력강화 등 새로운 전략으로 맞서고자 한다. 이에 회원국들은 상호 합의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각 국가차원에서 개혁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적 도전 외에도 독일 분단의 잔재를 극복하고 나아가 경제적, 사회적 통일을 완수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것이 바로 독일이 국가 개혁 프로그램 가운데 구동독 재건에 높은 비중을 부여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연방정부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국가개혁에 관한 2006년 성과보고서에는 구동독 재건 대책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정부의 광범

<sup>14</sup> p. 53, '(3) 유럽의 인프라 촉진' 참조.

위하고 집중적인 장려정책을 비롯해 산업기반 확대(예: 2007년 투자 보조법), 산학협동, 실업해결, 구동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구동독 재건은 성장과 고용을 목표로 하는 유럽의 “리스본 협약”을 실현하려는 독일 정부의 노력이라 하겠다.

# III

## 내적 통일

국가의 내적 통일을 이루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로 정부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한다. 독일의 기본법에 따라 국가는 전 국민의 균등한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 현재 동서 간 격차가 여전히 크긴 하나 상당한 진전도 이뤄졌다. 구동독의 가처분소득은 구서독의 82%까지 올라갔다. 구동독의 젊은이, 특히 1990년 이후 출생한 청소년 세대의 소비패턴과 인생관은 구서독 젊은이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일자리와 재교육 기회에 있어 구동독은 구서독보다 크게 불리하다.<sup>15</sup>

그러나 동서의 평균적인 발전수준을 비교해서는 안 되며 독일 전 지역의 생활수준 격차가 오히려 커지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전 장에서 기술한 부문별, 지역별 발전 현황에서 보았듯 신연방주 내 지역별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이다. 이에 신연방주의 전 지역에서 삶의 질 향상과 기회의 균등을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숙고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때 기회와 더 큰 발전가능성은 차이로부터도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구동독의 도시와 인구 밀집지역에서 미래의 잠재력을 찾을 수 있다면,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구동독의 인구 밀집지역은 주변으로부터 유입되는 인구를 받아들이는 매력적인 정박지가 될 것이다.

---

<sup>15</sup> p. 12, '2. 노동시장과 직업훈련' 참조.

이 같은 인구 밀집지역은 구동독의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원의 집중을 통해 기회를 창출하는 한편, 지역 간 생활격차를 좁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지역의 장점과 잠재력의 강화, 도시와 주변지역의 협력, 농촌·외곽지역의 안정화와 그 잠재력의 육성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농촌·외곽지역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공의 존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민관협력,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간의 보다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 안전망을 시도해보아야 한다. 이때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경제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약점으로부터도 기회는 얻을 수 있다. 새로운 형태의 의료복지(예: 의료센터), 근거리 대중교통(콜버스), 거주지에 인접한 초등학교, 접근성이 좋은 고등교육기관 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중장기적으로는 서독의 대도시 주변지역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구동독의 혁신은 독일사회 전체에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열어 줄 것이다. 앞으로는 유연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며 이는 지역의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이다.

한편 독일의 내적 통일은 물질적인 의미만이 아니다. 사회적, 개인적 영역에서의 동반성장과 유대감이 있어야 한다. 다른 피부색이나 종교를 가진 사람도 껴안아야 한다. 따라서 극우주의와 외국인 혐오를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극우주의는 전 국가적인 문제이다. 특히 외국인을 겨냥한 극우파의 공격이 구동독지역에서 훨씬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언젠가 후버 대주교가 말한 것처럼 동독에는 “이방인(외국인)이 없는데도 이방인을 혐오하는 현상(2006년 5월 26일자 베를리너 차이퉁)”이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야 한다.

극우주의와 외국인 혐오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과 사법당국이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시민사회는 극우주의와 외국인 혐오의 사회적 원인을 규명하고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치는 사회적 제반조건을 안정(예: “사회 도시(Social City)” 프로그램)시키고 시민의식과 사회참여를 고양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구동독지역에는 지난 수년 간 인권을 침해하는 정치적 행위에 대응코자 수많은 네

트위크와 시민단체가 생겨났다. 정부는 앞으로도 극우주의와 폭력에 맞서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와 관용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들 단체를 정치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sup>16</sup> 1989년 동독에서의 평화적인 혁명과 그 뒤를 이은 독일통일은 당시 동독시민의 용기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1. 독일 사회주의통일당(SED) 독재의 규명

독일의 내적 통일을 위해서는 동서 간 교류를 통한 통합뿐 아니라, 사회주의 통일당(이하 SED) 독재와 구동독의 과거사 규명도 필요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SED 독재의 희생자에 대한 복권과 배상을 위해 형사적 복권법에 따라 2005년 말까지 6억 7,600만 유로를 출연, 보상금 지급과 기타 지원에 사용했다. 또한 근로 복권법에 따라 2,100만 유로를 지원했다.

“SED 독재 과거사규명 재단”을 통해 연방정부는 동독의 과거사와 독일의 분단이 가져온 결과를 규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구동독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동독은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한 먼 과거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SED 독재를 청산하는 문제는 동독만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연방 및 주정부 정치교육센터, 연방 및 주 위탁 슈타지문서 관리위원회, 라이프치히 현대사 포럼과 같은 단체들은 되도록 많은 젊은이가 독일의 아픈 현대사에 관심을 갖도록 각기 차별화된 정보와 교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SED 독재 과거사규명 재단은 지난 7년 간 독일의 분단과 소련점령기와 동독시절의 독재사의 문제를 다루는 전국 1,3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이를 위해 총 195백만 유로가 투입됐고, 그 중 1/5은 구서독에서 이뤄졌다.

연방/주 슈타지문서 관리위원회는 슈타지 문서관리법(StUG)에 의거해 슈타지의 문서를 개봉, 보관, 이용하여 슈타지의 활동에 관해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간행물, 강연, 행사 등을 통해 슈타지의 조직과 활동방식, 영향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슈타지 문서는 동독에 대한 기억의 일부이며, 과거를 미화하는 데 대한 방지의 수

<sup>16</sup> p. 102, ‘라. 사회복지도시’ 및 p. 108, ‘다. 청소년 정책’ 참조.

단으로 이용된다. 위원회는 슈타지 문서를 토대로 독일 역사상 두 번째로 등장한 독재 체제의 유산을 정리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에 1억 2백만 유로를 지원한다.

연방/주 슈타지문서 관리위원회 설립 이래 약 230만 건의 문서열람과 발행신청이 있었고, 신청건수가 2005년에만 8만 건에 달했다. 대부분은 희생자의 보상과 복권을 위한 신청이었다. 또 170만 건은 전직 슈타지 요원에 대한 검증 자료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신청건수가 높은 것은 본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함께 과거사 진실규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반영한다.

슈타지는 과거 서독에서도 활동을 하였을 뿐 아니라, 당사자 중 많은 수가 오늘날 구서독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슈타지 청산은 전 국가적 문제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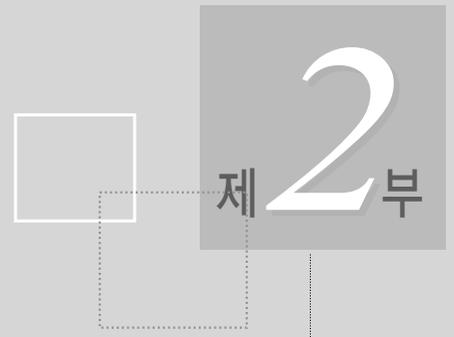
## 2. 연방 정치교육센터

연방 정치교육센터(BpB)는 과거 수십년 간 국민들에게 독일의 분단, 독일의 통일, 독일의 역사라는 복합적 테마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동독의 과거를 비판적 시각에서 논의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출판, 행사, 전시, 영화, 인터넷을 통하여 소련점령과 동독의 역사, 독일의 분단과 통일, SED의 독재체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들 정치교육센터는 SED와 슈타지 체제가 동독인의 일상에 미친 영향을 음악, 영화, 전시 등 현대적 매체를 통해 고찰함으로써 독일분단의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 이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정치교육센터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또 다른 주제는 동서독 전체가 당면했던 전후 역사 문제, 그리고 18, 19세기 유럽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는 민주주의 전통 등이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 분단의 역사를 기록한 값진 자료를 제공하고 학문적인 토론을 유도한다.

### 3. 독일 통일 시민상

지난 수년 간 신구연방주 시민들은 독일의 내적 통일을 위해 많은 시도를 했다. 정치교육센터는 이러한 값진 참여를 고무시키기 위해 4만 유로의 상금이 지급되는 독일 통일 시민상을 수여하고 있다. 2006년에도 창조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내적 통일에 기여한 개인이나 사업에 상이 수여될 것이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동서의 통합을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지 일반대중에 알리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아이디어로 독일의 내적 통일을 이뤄나가고 하나의 미래를 설계하도록 용기를 북돋는 것이 이 상의 목적이다.



동독재건 프로그램과 정책분야



# I

## 경제력과 고용 증대

### 1. 경제력과 고용 강화

#### 가. 지속적인 투자 장려

독일 통일 이후 지난 15년 간 구동독지역에는 광범위한 현대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온 국민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립적인 경제발전과 충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대는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장려할 것이다. 이에 필요한 재정은 주로 “지역경제구조개선(GA)”,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 유럽 구조기금에서 조달된다.

#### (1) 공동과제 “지역경제구조개선(GA)”

지역경제구조개선(이하 GA) 사업은 상업적 투자와 경제관련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GA 사업의 최대목표는 구동독지역에 경쟁력 있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절반씩을 각출해 투자 보조금을 지원한다.

연방정부는 GA 사업을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2006년 연방정부는 신연방

주와 베를린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현금 약 5억 8,700만 유로를 책정하였으며, 이는 이미 승인된 프로젝트 자금으로 쓰이게 된다. 그 밖에도 기타 지원사업에서 회수되는 자금 중 연방정부 몫은 GA 사업으로 재차 구동독에 지역에 투입된다. 이 방식으로 2005년 구동독지역은 약 3,000만 유로의 연방예산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연방 정부는 신연방주와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주체들이 신규 투자 계획을 세우도록 5억 300만 유로의 사용권한을 위임했다. 또한 신연방주는 투자 촉진을 위해 유럽연합의 지역개발기금(EFRE)을 사용할 수 있다.

[표 2-I-1]에 2005년 신연방주와 베를린의 투자계획과 지원의 규모가 나와 있다. 신연방주와 베를린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간 약 62억 유로를 지원받았다. 연방과 주에서 지원한 장려기금으로 투자액은 약 246억 유로에 달했다. 그리고 도소매업에서는 약 66,600개(여성의 일자리: 약 20,900개)의 추가적인 장기 일자리가 생겨나 총 187,600개(여성의 일자리: 약 53,700개)가 되었다.

표 2-I-1 2005년 신연방주에서의 공동과제 “지역경제구조개선(GA)”의 승인

도소매업					경제 관련 인프라		
계획의 수	투자규모 (백만 유로)	승인된 GA 사업자금* (백만 유로)	장려된 장기 일자리		계획의 수	총 지출 (백만 유로)	승인된 GA 사업자금* (백만 유로)
			보장된 일자리	추가 일자리			
1,910	5,481,30	1,090,85	53,337	24,387	340	706,47	513,10

\* 유럽연합의 지역개발기금(EFRE) 포함.

### ○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GA 사업분야

독일은 국가적으로 장려해야 할 대상지역을 지정했는데, 이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이뤄진다. 따라서 이는 GA 사업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이번 새로운 장려대상지역의 선정 시 유럽연합의 지원법을 근거로 지원규모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투자보조금의 규모 등이 결정되고 지급될 것이다.

2007~2013년 장려대상지역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신지원법 계획에 따라 정해

진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05년 말 결의한 “2007~2013년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 보조금 원칙”이 2007년 1월 1일자로 발효된다. 2006년 2월 20일, GA 사업을 위한 연방-주-기획위원회는 향후 GA 사업의 지원지역 선정과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만들었다. 이 결의안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 ○ 최대 지원율

마스트리히트 조약 제87.3a조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신연방주에 대한 지원금의 규모(최대 지원율)를 정해놓고 이를 전방위적으로 차별 없이 사용토록 하고 있다. 주정부는 지원금의 규모 내에서 지역별로 구체적인 중점분야를 설정해야 한다. 한편 유럽연합 15개국의 최대 지원율 기준은 충족시키나 25개국의 최대 지원율 기준에는 못 미치는(소위 “통계 효과에 해당하는 지역”) 할레, 라이프치히, 브란덴부르크 서남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 보조금 원칙”에 따라 2010년 후원 등급에 대한 강제적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2011년부터 지원금이 감소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독의 인프라 취약 지역이 제87.3c조에 따라 받는 지원금보다는 여전히 많다. 최초로 전국 단위로 시행된 장려대상지역 선정 시 신연방주에 최대의 지원금을 지급되도록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표 2-1-2**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신연방주와 베를린에 적용되는 최대 지원율

	2007~2013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지원 등급
<b>87.3a 지역</b>				
“일반” 87.3a 지역	30%	40%	50%	A
<b>소위 신연방주의 “통계 효과”지역</b>				
할레, 라이프치히, 브란덴부르크 서남부	30%	40%	50%	A <sup>1)</sup>
<b>베를린</b>				
87.3c 지역	15%	25%	35%	C
D 지역	-/-	7.5%	15%	D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소위 “통계효과지역”에 대해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2011년부터 20%(혹은 30%, 40%)로 감소할 가능성 있음.

### ○ 베를린 내 장려지역

베를린은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 보조금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유럽공동체 조약 제87.3c조 등급을 부여받을 전망이다. 또한 베를린 전체가 GA 사업지역이 될 것이다. 베를린은 사회적, 경제적 발전 정도와 성장 잠재력에 합당하게 87.3c 등급(GA 사업의 C 등급에 해당)을 부여 받는다. 다만 베를린의 일부 지역만은 이보다 낮은 D 등급을 받는다.

### ○ 지역 관리

인프라가 취약한 신연방주와 베를린지역에서 현재 32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들은 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활성화하고, 성장과 일자리를 촉진하기 위해 GA 사업의 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

프로젝트 사업자는 사업초기로부터 최대 3년 간 연간 20만 유로의 보조금을 GA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해당 시군도 자체적으로 20%를 부담해야 한다.

### ○ 협력 네트워크와 클러스터 관리

연방과 주는 협력 네트워크와 클러스터 관리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2005년 1월 1일부로 GA 지원사업을 확대했다. 이는 기업과 유사 경제기관 간의 지역 내외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다양한 주체들의 긴밀한 협력은 내재된 잠재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기업, 기관, 지역 주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발의 추진
- 기업 간 정보 네트워크 구성
- 기업과 연구기관 간 기술이전 강화
- 기업의 혁신과정에 외부지식 접목
- 기업 간 노하우 교환

협력 네트워크와 클러스터 관리를 위한 GA 사업은 사업 첫 해부터 최장 3년까지 계획별로 30만 유로를 지원한다. 대형사업은 50만 유로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동시에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파트너의 적절한 재정적 참여(자체자금 비율 최소 30%)가 필요하다. 신연방주와 베를린지역에서 현재 21개의 사업신청이 허가받은 상태이다.

## (2) 투자보조금

투자보조금 지원은 “지역경제구조개선(GA)”과 더불어 구동독의 투자촉진을 위한 주요수단이다. 따라서 정부는 2005년 11월 11일 연정협약에서 2006년 말 만료되는 2005년도 기업부문 투자보조금법의 후속 규정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2006년 7월 15일자 2007년도 투자촉진법에 따라 신연방주와 베를린 일부 지역에서의 기업투자 지원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금까지의 수준으로 지속된다. 다만 지원조건을 개정된 유럽연합 지침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지역산업 장려 차원에서 지원되는 투자보조금은 제조업, 생산관련 서비스업에 집중되고, 처음으로 숙박시설도 포함시켰다. 연간 지원금은 약 5억 8000만 유로에 이른다.

2007년도 투자 촉진법은 구동독의 지속적인 경제 재건에 중요하며 기업의 투자를 유인한다. 이 지원을 받는 지역은 기업투자 유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그 간 입지로서 부족했던 측면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 (3) 유럽의 인프라 촉진

1991년 이후 유럽연합은 인프라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구동독의 경제 재건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구조기금은 연방과 주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을 뒷받침한다. 2000~2006년도 지원기간 동안 독일은 총 약 330억 유로(2004년 기준)의 유럽연합 구조기금을 사용했다. 이 구조기금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머른, 작센, 작센 안할트, 튀링겐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지원 등급 분류 당시 구매력으로 환산한 1인당 GDP가 유럽연합 평균의 75% 이하에 머무른 신연방주는 현재 최고 등급인 제1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현재 동베를린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과도기 지원 자격을 획득했다. 2000~2006년까지 신연방주

는 총 약 220억 유로를 지원받았다. 또한 신구연방주 협력사업에 약 18억 유로가 책정되어 있다.

유럽연합 지원금은 상공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촉진, 인프라 조성, 환경 보호 및 개선, 고용시장 개선, 남녀의 기회균등, 농어업 발전에 사용된다.

### ○ 유럽연합의 구조기금 전망

유럽연합과 독일은 이미 상당기간 유럽연합의 2007~2013년도 지원사업에 대해 준비해 왔다. 연방정부는 구동독지역을 비롯해 지원이 필요한 유럽연합 신규 회원국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강도 높은 논의 끝에 2005년 12월 유럽연합의 구조기금 조달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독일은 다음번 지원기간 동안 약 234억 유로(2004년 기준)를 지원받는다. 이 중 약 134억 유로는 신연방주에 배정된다. 구동독의 대부분 지역이 이른바 수렴목표지역(중전의 제1지역)으로 분류돼 지원받게 된다. 브란덴부르크 서남부와 라이프치히, 할레는 기준치 75%를 조금 넘어 수렴-과도기 지역으로 지원금 규모가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연방과 주정부의 무단한 노력 끝에, 과도기 지역도 2011년 말까지 유럽연합의 지원법이 정한 최대지원지역(제87조 제3a항에 해당)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2007~2013년도 지원 기간 동안 투입될 유럽연합의 구조기금 안에는 지역개발기금(EFRE)과 사회기금(ESF)이 포함된다. 또한 국경을 초월한 지역간, 국가간 협력사업인 “유럽의 지리적 협력”도 지역개발기금을 지원받는다. 한편 농어업기금은 향후 유럽연합의 예산 내 농업부문에 편입될 것이다. 유럽연합 구조기금은 리스본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성장 집약적 방향으로 사용될 것이다. 수렴지역(신연방주)에 투입되는 구조기금의 60%는 리스본 전략을 이행하는 데 쓰일 것이다.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회원국들은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국가적 차원의 전략기획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실행계획은 2007년 중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된다.

## 나. 고용 증대를 위한 중소기업 역량 강화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의 경제력 강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는 2006년에도 유럽부흥계획(ERP)의 일환으로 “기존 구동독 기업의 재건과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기금의 절반가량인 약 20억 유로는 신연방주의 투자촉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신연방주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2005년도 대출규모를 보면 12억 유로로, 전년에 비해 53.4%가 증가했다. 이 대출액을 인구 대비 상대화시켰을 때 과거 몇 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체 대출액 가운데 신연방주에 배당된 비율이 2001년에는 27%이던 것이 2005년에는 39%로 올랐다.

또한 구동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평균치를 웃도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이 지역의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에 대해 특별한 지원이 이뤄질 것임을 알 수 있다. 유럽부흥계획도 신연방주에서는 금리특혜 등 특별조건(예: 자본지원비율 인상, 회사설립자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인하, 대출상환시점 연장)이 붙어 적용된다.

특히 신용경제를 위한 신(新) 자기자본규정(바젤 II)을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구동독의 중소기업에 매우 중요하다. 이는 대출과 관련한 규정으로, 바젤에서 여러 나라가 모여 중소기업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연방정부는 이 규정을 철저히 적용했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적으로 가능한 모든 권한을 행사했다. 그리하여 독일 연방은행의 시험계산에 의하면, 신용기관은 1백만 유로 이하의 대출에 대해 중소기업에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을 현행보다 크게 낮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자본조달이 쉬워질 것이다. 새로운 규정은 2007년 1월 1일 발효된다.

금융기관이 대출에 따른 위험부담 등을 고려해 대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출자자본과 유사자기본, 소위 메자니 자본(예컨대 유럽부흥계획의 기업자본)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신 유럽부흥계획의 혁신프로그램에 자기자본과 은행대출 사이에 위치하는 후순위자본이 결합되었다. 이로써 신용대출과 벤처자본이 결합된 형태가 되는데, 이는 위험부담이 높은 기업이 연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 데 적합하

다. 2005년 12월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래 연간 지원금 6억 5,000만 유로로 계획된 프로그램이었으나 2006년 4월 30일 현재 신청이 쇠도하여 그 금액이 약 10억 유로에 달한다. 이 프로그램은 금년에 예산이 증액되어 2006년 6월까지 7억 4천만 유로가 승인되었다.

### 다. 생계형 창업 장려

혁신적인 생계형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자와 소자본 기업이 용자를 쉽게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독일 재건은행은 “마이크로 용자”와 “착수금” 대출프로그램을 개편했다. 이는 소규모 대출을 표준화한 신개념으로, 2007년 시행되면 금융기관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대출심사는 오직 대출은행이 맡게 되어 심사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도 절약될 것이다.

#### ○ 대학이 함께 하는 생계형 창업 지원프로그램(EXIST)

“대학이 함께 하는 생계형 창업 지원프로그램(EXIST)”으로 1998~2005년 간 신연방주 총 5개 지역의 대학 창업네트워크가 큰 성공을 거두었다. “dresden exists(드레스덴 공과대학)”, “GET UP(튀링겐 전지역, 현재는 튀링겐 창업네트워크)”, “SAXEED(켄니츠 공과대학)”, “GründerFlair(메클렌부르크 포어포머른 전 지역)”, “begin(포츠담 대학)”이 바로 그것이다.

2006년 새로 구성된 “대학이 함께 하는 생계형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정부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창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대학의 구조와 절차 조정을 통해 기업의 자립을 유도하고, 창업자를 지원하고, 대학의 자회사를 통해 기업이 신지식을 체계적이고 경제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완할 것이다.

EXIST의 하위 프로그램인 SEED는 학내에서 창업아이템을 실현하도록 1년 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0년 시작되어 2006년 5월까지 총 363건의 창업을 지원했고 그 규모는 1,800만 유로에 달한다. 그 중 약 1/3은 신연방주에서 이뤄졌다. 이렇게 지원받아 설립된 기업은 평균 2~4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프로그램은 2006년 현재 내용적으로 더욱 발전되어가고 있다.

## ○ 신생 기술기업의 자본조달

자본이 불안정한 신생벤처기업은 은행에서 융자받는 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벤처 캐피탈(VC)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착수자본시장은 아직까지 견실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2005년 전체 독일의 착수자본의 약 1/6은 신연방주에서 형성되었으며 이 중 약 절반이 베를린에서 발생했다.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공공 투자회사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작년에 출자자본을 더욱 확대, 지원했다. 유럽부흥계획/유럽투자 기금-엠브렐러 펀드와 유럽부흥계획 착수기금 외에도 2005년 8월 하이테크 창업기금이 출범했다. 이 기금으로 정부는 테크노 기업의 설립과 성장에 단계별로 필요한 자본이 형성되는 데 주력했다.

출자기금 엠브렐러 펀드는 유럽투자기금과 유럽부흥계획-특별자산과 함께 초기 기술이전을 위한 기금과 후속기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밖에 2004년 11월부터는 유럽부흥계획 착수기금이 시장에 등장했다. 이 기금은 기업별로 여러 단계에 걸쳐 3백만 유로까지 자금을 조달해 준다. 2005년 5개의 구동독 기업을 포함해 43개 기업에 출자했다.

하이테크 창업기금은 기술종목 기업의 창업을 지원한다. 특히 대학과 연구기관이 설립한 회사의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금은 정부와 재계, 재건은행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이 기금은 기업별로 평균 50만 유로, 때로는 1백만 유로까지 출자를 지원한다. 하이테크 창업기금은 구동독에서 특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2005년 말까지 구동독의 신청비율이 22.3%에 달했다. 정부는 재계와 재건은행과 협력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이테크 창업기금을 확대하고 다른 두 개의 기금도 필요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다.

## ○ 여성의 생계형 창업

여성의 창업비율을 높이고 그 시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부는 2004년부터 “여성 창업자 중개소(www.gruenderinnenagentur.de)” 활동을 전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중개소는 단일 기관으로써 전 산업부문의 여성 창업자에게 기업설립의 초기, 중기, 안정화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실업률

이 높은 지역에서는 여성의 창업이 자립적인 생계를 위한 유일한 기회이다. 또한 좋은 인력을 연결하고 인구의 유출을 막는 역할도 한다. 현재 “여성 창업자 증개소”에는 여성 창업자와 기업인을 위한 산하 자문기관과 전문가, 네트워크가 1,200개 이상 형성되어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 ○ 생계형 창업 지원을 위한 신 규정

실업자의 생계형 창업에 대한 지원과정이 간소화되었다. “1인 회사”와 과도보조금은 각각의 장점만 모아 창업 보조금으로 일원화되었다. 장려 조건은 여성의 창업 잠재력이다. 여성 창업자는 과거에 장기간의 장려기간과 사회적인 안전 조치 때문에 “1인 회사”를 선택했다.

창업보조금은 2단계로 지급된다. 창업자는 가장 최근에 받은 실업수당과 같은 액수의 생계보장비와 더불어 300유로의 사회 보장비를 9개월 간 받는다. 이어서 창업자가 영업활동을 충실히 했음을 증명해 보이면 추가로 6개월 간 사회 보장비를 지급받는다.

### 라. 경제여건 개선

#### ○ 관료주의 타파

신연방주, 즉 경제 재건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는 규제완화가 매우 중요하다. **관료주의 타파와 법적용 개선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준 비용 모델의 도입
- 연방총리실에 독립적인 통제·자문역의 규범통제위원회 설립
- 특히 중소기업과 관련, 연방경제부가 관료주의 타파를 위해 만든 제1법의 의결과 중소기업의 중장기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의 의결

이들 정책은 신연방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회계와 통계의 세부규정들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것이다. 단기간에 실현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 외에 연방정부는 37개 항목에 달하는 **규제로부터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장기적 개혁조치**를 의결했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이 덜어지고 중소기업 친화적인 조치들을 보다 큰 “전문적” 개혁안에 통합할 것이다.

그 외에 현재 **“관료주의 타파를 위한 지역별 제안”** 사업의 2단계가 진행 중이다. 2005년 6월 21일 각 지역에서 제출된 관료주의 타파 및 탈규제를 위한 최초의 법이 2005년 7월 1일 발효해 관료주의 타파 및 탈규제를 위한 총 19가지 제안이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정부는 2004년 초 지역 상공회의소에 2차 공고를 내고 관료주의 타파를 위해 지역 내 제안을 제출해줄 것을 촉구한 결과 28개 지역에서 총 198개의 제안이 나왔다. 현재로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안을 2006년 말까지 최대한 많이 시행하는 것이 목표이다.

#### ○ 사유재산권의 법적 보장

구동독 시절 반(反)법치국가적 사유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보상에서 재산반환신청의 97%는 이미 해결되었다. 미해결 사안이 남아 있으나 이것이 투자의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소유권 반환이 기각된 경우는 대신 보상이 이뤄진다. 이에 재산청에서는 앞으로 보상신청 업무를 보다 강도 높게 다루게 될 것이다.

2005년 3월 30일 유럽인권재판소 최고재판부는 소련 점령기의 토지개혁과 산업시설 몰수와 관련해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소련 점령기와 동독 건설 후 몰수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 범위에 대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소련 점령지법에 의한 사유재산 몰수는 통상 되돌릴 수 없다는 기존의 판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로써 이 문제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었다.

또한 2005년 6월 30일 유럽인권재판소는 동독의 토지개혁 처리규정(민법전 경과법 제233항목 제11조 내지 제16조)에 대한 여러 건의 불복소송을 기각했다. 신연방주의 토지소유권 문제도 법적으로 정리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신연방주는 해당 경우에 신농민(동독에서 1945년 토지개혁으로 농토를 얻은 농민)의 상속인으로부터 정당하게 토지의 반환을 요구했다.

## 2. 고용 강화를 위한 노동시장의 정책수단

### 가. 노동시장 개혁

연방정부는 지난 수년 간 다단계 개혁으로 노동시장을 현대화했다. 특히 노동시장 내 현대적 서비스에 관한 법을 통해 노동시장정책과 고용정책을 광범위하게 수정했다. 현재 노동시장은 “장려하며 요구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르고 있다. 동시에 정부는 구동 독재권을 위해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것이며 어려운 경제 사정을 잘 인식해 추진할 것이라 했다.

현재 노동시장 개혁과 수정된 고용정책, 특히 노동시장과 관련한 새 조치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노동시장의 서비스부문 현대화의 효과에 관한 2005년 정부보고서”는 서비스의 현대화를 위한 첫 3개 법에 따라 시행된 노동시장 개혁이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이미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각 정책들에 대해서는 일부 손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 결과 예컨대 지역의 직업소개소가 근로자-서비스-중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평가기간이 길지 않아 2005년 중간보고서에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효과는 극히 일부만 기술되었다. 2006년 최종보고서가 나와야 노동시장 개혁의 효과를 보다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연정계약에 따라 2007년도 고용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구직자 생계보장

경제활동가능인구 중 현재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생계지원필요가구 내에 사는 동반 거주자를 위한 “구직자 생계보장(사회법전 제2권)”이 2005년 1월 1일 도입되었다. 이 조치는 실업자 중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 또 소득이 적어 본인과 가족을 온전히 부양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로써 연방직업소개소와 시군 고용담당부서가 장기실업해결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 외에 6년 시한의 실험적 조항에 따라 6개시와 63개 군, 이중 동독에서는 18개의 군과 예나시(市)가 사회법전 II를 직접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자체 업무 외에 연방직업소개소의 업무를 담당,

실업수당 II를 지급하고 노동시장의 통합을 책임진다.

2006년 8월<sup>17</sup> 사회법전 II에 해당하는 독일 전역의 약 380만 생계지원필요가구 중 신연방주 내 가구는 137만으로 36%를 차지했다. 이 137만 가구, 약 240만 명 가운데 21%인 약 513,000명이 15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그리고 가구 내 평균 거주자 수는 1.7명이다. 각 가구마다 2006년 8월 평균 월 802유로를 지급 받았는데(서독은 870유로) 이 중 349유로는 식생활비(서독은 368유로), 256유로는 집세와 난방비(서독은 305유로) 명목이다.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185만 명이며 이 중 55%는 실업자, 나머지는 소득이 낮은 경우이다.

신연방주의 이런 현실을 특별히 고려해 사회법전 II의 평균지원액을 구연방주의 수준으로 높이는 조치가 2006년 7월 1일 발표되었다. 월지원액은 개정된 사회법전 II와 관련법에 따라 2006년 7월 1일부터 독신자, 편부모, 미성년자 동거인에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345유로로 확정되었다.

#### 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조치

연방직업소개소와 연방노동사회부의 예산결산에 의하면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결과 2005년 구동독에서 59억 유로를 지출했다. 그러나 이는 2004년 지출액 76억 유로보다 훨씬 적은 규모이다. 이는 행정조직을 새로 정비하고 실업수당 II를 제 때에 지급하느라 사회법전 II에 배정된 예산 중 일부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연방직업소개소는 효과가 확실한 조치에 예산을 집중 사용했다. 또한 2004년 승인된 실업수당 II 수령자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연방이 연방직업소개소에 지급한 5억 5,800만 유로가 구서독에서만 집행되어 신연방주에 실제로 지급된 액수는 61~62억 유로에 그쳤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적극적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실업자 1인당 받는 금액을 신연방주에서 보다 높게 책정했다. 임금보전 등 정부 모든 정책을 종합해보면 실업자 1인당 지출에서 신연방주가 구연방주보다 약 6% 높다. 임금보전성 노령근로시간단축임금, 단기근로임금, 계절성 근로비수기 수당을 제외하면

---

<sup>17</sup> 잠정적인 수치로서 최종 수정된 수치는 3개월의 대기기간이 지나야 발표된다. 이에 의하면 2004년 4월 약 413만의 생계지원 필요 가구 중 148만 가구가 신연방주에 분포한다.

약 20%나 높다.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사회보조금과 실업수당이 통합되면서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의 성격이 변화했다. 2004년까지는 구동독에서 “제2” 노동시장이 후퇴한 반면, 2005년에는 사회법전 II의 일환으로 고용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다시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은 자립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생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데도 중점을 두었다. 반면 고전적인 직업 재교육은 의미를 크게 상실했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지출은 감소했으나 고용확대를 위한 지원이 실업수당 II와 주거비의 지원으로 이중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는 다시 증가했다.

표 2-1-3 2005년 구동독지역의 주요 노동시장 정책

(단위: 1,000)

직업 재교육	38
직성 발견 및 교육	21
복직 조치	42
임금 보조(개인 서비스 중개소 포함)	45
생계형창업 지원	106
고용 기회	102
기타 “제2” 노동시장	49
직업 훈련생을 위한 조치	174

\* 선정된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사람 제외.

실질적으로 구동독에서의 고용 기회는 더욱 높아졌다. 2006년 3월 기준으로 과거 실업자였던 12만 9천명이 일자리를 찾았고 이 가운데 1만 천명은 사회보험을 납부하고 있다. 반면 노동창출 수혜자는 2만 9천명, 전통적인 구조조정 수혜자는 7천 1백여 명으로 감소했다. 기타 조치와 관련해서는 2005년 대비 큰 변화가 없었다.

사회법전 II와 III을 구별해보면 사회법전 II는 “제2”의 노동시장이 주를 이루는 반면 사회법전 III은 시종일관 정규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6년 3월 구동독에는 사회법전 III의 노동창출조치 관련자가 2,700명, 전통적인 구조조정 조치관련자가 7,100명에 이른다. 반면 사회법전 II의 “제2”의 노동시장에서는 155,000명이 고용되었다.

반대로 구동독에서 지원받은 생계형 창업자 수는 2006년 3월 사회법전 II에서 6,000명, 사회법전 III에서 99,000명이었다(과도기 수당 15,000명, 1인회사지원금 84,000명). 이렇게 차이가 심한 이유는 당시 구동독 실업자의 62.5%가 사회법전 II의 법적 효력 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 ○ 청년 일자리와 직업교육

정부는 25세 미만 청년의 직업교육과 고용의 기회를 크게 개선해 청년실업을 지속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리하여 청년의 실업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5년 51억 유로 이상을 지출했다. 연 평균 약 626,000명이 지원 받았고 그 중 약 260,000명이 구동독 출신이다.

사회법전 II에 따라 2005년 1월 1일 도입된 구직자를 위한 생계보장은 청년층의 고용기회 확대에 큰 진전을 이뤘다. 사회법전 II는 25세 미만의 경제활동가능인구 중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생계보장을 신청할 경우 3개월 내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취업이나 직업교육을 보장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업교육 경험이 없는 청년은 우선적으로 직업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인건비와 행정비용을 책정해 관리자(1인당 청소년 최대 75명)를 추가로 투입, 일자리나 직업교육을 우선적으로 중개하도록 하고 있다.

구동독에서는 2005년 25세 미만 실업자 중 사회법전 II 수령자가 평균 약 92,300명이었는데 이 중 53.9%는 직업교육을, 19.7%는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나 적극적인 고용 장려정책으로 2005년 직업교육과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25세 미만 중 실업자는 각각 12.1%, 6.3%씩 감소했다.

한편 “일하는 청년”상이 장려상으로 2005년 도입되었다. 이는 실업수당 II의 청년 수혜자의 고용시장 진입을 돕는 프로젝트를 표창하는 전국대회이다. 지난 2006년 5월 2일 베를린에서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사회법전 II를 가장 잘 실천한 수상자는 폭트란트군 ARGE 직업소개소의 프로젝트 “VOR JU ALL”로 선정되었다.

### ○ 장기 실업자와 노령근로자 대책

정부여당은 연정협약에서 고령자의 고용개선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 교육,

의료분야를 아우르는 일련의 합의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조기은퇴를 막고 노령자의 업무능력을 유지하며 고령 실업자의 재취업을 가능케 해야 한다.

머지않아 독일의 경제와 노동시장에 나타날 인구감소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일경제의 혁신과 경쟁력을 유지해 미래세대에도 복지를 보장하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목적으로 연방정부는 50세 이상 고령자의 능력과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고 은퇴연령을 현실적으로 높이기 위해 “이니셔티브 50+(Initiative 50plus)”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고용형태가 변화해야 하고 노령근로자의 자질, 업무준비도와 업무능력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야 한다.

연방노동사회부는 고령자의 취업능력과 기회를 높이기 위한 안을 제시했다. 이는 일련의 장단기 대책으로 효과가 보장된 새로운 방안이다. 고령자를 위한 콤비임금이 한 예이다. 고령 실업자가 이전보다 낮은 임금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현재와 과거의 임금 차액을 일부 보전 받는 것이다. 이 외에 고용주를 위한 맞춤형 고용보조금과 직업훈련 개선도 한 방안이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만 52세 이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한시적 고용관계를 맺는 방안을 유럽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만들 것이다.

이 외에 연방 프로그램인 “미래 50+(Perspektive 50plus)-지역 고령자 고용 협정”을 통해 50세 이상 고령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62개 지역사업(고용협정)에 총 2억 5,000만 유로를 지원한다. 구동독에서는 지역사업의 근 40%에 달하는 23개의 고용협정이 실행되었다(4개 허가지역이 주체가 된 프로젝트와 19개의 사업공동체 프로젝트). 고용협정 예산을 살펴보면 신연방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40%에 가깝다.

이 외에 연방정부는 2005년 7월부터 연방 프로그램인 “58세 이상 고령자 일자리 30,000개 만들기”를 통해 취업가망이 없는 고령 장기실업자를 위해 1~3년 간 30,000개까지 추가 일자리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이 중 구동독(베를린 포함)에서는 약 24%인 7,3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신청자는 2005년 말 기준으로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에서 5,300명에 74%로 구연방주보다 훨씬 높다. 지원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되고 만일 이후에도 예산이 남으면 연장될 수도 있다. 또는 수요가 훨씬 높은 구동독지역에 예산을 재배분해 시행할 수도 있다.

한편 “노동의 질 향상을 위한 이니셔티브(INQA)” 프로그램은 인구변화라는 도전

을 극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인구고령화 추세 속에서 업무능력과 건강을 고령근로자가 계속 일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INQA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마침 구동독에서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이 있어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이니셔티브 50+(Initiative 50plus)”를 통해 정부는 두 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하나는 미래에 닥칠 전문인력 부족 사태에 맞서 고령근로자의 업무자질과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고령화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미래세대의 경쟁력과 혁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구동독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이에 취업가망이 없는 고령의 장기실업자, 해고에 직면한 고령근로자를 고용시장에 재편입하는 효과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라. 인적 자본의 강화, 재취업

정부는 직업 재교육의 기회와 교육의 수준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했다. 직업소개소는 2005년 구동독지역에서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춘 단기교육을 지원했다. 지원은 원칙적으로 직업재교육이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 때에만 이뤄진다. 2005년 신규교육생과 기존교육생의 수가 110,000명 이상으로 안정권에 들어섰다. 구동독에서는 2005년 37,000명 이상이 직업재교육을 받았다. 직업재교육생 수가 적다고 해서 연방직업소개소가 교육생의 자질교육에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05년에만 전국적으로 1백만 명 이상이 연방직업소개소가 지원하는 교육과정(직업준비과정, 연수, 장애인 직업교육)에 등록했다.

## 3. 산업입지 요건으로서의 인프라

우수한 교통인프라는 구동독이 강력하고 역동적인 경제입지가 되기 위한 주요요건이며, 성장과 고용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교통인프라에 투자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 인프라 취약 지역도 살릴 수 있다. 또한 사람과 기업의 이동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토대가 마련돼 결과적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1991~2005년 구동독지역의 교통인프라에 총 640억 유로 이상이 투입되었다(연방 철도·고속도로·수로, 지자체 교통투자법 실행계획). 이는 독일 교통부문 전체투자의 약 39%에 해당한다.

정부의 교통인프라 투자는 교통과 경제의 긴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함으로써 앞으로 구동독의 경제입지 강화에 더욱 기여할 것이다.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은 무엇보다 성장지역의 잠재력에서 나온다. 이 성장지역이란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 갖춰져 있고 이로부터 투자자를 유인하는 핵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중심지의 역동성이 주변지역으로 파급되려면 무엇보다 교통이 잘 맞물려 성장지역군을 형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2003년 연방교통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마련할 때 비용편익뿐 아니라 고용 효과와 지역효과 등의 항목도 평가했다. 이제는 이런 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때이다.

### 가. 구동독의 물류 개발

운송과 물류가 국가의 경쟁력, 경제성장, 고용에 점점 많은 영향을 미침에 따라 정부는 최적의 화물운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의 교통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화물운송 및 물류 마스터플랜”은 정부와 재계, 물류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해 물자수송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직함으로써 구동독을 생산과 물류의 입지로 만들고 지역의 숨은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마스터플랜에는 발전현황과 현재의 추세, 또한 교통, 경제, 물류부문에서 충족되어야 할 질적 요건이 포함되고, 취약점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이 첨가될 것이다. 효율의 증가가 의미하는 바는 지역 내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연계로 경제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이다. 구동독을 이 계획에 통합하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 나.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국제공항 건립 결정

그간 중단되었던 베를린 쉐네펠트 공항 공사가 2006년 3월 16일 연방 행정법원의 최종결정으로 재개되어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단일 국제공항으로 거듭난다.

2006년 9월 5일 그 첫 삽을 떴고,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국제공항 설립으로 항공교통망을 확대·집중함으로써, 항공승객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다. 또한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의 입지를 강화하고 고용시장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국제공항이 모든 항공수요를 수용하게 되면 템펠호프 공항(2007년)과 테겔 공항(2011년)은 순차적으로 폐쇄된다.

## 다. 통독 교통사업

신구연방주의 동반성장을 위해 17개 통독 교통사업에 총 380억 유로 가까이 투입되며 2005년 말 현재 이미 260억 유로가 지출되었다.

17개 사업은 연방철도 9개, 연방원거리도로 7개와 연방수로 1개이다.

### ○ 연방 철도

철도 사업 중 현재 6개는 완료되었다.

- 프로젝트 2, 함부르크-베를린
- 프로젝트 3, 월젠-슈텐달
- 프로젝트 4, 하노버-베를린
- 프로젝트 5, 헬름슈테트 막데부르크-베를린
- 프로젝트 6, 아이헨베르크-할레
- 프로젝트 7, 베브라-에르푸르트

1번 프로젝트도 여러 개별구간은 확장하고 전철화하여 이미 개통했다. 라이프치히와 드레스덴 구간인 9번 프로젝트는 라이프치히-리사 구간이 개통되어 양 도시 간 소요시간이 1.5시간 이상에서 약 1시간으로 단축되었다. 또한 할레/라이프치히-베를린 구간 확장공사인 프로젝트 8.3번은 이미 95%의 공정이 끝나 2006년 5월 철도노선 개편 이후 시속 200km로 운행 중이다.

1991~2005년 사이 철도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약 121억이다.

### ○ 연방 원거리 도로

총 2,000km에 달하는 7개 연방 원거리도로 사업 중 14번 프로젝트인 고속도로 A14 할레-막테부르크와 10번 프로젝트인 고속도로 A20 뤼벡-슈테틴 구간은 개통되었다. 11번 프로젝트의 주요구간인 고속도로 A2 하노버 교차로-베를린 구간, 16번 프로젝트인 고속도로 A71 슈바인푸르트-에르푸르트 구간도 개통되었다. 2005년 말까지 총 1,670km가 완성되었고, 160km는 아직 공사 중이다. 2005년 말 기준으로 도로 사업에 약 127억 유로가 투입되었다.

### ○ 연방 수로

17번 프로젝트인 하노버-막테부르크-베를린 수로의 핵심구간은 중부운하, 엘베-하벨 운하, 수로 교차점인 막테부르크이다. 한편 엘베 강의 수로교와 호헨바르테 갑문은 완공되어 2003년부터 폭 2.5m의 화물적재선이 연중 베를린까지 운행되고 있다. 2003년 가을에는 샤를로텐부르크 갑문이 설치되었다.

이 사업에는 총 23억 유로가 소요되며 2005년 말 기준 50% 이상이 투입되었다.

### 라. 유럽 지역개발기금(EFRE) 연방 프로그램

2001년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연방 교통인프라 실행계획(2000~2006년)을 승인했다. 유럽연합은 구조기금의 내에서 신연방주를 제1지역으로 지원하는데 연방정부의 교통인프라 실행계획은 그 중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다. 예산은 약 32억 유로로 이 중 16.6억 유로가 유럽 지역개발기금에서 조달된다.

사업은 오직 구동독에서만 이뤄지며 사업구간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베를린-프랑크푸르트(오데르) 철도 확장(브란덴부르크)
- 라이프치히 도심 터널 신축(작센)
- 할레 남부 연결지점의 할레-바이센펠스 철도 구간 확장(작센 안할트)
- 에르푸르트-글라우샤우-셴베크헨과 게라 교차지점의 파더보른-캠니츠(중부 독

- 일 연결) 철도 확장(튀링겐)
- 항구도시 로스토크의 플랫폼 시설 개축(메클렌부르크 포어포머른)
  - 2002년 홍수로 인한 철도구간 파손 복구(작센)
  - 할버슈타트-빈넨부르크 철도 확장(작센 안할트)
  - 드레스덴-체코 공화국 A17 신축(작센)
  - 연방도로 B6 신축(작센 안할트)
  - A71 일부 구간 신축(튀링겐)
  -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국제공항 진입로 A113, B96, B96a 구간 신축·확장(브란덴부르크)
  - A20과 연결되는 슈트랄준트-베르겐 연방도로 B96n(튀겐추브링거) 확장(메클렌부르크 포어포머른)
  - A20 구간 신축(메클렌부르크 포어포머른)
  - 루켄발데 북부와 A10 베를리너 링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접하는 비젠하겐, 클리스트프, 트레비를 관통하는 통과도로 신축(브란덴부르크)
  - 구벤 시 통과도로(B97n/B112n) 신축(브란덴부르크)
  - 엘베-하펠 운하 구간 확장(작센 안할트)
  - 할레/라이프치히 지역의 교통 시스템 관리 시범 프로젝트 일부구간의 시행계획서 작성과 시행
  - BAB 링 베를린(AD하벨란트와 AK쉐네펠더 교차지점)에 교통정체 시 우회로 선택을 위한 통합 교통체증정보를 갖춘 동태적인 신호체계 구축(브란덴부르크)
  - 내륙선박 정보서비스(RIS)를 신연방주 연방수로에 선택·실행

#### 마. 유럽연합의 확장 프로젝트

유럽연합의 확대<sup>18</sup>에 따라 신규회원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망 연결사업이 진행되거나 이미 완료되었다.

국경을 넘는 연방고속도로는 모두 건설 중이거나 완공되었다. 2006년 말에는 드레

<sup>18</sup> p. 68, '유럽 지역개발기금(EFRE) 연방 프로그램' 참조.

스덴-체코 프라하를 잇는 A17이 개통된다.

베를린-바르샤바와 베를린-프라하의 역량을 결정하는 철도공사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부분적으로 운행 중이다. 기타 철도 구간도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 모든 사업은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이뤄진다(TEN 보조금 혹은 유럽 지역개발기금).

## II

# 기술과 혁신을 위한 이니셔티브

### 1. 산학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력 강화

#### 가. 기업의 연구 지원

혁신 잠재력 강화는 신연방주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이다. 현재 신연방주는 기업의 연구개발 잠재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연방정부는 ‘낙후지역 성장동력을 위한 R&D 지원사업(INNO-WATT)’을 통해 기업의 연구 기반을 확충·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본 사업은 기술이전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유망한 성장동력 부문과 특히 연구개발의 성과가 아직 시장에 본격 접목되지 못한 구동독의 취약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2004년 1월 1일 총 예산 4억 유로의 본 사업이 도입된 후 2006년 중반 기준으로 약 1,165개의 R&D 프로젝트가 지원 받고 있다.

본 사업은 효과의 다양성과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도가 특징적이다. 2005년 참가기업의 50% 이상이 이 사업에 처음 참가했으며 그 중 많은 수가 고속 성장하는 기업들이다. INNO-WATT 사업은 2005년 신연방주 R&D 중소기의 40% 이상을 지원했다. 이로써 약 7,660명의 석박사급 연구원이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신연방주에서 주

류를 이루는 중소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최근의 성적표를 보면 참여 기업들의 매출, 수출, 고용이 평균 이상 증가, 신연방주 제조업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공을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는 최근에 실시한 사업평가보고서를 토대로 2006년 7월 1일부터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앞으로는 기술 벤처기업과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의 R&D 프로젝트도 지원할 것이다. 또한 올해에는 새로운 지원대책인 ‘선도 연구’ 사업을 통해 외부 기업연구소가 우수한 원천기술을 개발하도록 연구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다.

## 나. 네트워크 강화: 산학의 연구역량 접목

### ○ 중소기업 혁신역량 증진 프로그램(PRO INNO II)

2004년 8월 1일 새로 도입된 중소기업 혁신역량 증진 프로그램(이하 PRO INNO II)은 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이 연구성과를 신속히 생산에 접목하도록 지원한다. PRO INNO II는 기술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중소기업이 연구기술 분야와 협력의 형태, 국내외 협력 파트너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 독일의 5만 개 혁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PRO INNO I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해 수립되었다. 그리하여 PRO INNO II에서는 프로그램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 간 R&D 협력을 강화한다.

이 프로그램은 구동독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구조조정과 재건이 진행 중인 신연방주가 1,300건을 신청해 약 1억 3천만 유로를 지원받았는데 이는 총 사업 규모의 45%가 넘는다. 전체적으로는 총 예산 4억 원 이상에 참여하는 기업과 연구소도 1,070개에 달한다.

2006년 5월 4일 정부는 ‘창업지원’ 사업을 추가로 도입하여 연정계약에서 목표한 비혁신 중소기업의 자체 R&D 지원을 실천에 옮겼다.

### ○ 구동독 네트워크경영(NEMO)

‘구동독 네트워크경영’ 지원대회는 중소기업의 R&D 협력을 위한 일종의 지원대책

으로 2002년 개최된 이래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대회는 기업 외부기관의 전문 기술경영을 지원하여 신연방주의 경제혁신네트워크를 형성·발전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구동독의 대부분 작은 신생업체가 보다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구동독 네트워크경영’ 지원대회에는 230개 기관에서 385건을 신청한 가운데 125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총 예산은 2천 4백만 유로이다. 현재 네트워크에 연계된 중소기업은 천여 개로 매출액은 약 30억 유로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기관, 특히 구동독의 공대와 전문대 등도 참여한다. 또한 신연방주는 일부 범지역적 네트워크에도 참여한다. 지원대상은 정보통신과 같은 미래기술에서부터 재생에너지, 환경보호나 안전한 식량생산 기술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아우른다.

#### 다. 지역의 역량 강화: 지역 기업

연방정부는 ‘지역 기업’ 이니셔티브를 통해 클러스터 중심의 새로운 신연방주 지원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지역 기업’의 목표는 지역의 혁신 잠재력을 찾아 활용하여 그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과 기업 간 네트워크를 장려한다.

현재까지 140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연구소, 대학으로 구성된 지역혁신연합을 통해 1,700개의 계획이 지원받았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혁신 이니셔티브인 ‘지역 기업’은 시장중심의 혁신전략으로 개별기업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혁신을 넘어 지역 클러스터의 형성과 강화를 촉진하여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수많은 신생업체의 탄생, 미래지향적 고급 일자리의 창출, 특허신청의 쇄도, 지역경제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학과와 직업훈련소 설립이 ‘지역 기업’의 성공을 증명한다.

‘지역 기업’은 5가지 분야별 혁신 프로세스로 나뉜다.

##### ○ 지역혁신(InnoRegio, 1999~2006년)

지역혁신 사업은 혁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대학, 연구소, 업계,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23개 지역혁신(이하 InnoRegio) 사업

내 1,100개의 개별기획안이 승인되어 약 1억 천 3백만 유로가 지원되었다. 이런 재정 지원에 힘입어 해당 지역에서는 경제성장과 클러스터 형성을 이룰 수 있는 우수한 제반조건이 마련되었다.

표 2-11-1 InnoRegio 지원 예

### Disco

대표적인 건강산업지역인 포어포머른 주(州)는 InnoRegio 지원 사업의 일환인 Disco 이니셔티브를 통해 텔레메디슨(원격진료) 분야에서 선두를 점하고 있다. 성공적인 전략으로 현재 지역 헬스케어센터가 구축되고 있으며, 이는 텔레메틱스를 이용한 혈당 체크나 안과진료 등 텔레메틱스 플랫폼을 이용한 건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Disco 내 23개 회원 기업의 직원 수는 2000~2005년 사이 33% 증가했다.

### INPROSYS

InnoRegio 사업의 일환인 INPROSYS(혁신적인 생산시스템)는 슈말칼덴 공구산업지역 내 고정밀 수동·전동 공구분야를 지원해 우수한 지역산업으로 키워냈다. 특히 생산·조립 분야에서 25개 신생업체가 탄생했다. 특별한 노하우를 갖춘 InnoRegio 기업들은 현재 전 세계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또 2000~2005년 사이 총 96개의 특허를 취득했다.

독일경제연구소(DIW)의 조사결과는 ‘지역 기업’ 사업의 성공을 입증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InnoRegio 사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연구·교육 프로젝트가 지역혁신-네트워크를 통해 현실화된 것이다.

InnoRegio에는 평균 이상의 우수한 기업들이 협력하고 있다. 이 기업들 중 1/3 가까이 되는 직원의 50% 이상이 연구개발직이다. 또한 지난 2년 간 특허를 취득한 기업이 40% 이상인데 특허 중 약 40%는 완전히 독창적인 개발이다. 이들 기업은 신시장을 개척해 3/4이 해외에 수출하고 있으며 2000년 이래 수출물량은 70%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기업의 혁신 잠재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혁신 프로세스에서 일단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는 기업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네트워크 참가업체에서는 지난 2000~2004년 사이 고용이 10%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지역의 비참가 업체보다 월등히 높은 추세다. 또한 InnoRegio 사업으로 총 144개의 기업이 설립, 또는 신연방주로 이전해왔다.

#### ○ 혁신적 지역성장거점(2001년 이후)

InnoRegio는 ‘혁신적 지역성장거점’ 사업으로 발전했다. ‘혁신적 지역성장거점’ 사업의 핵심은 경제적 측면에서 실행가능성이 높은 장단기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비즈니스 플랜의 성격을 갖춘 지역혁신 전략을 구상하고 실현해야 한다. 지금까지 22개의 프로젝트에 각각 연간 약 120만 유로를 지원했다.

표 2-11-2 ‘혁신적 지역성장거점’ 사업의 지원 사례

#### IKON

‘IKON’은 2003년부터 드레스덴 지역의 식료품업체와 연구기관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식품·의약품분야의 세균감소 대안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 및 의약품분야의 전통적인 세균감소법과는 반대로 새로운 압력교차기술은 과즙이나 약 본래의 특성을 그대로 보존하는 ‘냉’ 보존방식이다. ‘IKON’의 원천기술은 역내 설비나 부품 산업으로 확장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 ALCERU-Hightech

2004년 튀링엔 섬유·플라스틱 연구소를 중심으로 발기된 ‘ALCERU-Hightech’는 종래 섬유원단 생산에만 사용되던 공정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독립소재로, 또는 기타소재와 결합해 의류나 의학, 환경에 두루 이용할 수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산학 협력기관들의 목표는 루돌슈타트에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섬유소 기능물질 생산·연구·마케팅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다.

#### ○ 혁신역량센터(2000~2009년)

정부는 ‘혁신역량센터, 인재발굴-역량촉진’ 사업으로 구동독의 대학과 연구소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첨단연구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일 년의 기획 기간 동안 12개 연구센터 프로젝트에 재정과 자문을 지원했다.

그리고 이 중 독립된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6개 프로젝트는 2004년 3월부터 정부지원을 받아 시행되고 있다. 6개 연구센터는 국내외 기술경쟁에서뿐 아니라 시장경쟁에서 해당분야의 최고연구센터로서의 입지를 성공적으로 다지게 되었다.

6개 연구센터에 대한 정부지원의 핵심은 각 센터마다 세계적인 신진학자로 구성된 2개 연구모임을 두게 하고 이 연구모임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연구모임을 이끌 학자들을 미국, 영국, 중국으로부터 유치할 수 있었다.

이 연구센터 중 하나가 바로 “ultra optics”이다. 신개념 빛조절 기술을 연구하는 이 센터는 산학협동을 통해 기술을 생산에 응용할 것이다. 특정 강도나 파장에 따라 ‘맞춤’ 빛을 생산해 내는 광학시스템 개발이 목표다. 이러한 광학시스템 개발을 위해 연구센터의 현대광학과 양자전자공학, 즉 나노광학과 초광자학이 초광학(Ultraoptik)으로 통합되었다.

1차 지원기간 동안 연구센터들은 정부로부터 6천 백만 유로를 지원받는다. 이 지원금에는 2009년까지 신진학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 이외에도 전략적 투자를 위한 예산이 포함된다. 2007년 2차 지원에 들어가면 우수한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 프로젝트들이 지원받을 예정이다.

## ○ 혁신포럼

혁신포럼의 목표는 기업, 연구기관, 기타 단체가 주축이 되는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네트워크의 형성, 발전 단계를 지원한다. 이 포럼은 전문가 회의와 유사하며, 지식전달, 혁신전략 개발, 경쟁력 확보, 교류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2001년 지원을 받은 “표면기술” 혁신포럼은 라우짓츠(Lausitz) 지역의 보유 기술인 표면가공법과 관련설비에 관한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표면기술 보유라는 뚜렷한 지역적 특성 덕분에 라우짓츠 지역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혁신적 지역성장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지원받았다. 구조취약 지역인 치타우(Zittau)에는 시장지향형 고유판매제안(Unique Selling Proposition)을 기반으로 89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혁신포럼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80개 가까이 구성됐으며, 연간 약 100만 유로를 지원 받는다.

## ○ 혁신역량(InnoProfile, 2005~2012년)

‘혁신역량’ 사업은 신연방주 대학과 외부연구소의 신진학자를 양성하여 이들이 역내 중소기업에 구체적인 혁신과제를 제시하고 기초연구 성과를 제공토록 한다.

과학의 경제적 응용에 주력하는 신진연구자를 선별지원함으로써 역내 경제와 기술을 발전시킬 연구 잠재력을 조기에 개발하도록 동기를 유발한다. 이와 동시에 ‘혁신역량’ 사업을 통해 새로운 지원정책을 실현코자 하는데, 바로 기술수요에 초점을 맞춰 공공연구 인프라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혁신역량’ 사업은 신진연구모임별로 5년 간 지원한다. 해외체류와 기업 간 인적 교류도 지원대상이다. 사업 첫 해에는 투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2005~2012년까지 이 사업에 약 1억 5천만 유로가 투입된다. 2005년과 2006년에는 32개의 연구 프로젝트가 ‘혁신역량’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

## 2. 교육·연구 입지로서의 동독

오늘날의 지식기반 사회에서 대학과 연구기관은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 경제입지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과 연구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2005년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의 연구·교육 예산으로 약 19억 5천만 유로를 편성했다. 베를린을 제외해도 13억 3천만 유로가 넘는다.

### 가. 대학과 연구기관 장려

대학발전센터(CHE)의 2005년 대학순위 중 신연방주를 살펴보면,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학기간과 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에서는 튀링엔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주의 대학들이 1위를 차지했는데 바로 그라이프스발트, 할레, 막테부르크, 예나 의대이다.

신연방주 대학의 수준 높은 연구역량은 드레스덴 대학이 독일연구협회(DFG)가

지원하는 제6회 연구센터 지원금 수상학교로 선정된 사실이 입증한다. 드레스덴 대학의 “재생치료-줄기세포를 이용한 조직재생” 연구센터는 독일연구협회로부터 2006년 1월 1일부터 매년 5백만 유로를 최소 4년에서 최대 12년까지 지원받게 되었다.

### (1) 대학발전

‘대학발전을 위한 공동과제’의 일환으로 2005년 베를린을 제외한 신연방주에 약 1억 9천만 유로의 연방예산이 지원되었다. 신연방주 자체의 예산까지 포함해 약 4억 3천 5백만 유로가 신연방주의 대학 확충에 지원되었다. 이로써 전체예산의 약 20%가 전국 대학생 수의 약 14%를 차지하는 신연방주의 대학에 투입된 셈이다(2005/2006년 겨울학기 기준).

신연방주는 유럽지역발전기금(EFRE)로부터도 현재까지 47개의 투자계획에 제3의 지원금 2억 5천 3백만 유로를 지원받았다.

2006년 4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동기획위원회는 대학발전을 위한 제35차 최종종합계획을 통과시켰다. 연방개혁에 따라 대학발전 재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주정부가 책임지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주정부는 대학발전 예산을 자체적으로 결정해 사용하게 된다. 연방정부는 재정분담 차원에서 2007년부터 매년 주 정부에 약 6억 9천 5백만 유로를 직접 배정한다. 이를 통해 총 예산의 24.3%인 약 1억 6천 9백만 유로가 베를린을 제외한 신연방주에 할당된다. 또한 모든 주정부는 매년 연구시설과 대형 연구기기 확보를 위해 약 2억 9천 8백만 유로를 추가로 제공받는다.

### (2) 신연방주와 베를린의 혁신적 연구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사업

본 사업은 대학과 학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연구와 교수 임용에 있어 여성의 기회균등 실현하기 위해 도출된 연방과 주정부 간 합의사항(이하 HWP) 중 제3조에 해당한다. HWP는 2000년 종료된 대학특별프로그램(HSP) III의 후속으로 연방과 주정부는 구동독 대학의 역량과 국제적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총 6개의 전문프로그램을 시행한다.

HWP의 제3조에 해당하는 ‘신연방주와 베를린의 혁신적 연구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사업’은 신연방주 내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학과 연구기관을 확충하는 데 집중 지원

한다. 이를 통해 2001년부터 대학 간, 대학과 학외 연구소, 기업연구소 간 공동연구가 강화되었다. 또한 제3후원금 확보와 신진학자 모임 조성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04년까지 연방과 주정부가 50%씩 약 9천 7백만 유로를 지원했다. 이 사업은 계획대로 올해 종료되었다.

### (3) 경제적 상용화를 위한 전문대학의 응용기술 연구사업(FH3)

경제적 상용화를 위한 전문대학의 응용기술 연구사업(FH3)은 전문대학과 기업, 종합대학, 연구소(예: 프라운호퍼 연구소) 간 연구협력을 지원한다. 연구분야는 공학, 자연과학, 경제를 아우르며 특히 중소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응용과학이 주를 이룬다. 장기적으로는 전문대학과 기업 간 지식·기술 이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연간 신청건수 중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 29개 전문대학의 신청이 약 33%를 차지한다. 신연방주의 대학들은 108개 구연방주 대학들과 비슷한 규모의 지원을 받는다. 2005년 연방정부는 약 8백 10만 유로를 투입해 40개 대학에 지원을 승인했다. 나머지 약 60개 신청 대학은 2006년 상반기에 승인 받을 전망이다.

## 나. 신연방주의 연구센터 확충

2005년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의 연구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출된 약 8억 2천 2백만 유로는 구동독지역 연구센터 확충과 현대화에 투입되었다. 헬름홀츠 센터에 2억 5천만 유로, 프라운호퍼 연구소에 약 9천 5백만 유로, 막스-플랑크 연구소에 약 1억 천 6백만 유로,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 과학조합(WGL) 설립에 약 2억 천 4백만 유로를 지원했다.

### ○ 막스-플랑크 협회

연방과 주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신연방주에 막스-플랑크 연구소(이하 MPG) 설립이 완성되었다. 지난 수년 간 MPG는 이곳에 18개 연구소, 1개 연구단지와 1개 부설 연구소를 세웠다. 이로써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동서독지역에 비슷한 비율로 분포하

게 되었다. 현재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연간 운영자금의 1/4인 약 2억 유로가 신연방주로 투입되고 있다.

신연방주 내 연구소는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전체 틀에 무리 없이 완전히 편입되었다. 예컨대 현재 43개의 리서치 스쿨이 참여하는 ‘국제 막스-플랑크 리서치 스쿨’ 프로그램에 신연방주의 14개 연구소도 참가하고 있다.

### ○ 프라운호퍼 연구소

2005년 5월 프라운호퍼 나노전자공학센터(CNT)가 드레스덴에서 개소하고 세포치료 면역학 연구소(IZI)가 라이프치히에 설립되면서 현재 신연방주에는 총 25개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기관이 들어서있다. 2005년 말 기준으로 신연방주의 프라운호퍼 기관의 직원 수는 약 30,050명이다.

혁신적인 상품, 공정, 서비스 기술개발은 신연방주에 시급히 필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이는 다양한 지역의 전문가들이 교류하며 이뤄내는 학제 간 접목과 보완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연구혁신협약의 재정을 바탕으로 대학, 연구소, 기업의 연구원, 개발자, 경영자들이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서 새로운 형식의 지역중심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운영되는 3개 혁신 클러스터 중 2개가 신연방주에 위치한다.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기관은 1992년 이래 구동독지역 내 프로젝트를 통해 총 10억 9천 5백만 유로의 수입을 창출했다. 이 중 5억 8천 2백만 유로는 기업으로부터, 4억 2백만 유로는 공공사업 수주를 통한 것이다. 구동독 내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2005년 예산은 1억 8천 4백만 유로였는데 이 중 7천 9백만 유로는 기업의 수주를 통해 발생했다.

### 프라운호퍼 나노전자공학센터(CNT)

2005년 5월 프라운호퍼 연구소, Advanced Micro Devices(AMD), Infineon 사는 공동으로 프라운호퍼 나노전자공학센터(CNT)를 설립했다. CNT는 드레스덴에 위치한 기업들에 300mm 특수제조기술을 제공한다. 이로써 드레스덴은 유럽의 최첨단 나노전자공학 연구기지로 거듭나고 있다.

연방정부와 작센주는 CNT 초기자본으로 8천만 유로를 지원했고, 센터의 참가업체들은 프라운호퍼 연구소와의 협력 하에 향후 5년 간 약 1억 7천만 유로 규모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 예나 광학 혁신클러스터(JOIN)

예나 프라운호퍼 응용광학·정밀기계 연구소(IOF)

칼 자이스 사, 쇼트 사, 아베 사가 예나시(市)에서 설립된 이래 예나는 뛰어난 광학기술을 자랑해 왔으며, 이 전통으로 통독 후 명실상부한 광학기술의 메카가 될 수 있었다. 전통적으로 축적되어 온 광학기술에 지역의 기술 친화성이 결합되어 예나가 혁신클러스터로 선정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IOF는 지역 업체, 예나 종합대학, 예나 공과대학, 일메나우 공과대학, IPHT 연구소를 비롯한 기타 협력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광학분야의 문제를 프로젝트 별로 풀어가고 있다.

연구주제로는 대량생산 시 적용되는 고정밀광학, 회절과 굴절 광학결합, 센서와 자동차기술 응용을 위한 광학요소와 전자요소의 공생통합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건축부품 소형화, 방사성형을 위한 나노구조 이용과 이에 맞춰 설계된 광학 디자인이 있다.

### 메커트로닉스 기계설계 혁신클러스터

캠니츠 프라운호퍼 공구 및 변형기술 연구소(IWU)

캠니츠에 메커트로닉스 기계공학 혁신클러스터가 세워짐으로써 지역의 자동차 생산업체와 자동차부품 공급업체, 대학과 여러 연구기관의 협력체제가 강화되었다.

메커트로닉스는 기계공학, 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을 아우른다. 캠니츠 혁신클러스터는 이런 학제 간 통합을 통해 기술과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모든 참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메커트로닉스 제조방법, 수준 높은 상품과 프로세스개발이 캠니츠 메커트로닉스 기계공학 혁신클러스터의 핵심 과제이다.

### ○ 헬름홀츠 센터

신연방주에는 수많은 헬름홀츠 센터가 설립되었다. 예를 들어 직원 수 약 600명의 포츠담 지리연구센터(GFZ)는 현재 지리학 연구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센터로 자리매김했다.

1992년 베를린-부흐에 막스-델브뤼크 분자생물학 센터(이하 MDC)가 설립된 이후 베를린-부흐 캠퍼스는 훌륭한 임상연구센터로 거듭났다. 또한 MDC는 인근 병원과 특별한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그리고 주요 계놈연구소로서 국립 계놈연구 네트워크에도 참여하고 있다.

구동독과 중·동부 유럽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립된 라이프치히-할레 환경연구센터(UFZ)는 현재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우수연구센터로 자리 잡았다. 우수한 연구팀들이 생명의 다양성과 환경의 경제성 연구분야에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 표 2-11-4 벤델슈타인 7-X 계획

헬름홀츠 협회와 연계된 그라이프스발트의 막스-플랑크 플라즈마 물리학 연구소(IPP)는 태양과 같이 수소동위원소를 융합하여 헬륨에너지를 얻는 스텔러레이터 방식에 따라 발전소를 세우기 위한 물리적 토대를 연구하고 있다. '벤델슈타인 7-X 계획'은 세부적으로 프로젝트 설계, 마그네트, 저온유지장치, 기본장비, 시스템 운영, 조립, 물리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 12월 말 기준 직원 수가 300명이 넘는다. 2011년 시운전을 시작으로 2012년 첫 '플라즈마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 ○ 라이프니츠 학술공동체

연방과 주정부는 1995년 라이프니츠 학술공동체(WGL)에서 결성된 '블루 리스트(BLE)'를 육성하여 학문진흥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학문적 요구에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에는 39개 연구소가 연방과 주정부의 공동지원을 받는다. 연방과 주정부는 2006년 총 4억 3천 5백만 유로를 투입했다. 각 연구소들은 전

문 분야별로 협력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라이프니츠 연구소와 기타 연구기관, 대학들은 연합체를 통해 사안별로 학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적, 사회적 발전뿐 아니라 신연방주가 가진 R&D 역량을 적극적으로 상용화하는데도 라이프니츠 연구소는 큰 역할을 담당한다.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라이프니츠 연구소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센터로서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더 많은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데 기여한다. 이미 블루 리스트 내 많은 연구소들이 인근 대학과 함께 학문적 역량을 키우는 혁신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표 2-11-5** 신연방주의 라이프니츠 학술공동체 연구소

### 라이프치히 라이프니츠 대류권 연구소(IfT)

2006년 4월 25일 라이프치히에 위치한 라이프니츠 대류권 연구소(IfT)는 세계 유일의 대류권 실험실을 개소했다. 이 실험실에서 연구원들은 실제에 가까운 환경 하에 구름을 생성시키고 연구한다. 연구 목표는 인간이 대류권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다. 실험실 설립과 실험비용으로 연방과 작센 주정부가 절반씩 약 3백만 유로를 투자한 IfT는 1992년 대류권 내 물리적, 화학적 프로세스를 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라이프니츠 신경생물학 연구소(IfN)

라이프니츠 신경생물학 연구소(IfN) 내에 유럽 최초의 7-테슬라 자기공명단층촬영센터를 설립·발전시킴으로써 막테부르크는 신경학의 중심지가 되어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현재 독일 내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는 센터는 다섯 곳이다. 7-테슬라 자기공명단층은 지구자기장보다 14만 배 강한 초강력 자기장을 생산하여, 아주 약한 뇌파까지 감지, 뇌 구조를 세밀하게 포착할 수 있으며, 이로써 지금까지 감지하지 못했던 정상적인 뇌활동 방해요소를 진단할 수 있게 되었다.

### 라이프니츠 바르네뮐데 발트해 연구소(IOW)

15년 전 독일 최초의 연구선 MARIA S. MERIAN의 취항 이래 라이프니츠 발트해 연구소는 독일 연구선박 혁신과 해양연구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MARIA S. MERIAN호는 빙하 마찰시 선박보호기능이 강화되어 북대서양 극지방과 발트해 탐사에 적합하며, 독일뿐 아니라 외국 연구자들에게도 제공되고 있다. MARIA S. MERIAN호를 이용한 연구범위는 해양학에서부터, 해양 지질학, 해양 및 대기 화학, 해양 지구물리학, 기상학까지 매우 다양하다.

## ○ 연방군의 연구·기술 계획

연방군은 자체적인 연구와 연구수주를 통해 연구거점으로서 구동독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슈트라우스베르크에 위치한 연방군 사회과학연구소와 포츠담에 위치한 연방군 군사역사연구소는 베를린과 포츠담 연구거점 내에 확고히 자리 잡았다. 2006년에는 포츠담 대학과의 협력협정이 확대됨에 따라 연방군의 두 연구소는 포츠담 대학이 새로운 혁신적 교과목을 개설, 정착시키는 데 지원하고 있다.

### 다. 대학과 정부지원 연구소의 연구인력 개발

대학을 제외한 정부지원 연구소의 연구원 수는 1993년 18,057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21,943명이 되었다(베를린: 1993년 8,592명, 2003년 8,518명). 반면 베를린을 제외한 구연방주에서는 1993년 52,941명에서 2003년 51,596명으로 감소했다. 주민 1천 명당 연구원 비율을 비교하면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가 1.3명으로 0.8명인 구연방주보다 높게 나타난다.

한편 대학의 연구원 수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에서는 1995년 24,601명에서 2003년 22,505명으로 줄었다(베를린: 1995년 9,400명, 2003년 7,541명). 반면 베를린을 제외한 구연방주에서는 1995년 76,073명에서 2003년 78,089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03년 주민 1천 명당 연구원 비율은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가 1.3명으로 구 연방주의 1.2명 보다는 여전히 높았다.

## ○ 후진 과학자 양성

신진학자들을 신연방주로 유치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추진되고 있다. 구동독에 위치한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경우 700명이 넘는 석사학위 소지자와 학생 연구조교를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고 있다. 구동독의 라이브니츠 연구소의 박사급 연구원은 663명으로 라이브니츠 연구소 전체 박사급 연구원이 1,704명임을 감안할 때 높은 수치이다.

새로운 기술교육 형식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로는 1999년 Infineon, Siemens Professional Education, Silicon Saxony가 드레스덴에 공동으로 창설한 Chip 아

카데미를 들 수 있다. 이 아카데미에서 마이크로 공학, 산업 전자공학, 메커트로닉스 분야의 공학도들은 직업교육과 교육 후 역내 기업에 취업하는 기회를 갖는다.

### 3. 교육과 직업교육 장려

직업교육, 특히 이원교육은 과거에 그래왔듯이 오늘날에도 많은 청소년에게 전문인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기반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가능한 모든 청소년이 노동시장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직업교육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갖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 가. 직업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협정

‘독일 직업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협정’의 2005년 결산을 보면 이 협정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음이 잘 드러나 있다. 2004년 10월 1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체결된 직업교육 계약은 총 55,180건으로 작년대비 22,800건이 줄어 4% 감소했다. 동시에 2005년 9월 30일 연방노동청에 구직자로 등록된 청년은 3,161명이 줄어 7.2% 감소한 40,900명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 2년 간 협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협정에 참여한 여러 기업과 단체들은 직업교육 정원을 추가로 늘리는 데 변함없이 기여했다. 그리하여 2005년 약 63,400개가 새로 탄생했고 2006년 상반기에도 이미 25,700개가 만들어졌다. 2006년 목표치인 3만 개가 여음이면 거의 달성될 전망이다.

#### ○ 특별프로그램 ‘청소년 직업훈련 준비과정(EQJ)’

2006년 기업들은 전국적으로 약 42,000개의 ‘청소년 직업훈련 준비과정(이하 EQJ)’ 자리를 제공했다. 이는 특히 개인적 이유로 직업교육 기회를 찾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처음으로 직업에 대해 경험하게 함으로써 정식 직업교육의 기회를 갖게 하는 동시에 직업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에게도 사고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목적이다.

2006년 6월 말 기준으로 약 30,300명의 청소년이 기업의 EQJ 자리를 얻었으며, 그 중 약 25%가 신연방주에서 채워졌다. 정부는 총사회보장금에 더불어 임금으로 1인당 월 최고 192유로를 지원한다.

EQJ 과정을 마친 청소년은 일반적인 직업준비 과정을 마쳤거나 별도의 지원을 받지 않은 청소년보다 기업의 직업교육을 받을 가망이 더 높다는 것이 EQJ 연구결과 드러났다. EQJ는 직업교육 기회를 찾기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의 관문으로 인정받고 있다. EQJ 수료생의 56.5%가 기업의 직업교육을 받는데 비해 EQJ 과정 비이수자는 그 비율이 18%에 불과하다.

그러나 2005년 직업교육을 알선 받지 못한 청소년 외에도 약 47,200명(신연방주 5,400명)의 청소년이 연방노동청에 등록해 대안적인 직업훈련을 받았음에도 더 나은 직업교육을 알선 받고자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2006년 직업교육시장이 더 활성화되어 청소년들이 수준 높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신연방주와 베를린의 청소년 직업교육 수요자 수는 2005년 127,200명에서 2006년 약 5,500명 감소한 122,000명에 가깝다.

## 나. 구동독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방-주 연합사업

연방과 주정부는 1996년부터 신연방주 내 직업교육 특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예산은 연방과 주정부가 절반씩 부담한다. 주정부는 역내 노동시장과 직업교육의 특수한 실태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공동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직업교육 사업을 위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약 6억 8천 5백만 유로를 투입했다. 또한 2006년 9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연방-주 특별사업에 8천 8백만 유로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 특별사업을 통해 ‘직업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협정’에서 기업이 향후 3년 간 직업교육 일자리 3만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측면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직업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협정’의 일환으로 출발한 연방-주 특별사업은 신연방주의 직업교육생 14,000명을 추가로 수용할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정부는 약 9천 5백만 유로를 지원했다. 또한 정부는 2006년 5월 19일 추가로 13,000

개를 마련키 위해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와 연방-주 특별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 다. 연방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연방정부는 직업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즉 혁신부문의 기업과 사업장의 고용을 늘려 직업교육 제공의 동기를 부여, 추가로 직업교육 정원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직업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협정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직업교육 정원을 확약 받은 것에 더해 추가적인 정원확대와 지역별 직업교육 지원구조 개선을 위해 ‘직업 스타터(Jobstarter)’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고 있다. 연방경제기술부도 직업교육 기회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과정을 새로이 현대화하고 있다. 연방노동사회부는 ‘청소년 직업훈련 준비과정(EQJ)’ 특별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정된 25,000개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직업 스타터(Jobstarter)’는 2005년 말 종료된 연방교육연구부의 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5개 개별 프로그램(예: 신연방주에서 시도된 ‘지역역량 활성화 교육프로그램’)을 계승하고 있다. 5개 프로그램의 직업교육 확대를 위한 방안과 주제 분야를 확대해 하나의 통합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이다. ‘직업 스타터(Jobstarter)’ 사업은 2010년까지 지속되며 유럽 구조기금(ESF)의 지원금을 포함해 총 약 1억 2천 5백만 유로를 지원 받는다. 본 사업은 개별적 지원에서 벗어나 구조적 지원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지역별로 직업교육 지원구조를 개선해 기업이 더 많은 직업교육 기회를 만들게 하는 것이 목표다. 이 사업은 기업과 사업장의 현실에 맞게 기획되었다. 그 핵심은 지역별로 기업이 제공하는 직업교육을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직업교육이 특히 안 되는 문제지역에 초점을 맞춘 ‘직업 스타터(Jobstarter)’는 연방교육연구부가 최초로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요맞춤식 총괄 대책이다. 본 사업은 보다 크고 혁신적인 지역사업의 일환으로 직업교육 관련자를 대거 참여시켜 이뤄진다.

## ○ 연방군의 직업훈련

연방군은 신연방주의 청소년의 직업교육에 크게 기여한다. 연방군은 정부가 인정한 군 관련 15개 직종에서 연간 약 670명의 직업훈련생을 고용한다. 또한 현재 155명의 행정요원이 훈련받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공무원이 되기 위한 훌륭한 준비과정인 셈이다.

연방군이 시행하는 대표적인 직업교육은 고교졸업생을 대상으로 군 입대 이전에 실시하는 민간직업교육 ‘샤움부르크 모델(Schaumburger Modell)’이다. 본 모델은 1997년에 도입되었으며, 1998년에는 베를린에 적용하기 위해 ‘베를린 모델(Berliner Modell)’로 수정되어 베를린 주정부의 특별지원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 ‘베를린 모델’은 민간기업과 연방군 간의 성공적인 협력사례로 인정받는다. 연방군은 역내 기업, 수공업장, 행정관청의 직업교육을 지원하는데, 교육생 일인당 매달 250유로를 지급해 업체가 직업교육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대상은 직업이 없는 고교졸업생이다. 기업의 직업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앞으로 단기복무에 지원할 우수한 훈련생을 기르는 것도 이 협력의 목표이다.

군인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한 대표적인 성공사례 가운데 군전문교육의 일환인 ‘단기근무 군인의 민간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연방군은 자체내부의 직업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06년 초 텔리취, 라이프치히, 바이쎄필스에 ‘단기근무 군인의 민간직업교육’을 실시해 최장 36개월 간 단기근무 군인들이 민간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06년 상반기에는 8개 군부대 교육장에서 77명의 군인이 총 9개 민간 직업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신연방주에서는 약 33,000명의 군인이 직업훈련서비스를 받는다. 이를 위해 노이브란덴부르크, 할레, 포츠담과 쾰니츠 등지에 19개 직업교육서비스팀이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팀은 직업교육과 관련해 단기복무자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의무복무자의 제대 후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

## ○ 직업교육의 현대화

정부는 직업교육의 현대화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5년 4월 1일 직업교육 개혁안이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각 주정부는 전일제 직업훈련을 마친 수료생들이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교육생들의 오랜 대기절차가 사라지고 개개인에게는 취업의 문이 넓어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직업교육의 현대화를 위한 많은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1998년부터 205개가 넘는 신규규정이 시행되는데 그 중 50개가 새로운 직종을 교육 과정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 라. 기업연합 직업교육원의 육성

기업연합 직업훈련은 특히 중소기업에 직업훈련이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그 중에서도 전문 수공업, 건설업, 농업분야에서 특히 큰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연방과 신연방주 정부, 기업이 협력한 결과 구연방주에 못지않은 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에 100여 개의 현대적인 기업연합 직업교육원에 장기적으로 10,5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6,000여 개의 이론 학습장과 1,700여 개의 방을 갖춘 기숙사를 건립했다. 이를 위해 1991년부터 이미 약 9억 2천 5백만 유로의 연방예산이 신연방주에 투입되었다.

이처럼 기업연합 제조업 관련 직업교육원을 설립함으로써 임직원과 전문사원을 위한 현대적인 양질의 교육기반시설이 마련되었다. 그 중 전문 수공업분야에서 직업교육이 활발히 실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빠른 속도로 기술이 진보하고 경제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었다 해도 지속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전반에 걸쳐 기술과 산업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식과 기술을 보다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새롭고 쉬운 방식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전문 수공업 및 상업 직업훈련기관에 기술이전센터의 설립·운영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5년에는 신방주의 8개<sup>19</sup> 교육장 내 23명의 기술이전 교육 담당자가 지원받았다. 인건비와 시설비로 462,000 유로가 투입되었다. 그 중 혁신과 기술이전 담당자 6명에게는 약 38,000 유로를 지원했다.

---

<sup>19</sup> 슈베린, 프랑크푸르트 (오데르), 코트부스, 에르푸르트, 드레스덴, 켐니츠, 작센-안할트 수공업 총연합, 오스트프링니츠-루핀.

한편 인구구조의 변화로 2005년부터는 고교졸업생의 수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직업 교육생도 줄 것으로 보여 구동독지역의 기업연합 직업교육원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게다가 신기술의 빠른 진화속도를 교육내용이 따라가지 못하는 양상까지 나타난다. 이에 연방정부는 기업연합 직업교육과 그 발전방향에 관한 2001년 7월 1일자 신 개념 지원대책 내에서 이러한 새로운 도전을 극복할 방안을 구상 중이다.

# III

## 지역 및 사회 결속력 지원

### 1. 농촌개발

신연방주 농촌지역은 성장과 고용 잠재력이 매우 높은 곳이다. 앞으로 농촌개발 지원은 지역의 요구에 맞추어 강화되는 한편 지역 스스로 개발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다.

고령화로 인해 신연방주의 농촌지역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2005년 국토개발계획 보고서<sup>20</sup>에 따르면 인구급감에 따라 공공생활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지역의 상당수가 신연방주에 있다. 때문에 신연방주 농촌개발에 있어 교육, 건강, 보험 등의 사회적 자원과 인프라, 경제와 노동시장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논의코자 독일 연방 식량·농업·소비자보호부(BMELV)는 2006년 10월 5일 “농촌지역” 연방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가. 농업분야 개발

신연방주의 농업은 앞으로도 구동독 농촌지역의 경제적 근간을 이룰 전망이다. 농업은 부가가치창출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노동시장에 안착하며 여전히 주요 경제부

---

<sup>20</sup> 2005 국토개발계획 보고서, 연방건축·국토개발계획청.

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신연방주의 농업 종사자 수는 16만 명이 넘는다. 2005년 평균 약 202 헥타르의 경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장은 27,200여 개에 달했다. 2004~2005년 신연방주에서는 농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농가수입(1인당 인건비 포함 수익)은 2003~2004년에 비해 21.7% 상승해 27,552유로에 달했다. 법인수입(인건비 포함한 세전 연간 수입)은 2003~2004년 대비 17.9% 상승한 27,334유로이다. 농업구조가 안정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연방주의 많은 농가가 유럽의 주변 경쟁국보다 앞서가고 있다.

신연방주의 농작물생산과 가축사육은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작물생산에서 뚜렷한 발전이 나타난다. 밀 평균수확량을 보면 통일 전 52dt/ha이던 것이 2005년에는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72dt/ha로 증가했다. 가축사육에서도 발전은 뚜렷하다. 1990부터 2005년까지의 우유생산량을 보면 젖소 한 마리당 우유생산량은 7,598kg으로 통일전보다 두 배 가량 증가했다.

농업의 중요성은 바이오매스가 미래 에너지원으로 이용됨에 따라 한층 커지고 있다. 이에 맞춰 연방정부는 차세대 에너지연료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농업의 경제적 전망을 새롭게 밝혀주고 있다.

## 나. 농업 및 농촌지역 지원대책

### (1) 유럽연합 프로그램

독일은 유럽연합의 농업개혁을 실행함에 있어 새로운 분리식 직접지급 시스템(유럽연합 농업지원의 제1축)을 2005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직접지급은 환경, 사료·식품 안전, 동물건강, 동물보호 분야의 규정을 준수할 때만 보장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CAP) 제2축의 일환(지원기간 2007~2013년)인 이 개정안은 구동독지역의 농촌문제 해결에 다양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신연방주는 2005년 유럽연합의 제1목표지역 집행분과로부터 EU 집행·보장기금(EAGFL) 약 4억 8천 5백만 유로를 지원받았다. 지원의 초점은 농촌의 기능 강화와 생산력 향상이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농촌지역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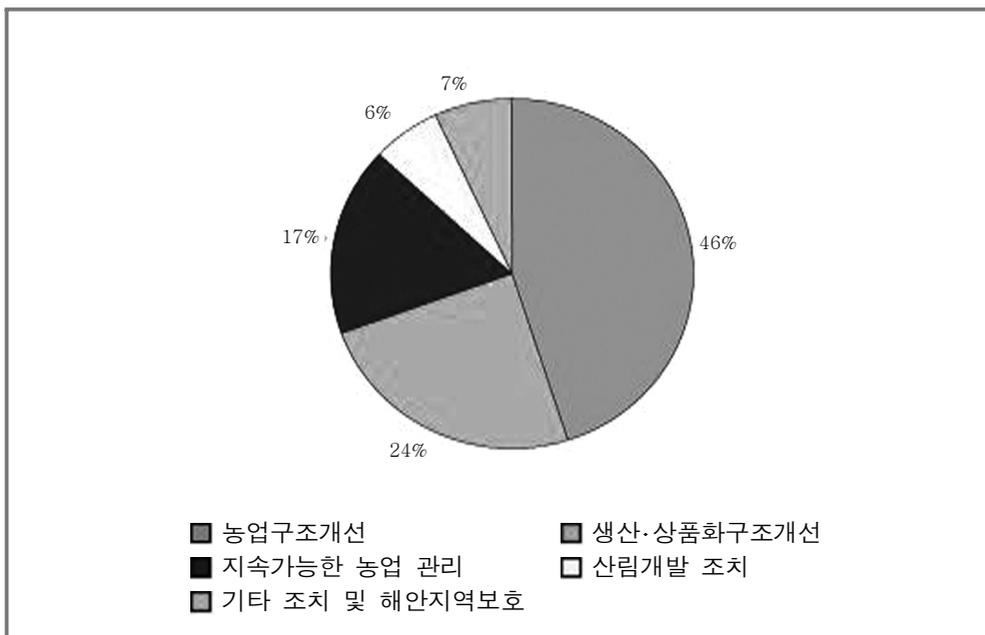
또한 농촌발전촉진 보장분과는 2005년 신연방주에 약 1억 7천만 유로의 EAGFL을 지원했다. 이 지원금은 농업환경개선과 자연조건이 불리한 지역을 위한 개발금으로 사용되었다.

## (2) 공동과제 “농업구조개선과 해안지역보호(GAK)”

“농업구조개선과 해안지역보호(이하 GAK)”은 농촌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협력적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전국사업이다. GAK는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힘쓰고 있다.

2005년 GAK 지원은 신연방주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예산(농촌·수자원 개발대책이 통합된 조치)의 거의 절반이, 생산·상품화구조개선을 위한 예산의 1/4이 신연방주에 투입되었다(개별적 경영방식 개선 및 시장구조개선, [그림 2-III-1] 참조).

그림 2-III-1 2005년 지원분야별 신연방주 GAK 지원금 분포도



2006년 정부의 GAK 예산은 6억 천 5백만 유로이며, 그 중 신연방주에 2억 유로 가까이 투입되었다.

공동과제 “지역경제구조개선(GRW)”은 경제구조가 취약한 지역에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므로써 농촌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GAK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sup>21</sup>

### (3) 농촌지역의 통합발전 지원

2005년 유럽연합은 신연방주의 농촌지역 지원대책으로 공동 이니셔티브 리더(Leader) 통해 약 2천 2백만 유로를 지원했다. 이는 지역의 발전과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이러한 사례는 통합된 지원대책이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며, 이것이 다시 지원의 효과를 높인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특성을 강화하고 지역발전 저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모범적인 신(新)통합 지역맞춤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농촌의 호응도 높아 2005년 한해 약 300개의 혁신사업이 실행되었다.

독일연방 식량·농업·소비자보호부(BMELV)는 시범실시계획인 ‘지역활력(REGIONEN AKTIV)’ 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2006년에는 2년 간의 ‘지역활력’의 후속사업이 시작되었다. 신연방주 7개 지역은 계속 ‘지역활력’에 참여할 예정이다. 지역경영 사업인 ‘지역활력’은 향후 계속 개발되어 지역의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토록 할 것이다.

### 다. 차세대 에너지 연료: 경제 발전의 잠재요소

에너지원으로 바이오매스를 보다 적극 활용하면 신연방주 농촌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연정협약에서 구동독에 설립될 바이오매스 연구센터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연방주에 있어 재생원료의 생산이나 사용은 매우 중요하다. 재생원료 농작물을 재배하는 약 160만 헥타르의 경지 중 절반 이상이 신연방주에 위치한데다 원료 가공규모와 일자리 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최근엔 재생원료 작물로부터 1차 생산물을 처리하

<sup>21</sup> p. 49, ‘1. 경제력과 고용 강화’ 참조.

는 현대적인 시설도 세워져 튀링엔주의 블랑켄슈타인에선 설폰 셀루로즈를 연간 30만 톤, 작센-안할트주의 슈텐달에선 연간 55만톤을 생산한다. 현재 약 2,300명이 이 곳에 종사하고 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주의 퀴초브에 설립된 차세대 에너지개발원(FNR)은 차세대 원료분야에서 연구·개발·시장진출을 전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신연방주에 들어선 많은 관련 연구기관이 차세대 원료를 이용한 새로운 상품개발에 힘쓰고 있다.

현재 독일연방 식량·농업·소비자보호부(BMELV)가 추진 중인 281개의 차세대 원료 R&D 사업 중 77개 신연방주에서 진행되고 있다. 77개 사업예산은 2천 2백만 유로로 총 지원금의 31%에 달한다. 그 중 31개는 2005년 완료되었다. 에르츠 광산지대의 “차세대 에너지 이용지역 확대”와 라이프치히 에너지 환경기술 연구소에서 진행된 “천연가스망을 통한 바이오가스 공급의 타당성 검토” 등이다. 또한 포츠담 보르님의 농업기술 연구소는 바이오가스 시설 효율개선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차세대 원료부문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주제는 차세대 원료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공법이다. 튀링엔 농림부, 프라이베르크 공대, 드레스덴 공대는 유기물에 의해 생성되는 고체연료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2005년에 생산된 약 180만 톤의 바이오디젤 중 약 절반은 신연방주에서 생산됐다. 2006년 5월에서야 문을 연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주의 슈테른베르크 바이오디젤 발전소는 매년 약 10만 톤의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바이오에탄올을 생산, 상용화하여 석유의 대안연료로 사용하는 기술도 연구되고 있다. 현재 3곳에서 연간 약 50만 톤의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데 이 시설은 모두 신연방주에 위치하고 있다. 2005년 독일에서는 총 약 230,000톤의 바이오에탄올이 화석연료를 대체했다. 현재 BTL(바이오매스-To-액체) 연료 생산기술이 개발 중인데, 개발에 성공하면 바이오매스로부터 디젤이나 오토연료와 같은 합성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 프라이베르크에 위치한 Fa. 코렌(CHOREN)사는 연간 15,000톤의 합성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시범시설을 짓고 있다. 또한 작센주의 많은 기업과 연구기관들도 BTL 생산공정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sup>22</sup>

---

<sup>22</sup> p. 115, '가. 에너지 정책' 참조.

## 라. 농업부문의 구채무 청산

「농업부문 구(舊)채무법(LwALTsSchG)」의 목적은 협동농장을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 협동농장이 지고 있던 빚을 기업의 형편에 따라 신속히 상환토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351개의 채무 기업 중 1,222개가 협동농장의 채무 상환을 신청했다. 이렇게 많은 기업이 신청한 것은 「농업부문 구채무법」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채무상환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은 대부분 채무액이 적어 「농업부문 구채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도 단기간에 상환한 곳들이다.

채권은행은 연방정부가 위임한 토지이용관리 주식회사(BVVG)와 함께 각 기업의 수익실적과 전망을 바탕으로 신청서를 검토 중이다. 조만간 이들 기업에 수용 가능하고 재정적으로 적합한 결과가 도출될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구채무법은 이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마. 토지매입

구동독 시절의 국유농림지는 토지이용관리 주식회사(BVVG)를 통해 민영화되었다. 이는 신연방주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2006년 5월 31일 기준으로 농지와 목초지 17,700헥타르와 삼림 6,250헥타르가 매각되었는데 그 중 대부분은 ‘토지배상 및 반환에 관한 법률(EALG)’에 따라 이뤄졌다. 1992년 7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총 394,900헥타르와 삼림 494,400헥타르가 매각되었다. 2006년 5월 31일 기준으로 약 611,100 헥타르가 임대되었고, 이 중 559,800 헥타르는 장기 임대되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유화 정책을 통해 농촌 기업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2-III-1 토지사유화(재사유화 및 재공영화 제외)

토지 유형	1992.7.1 사유화된 토지	2006.5.31 까지 매각된 토지	그중EALG 에 의해 매각된 토지	2005.1.1~ 2006.5.31까지 매각된 토지	그중 EALG 에 의해 매각된 토지	임대된 토지	2005.12.31 토지현황
농지	1,000,000	394,900	234,000	67,000	31,100	611,100	630,300
삼림	575,000	494,400	398,800	40,000	31,400	-	91,200

2006년 5월 31일까지 BVVG는 약 33,000헥타르의 자연보호구역 토지를 신연방주와 환경보호단체와 재단에 무상지급했다. 또한 21,000헥타르의 토지를 민간 자연보호단체에 매각했다.

## 2. 도시개발

### 가. 도시개발과 구동독지역 도시재건축

신연방주의 인구 대부분이 밀집해 있는 도심지역은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기업, 학술기관, 문화시설, 고부가가치의 서비스가 모임으로써 주변으로까지 파급효과를 미치는 훌륭한 성장지역이 되어가고 있다. 한편 일련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는데 주택공동화나 심각한 청년실업에서부터 주민수 감소와 도시공동화에 이른다.

따라서 정부는 신연방주의 도시개발에 있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바로 통합적인 접근을 통한 도시개발이다. 2006년 신연방주 도시개발 연방예산은 총 약 3억 천 5백만 유로이다(전국 예산은 약 5억 4천 6백만 유로이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총 7천 6백만 유로가 증가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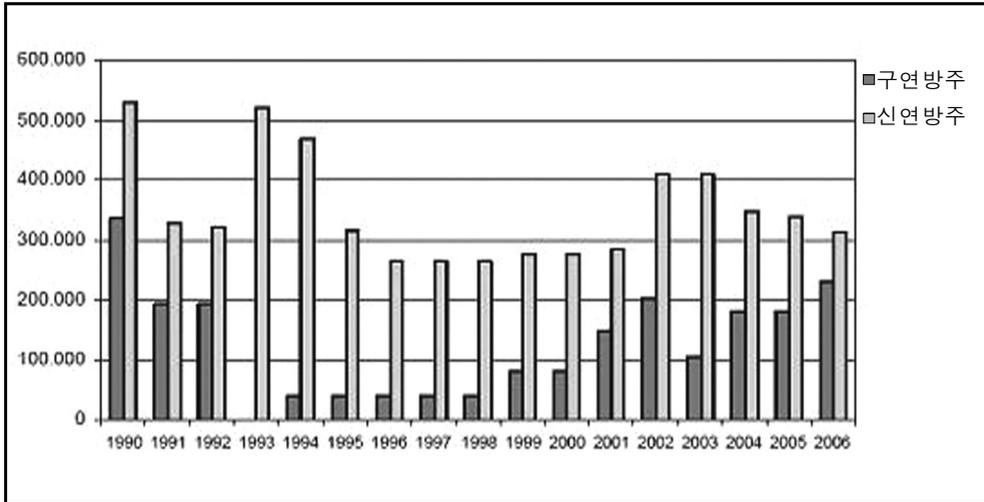
예산은 아래와 같이 분배된다.

- 사회복지 도시건설 1억 1천 40만 유로(4천만 유로 추가)
- 구동독지역 도시재건 1억 9백 80만 유로(2천만 유로 추가)
- 구서독지역 도시재건 5천 6백만 유로(천 6백만 유로)
- 기타 프로그램 2억 7천 10만 유로(전년 대비 동결)

증액된 예산은 신구연방주 모두에 적절히 사용되고 있다. 사회복지 도시건설 예산은 분배기준에 따라 2006년 증액된 4천만 유로 중 3천 2백만 유로가 구연방주에, 8백만 유로가 신연방주에 할당되었다. 이에 신연방주는 2천 8백만 유로(37% 증가)를, 구서독지역은 4천 8백만 유로(63% 증가)를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다.

그림 2-III-2 도시개발을 위한 연방예산(1990~2006년)

(단위: 1,000 유로)



### (1) 구동독지역 도시개발사업

연방정부가 구동독지역 도시개발에 착수하게 된 계기는 역내 심각한 도시공동화 때문이었다. 1998년 당시 구동독지역에는 빈 집이 약 백만 채나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급증하던 주택 공동화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둔화, 2002년에는 107만 7천 채<sup>23</sup>를 기록했다. 독일 부동산건설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예산을 들여 빈집을 해체하기 시작하면서 2003년부터 주택의 공동화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2년에 착수한 신연방주 도시재건축사업의 목표는 주택의 과잉공급을 줄이고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주택건설업체는 기존 건물을 새단장하거나 장기간 살지 않은 빈집을 철거하는 데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향후 8년 간 총 10억 유로 이상 지원한다. 이 예산은 연방, 주정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이로써 2002~2009년 도시재건축 기간 동안 총 예산은 25억 유로에 달한다.

2002~2005년 사이 총 342개 기초단체가 지원을 받아 구동독지역 도시재건축사업

<sup>23</sup> 연방통계청의 1% 표본조사 결과, 2002년도 마이크로센서스 추가조사 결과.

을 실시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467개 사업이 이뤄졌다. 이 중 338건은 철거, 243건은 건물의 보수사업이었다. 도시 주요건물의 보수, 주택의 현대화, 주거환경의 개선과 인프라 확충이 이뤄졌다. 2005년 연방예산 중 67%가 철거에, 33%가 보수에 쓰였다.<sup>24</sup> 건물보수에는 지자체의 예산도 투입되었다. 그리하여 주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을 합하면 총 6억 7천만 유로가 보수에, 7억 천 4백만 유로가 철거에 투입된다. 비율로 보면 48.5% 대 51.5%이다.

각 주정부의 집계에 의하면 2006년 4월 말 기준으로 구동독지역 도시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은 약 13만 채이고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철거한 건물은 24,000채로, 총 154,000채이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철거된 주택 수는 총 20만 채로, 8년의 사업기간 동안 약 35만여 채를 재건축하겠다는 목표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2005년 체결한 도시개발에 관한 행정협정에 따라 도시의 특색을 나타내는 주요건물의 보존을 용이하게 하는 규정이 새로이 적용되고 있다. 즉 건물에 관한 단순한 안전조치는 지자체의 지원 없이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건물의 철거와 보존의 조건을 동일하게 정해두었다. 향후 주정부는 주택의 1/3을 철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도시재건축 예산의 50% 이상을 철거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구동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본래 계획대로 철거 수준을 넘어 개보수를 통해 도시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 구동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구채무청산지원법」의 측면 지원을 받고 있다.<sup>25</sup>

## (2) 구동독지역 도시개발과 기념물보호

동독시절 역사적 건축물과 기념물을 지난 수십년 간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에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의 이 문화유산을 보수, 관리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2006년 총 1억 유로 가까이 지원하고 있다.

- 역사유적지 보존과 복원을 위한 “도시재건과 기념물 보호” 사업은 역사, 예술, 도

<sup>24</sup> 보수사업은 연방정부, 주정부, 기초단체가 각각 33%씩, 철거사업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50%씩 지원했다.

<sup>25</sup> p. 101, '다. 구채무 청산규정' 이하 참조.

시건축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건축물, 도로, 공간 등의 유지, 관리, 현대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방건설교통부는 2006년 162개 시에 약 9천 60만 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 연방정부 문화미디어실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중요문화기념물” 사업은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건축 기념물, 고고학 유적지, 역사적인 공원과 정원을 유지하고 복원한다(2006년 48개 대상에 6백 80만 유로 지원).

이러한 각종 사업을 통해 통독 직후부터 현재까지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지역의 문화유산 복원에 총 22억 유로 가까이 들어갔다. 앞으로도 기념물 관리, 보존은 지속된다. 또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도시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기 위해 ‘기념건축물 보호를 위한 연방집행부’가 신설되었다([www.staedtebaulicher-denkmalschutz.de](http://www.staedtebaulicher-denkmalschutz.de)).

#### ○ 전시회 ‘기념물: 오래된 도시-새로운 삶’

2005년 가을 연방건설교통부는 통일 15주년을 기념해 신연방주 건교부, 기념물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 시도연맹, 시의회와 공동으로 ‘기념물: 오래된 도시-새로운 삶’이란 전시회를 개최했다. 지난 1990년부터 진행된 신연방주 내 역사적인 도시들의 복원과정을 다룬 본 전시는 독일 전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신연방주 뿐 아니라 구연방주에까지 순회전이 열렸다. 특히 구연방주에서 큰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이 전시회가 독일의 내적 통일에 기여했음을 입증한다.

#### 나. 주거시설 현대화

재건은행은 주거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5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구성된 다양한 저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건물재건축 종합대책으로서 2001년 1월부터 2005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된 재건은행-CO<sub>2</sub>-건물에너지효율재건축 사업에 총 약 10억 유로의 연방예산이 투입되었다. 2006~2009년에도 예산이 증액될 이 사업은 2006년 수정될 에너지절약규정과 더

불어 연방정부의 건축부문 핵심 기후보호정책이다. 2006~2009년 약 40억 유로가 투입될 예정이다. 게다가 2006년 2월 1일 사업조건이 개선되어 투자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로써 기업과 노동시장에 건물에너지절약을 장려하고자 연 50억 유로의 대출을 제공하려던 목표가 2006년 8월 초에 이미 달성되었다.

한편 건물에너지절감을 위한 보수·현대화에 참여한 민간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증명서 발급제도 시행 중이다. 재건은행-CO<sub>2</sub>-건물에너지효율재건축 사업을 비롯한 이 모든 조치로 건설부문의 고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 사업에는 매 4년마다 70억 유로가 투자되는데 10억 유로가 투자될 때마다 2만 5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 다. 구채무 청산규정

2000년 8월 28일 통과된 (BGBI(연방법률관보). I S. 1304) 구채무법 개정안은 신연방주의 주택공동화로 피해를 입은 주택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강제구제규정 (AHG 6a)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2001년 1월 1일 발효하는데 주택경기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시공한 주택의 최소 15%가 빈집이어서 존립이 위태로운 건설업체가 재건은행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철거주택의 1평방미터당 최고 77유로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주택철거는 시 전체의 건축적 요소로서 도시개발사업의 주요부분이다. 이에 연방정부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총 약 11억 4천 6백만 유로를 지원한다.

현재 주택공동화 비율이 15%를 넘은 총 325개의 건설사가 패키지 지원을 받고 있다. 빈집 철거비용은 구동독지역 도시재건축 사업으로, 빈 땅에 대한 채무탕감은 강제구제규정에 따라 지원된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 12만 채를 철거하는 비용으로 약 5억 유로가 건설업체에 지원되었다(2006년 6월 30일 기준).

#### ○ 신연방주 주택건설업체 간 합병 시 토지 취득세 면제

신연방주의 주택건설업체나 주택건설조합이 합병할 경우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토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본 조치는 구동독지역의 도시재

건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주택의 공동화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건설업체들의 도산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의 성격상 유럽연합의 허가가 필요한데, 유럽연합은 베를린지역을 제외하고는 이미 허가를 내렸다(베를린과 인근 브란덴부르크지역).

## 라. 사회복지도시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사회복지도시’ 사업의 목표는 도시재건축뿐 아니라 도시민의 생활환경도 향상시키는 적극적, 포괄적 도시개발정책을 통해 도시 소외지역 주민의 생활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2006년 베를린을 제외한 신연방주에 약 1,360만 유로를 지원했다. 재정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다른 지원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그 중 ‘저소득층 청소년 계발 및 기회제공(E&C)’과 연방가족 노인여성청소년부가 추진하는 ‘사회복지를 위한 지역 자본(LOS)’이 좋은 사례이다. 이들 사업을 통해 2006년에도 ‘사회복지도시’ 사업지역 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특별 대책이 가능했다.

연방정부는 ‘사회복지도시’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기존 예산에서 4천만 유로가 확대된 1억 천40만 유로를 편성했다. 증액 된 4천만 유로는 지역경제와 고용, 청소년·교육 정책분야의 통합대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된다. 사회복지도시 사업의 착수 이래 267개 시군에서 390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주민, 정치인, 공무원 간의 폭넓은 대화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포괄적 행정업무라는 새로운 ‘철학’이 탄생할 수 있었다. 이는 사업의 중간결산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의 ‘사회복지도시’ 집행부는 홈페이지 [www.sozialestadt.de](http://www.sozialestadt.de) 운영을 비롯해 사업을 전국적으로 조직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 마.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는 국가경제의 성장과 고용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전체 피고용자의 47% 이상이 중소도시에, 38% 이상은 대도시에 근무하다. 뿐만 아니라 도시에는 부동산과 실물 가치가 집중되어 있다. 자영업에서 소매상이나 중소기업, 중소 서비스업체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경제활동은 도시와 그 주변에까지 경제적 안정화를 가져온다. 지역경제 활

성화 사업의 목적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체, 서비스업체, 부동산 소유자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단 사업장을 개별 지원하는 전통적인 경제대책과는 달리 지역 내 모든 경제주체가 협력하는 통합적인 방식이다.

이에 연방정부는 현대적인 도시개발정책을 시험하고 있다. 즉 지역경제주체가 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정부는 역내 기업에 대한 새로운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동시에 정부는 재정지원과 발전전략을 시행함에 있어 역내 중소기업을 지역발전의 통합적 요소로 육성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은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안 자체가 리스본 협약을 실행에 옮기고 유럽연합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 연방정부는 2007년 25개 유럽연합 회원국의 도시개발담당부처의 장관을 라이프치히로 초청한다. 2007년 상반기 유럽연합 의장국을 맡을 독일의 주도 하에 리스본 전략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유럽 도시'를 위한 라이프치히 현장을 채택할 것이다. 현장은 도시개발에 있어 유럽 투자은행의 역할과 도시재건을 위한 미래 구조기금의 확대사용을 주요내용으로 담을 것이다.

### 3. 사회보장

#### 가. 지속적·통일적 가족정책

최근 들어 가족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특히 신연방주에서 그러하다. 정부의 가족정책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일과 가정의 조화
-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 부모에 대한 지원
- 지역발전의 주요 요소로서의 가족정책

따라서 가족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일제 탁아시설 확충, 구체적인

재정지원,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기업의 배려 등 인프라 개선, 가족을 위한 시간 확보, 예산지원이 효율적으로 배합된 조치가 필수적이다.

### ○ 탁아시설 제공

과거와 마찬가지로 신구연방주는 탁아시설 인프라에서 여전히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신연방주에는 이미 수준 높은 탁아환경이 구축된 반면, 구연방주에는 탁아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신연방주에서는 6세 이하아동 10명 중 6명이 전일제 탁아시설에 수용되는 반면, 구연방주에서는 10명 중 2명에 그친다([표 2-III-2] 참조).

연방정부는 2005년 4월부터 ‘어린이-보다 많이...!’ 캠페인을 통해, 육아, 탁아시설,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 [www.deutschland-wird-familienfreundlich.de](http://www.deutschland-wird-familienfreundlich.de)에 제공하고 있다.

3세 이하 아동을 위한 탁아시설 확충에 관한 1차 보고서는 2006년 지자체 단위에서 이미 상당한 성과를 이뤘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신연방주 내 3세 이하 아동에 좋은 탁아시설을 마련한다는 목표 하에 전일제 탁아소나 전문 보육사를 통해 부모들이 저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리한 시간에 이용토록 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표 2-III-2 동서독 연령별 전일제 탁아소 이용률

	독일		구연방주(베를린 포함)		동독	
	명	전일제 이용률(%)	명	전일제 이용률(%)	명	전일제 이용률(%)
0~2세	259	38.6	166	24.7	93	63.4
3~6세	2,760	25.0	2,448	20.2	312	62.5
3세	664	23.6	587	18.6	77	62.3
4세	889	26.0	781	20.4	108	66.7
5세	855	25.5	763	21.4	92	59.8
6세	352	23.9	317	20.2	35	57.1

출처: DJI-탁아연구 2005.

## ○ 어린자녀를 둔 가정 지원

가족정책은 부부가 자녀 계획을 세우는 시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만 자녀를 가진 부부가 경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는 새로운 가족정책으로 부모수당을 도입했다. 그리하여 부모들은 자녀계획 시점부터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다. 부모수당 지급 기간은 기본 12개월에 추가 2개월이 가능하며 자녀출산 시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자녀의 출산으로 일을 중단하거나 주당 근무시간을 최대 30시간으로 줄여야 하는 직장인의 경우 기존 수입의 67%, 최대 월 1,800 유로까지 보조해 준다. 그리고 자녀 출산 후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돌보지만 수입은 줄지 않는 경우 최소 부모수당 300 유로를 12개월 간 지급한다.

부모수당은 가정과 일을 병행하도록 도우며, 가정빈곤을 방지한다. 부모들이 우선은 경제적 어려움 없이 갓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도움 없이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스스로 확립토록 하는 것이다. 특히 직장에 다니는 편모·편부와 저소득층 가운데 빈곤수당 대상자가 아닌 저소득 부모들은 부모수당을 기존수입의 100%까지 부모수당을 받는다.

형제자매 보너스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한다. 첫아이와 둘째아이 출산 간격이 짧아 직장에 복귀하기 힘든 경우 형제자매 보너스가 추가로 지급된다. 형제자매 보너스는 산모의 출산 전 수입과 부모수당을 합해 산정한다.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비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는 부모들에게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2006년 1월 1일부터 직장에 다니는 부모는 14세 이하의 자녀 한 명당 양육비의 2/3를 연간 최대 4천유로까지 소득공제 받는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부모의 경우 법에 명시된 해당조건이 충족될 시 3세에서 6세까지의 자녀 한 명당 양육비의 2/3를 연간 최대 4천유로까지 특별지출로 처리해 세제혜택을 받는다. 게다가 가사노동, 또는 그 유사활동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늘어난다. 예컨대 보모를 고용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가사활동에 보다 많은 세제혜택이 주어질 경우 가사도우미나 보모를 불법고용하는 현재의 경향이 합법고용 방향으로 바뀌어 고용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한편 연방정부는 아동빈곤 감소대책으로 2005년 1월 1일 저소득층을 위한 양육보조비를 도입되었다.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2005년 5월 홈페이지에 양육보조비 계

산란을 신설해 지급대상자는 대략적인 양육보조비 액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양육보조비는 보조비가 확실하게 육아에 사용되도록 하는 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 경제의 일부로서 가족정책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남성의 가사활동 증가로 일과 가정의 조화는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이는 대도시나 농촌 어디서나 나타나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지역적 차원에서도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가족친화적인 대책을 통해 우수한 인재의 유출을 막고 지역의 경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

2006년 1월 ‘가족을 위한 연대’의 일환으로 재계, 사회단체, 정계가 공동으로 발족한 기업 프로그램인 ‘가족-기업의 성공요인’은 기업, 경영진, 인사담당자들에게 가정친화적인 인사정책이 기업의 전략적인 경영법이 될 수 있음을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사업에서는 출산 후 직장복귀, 회사 내 탁아시설 등 목표대상별 적합한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각 연방주에 기업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주(州)대사”를 임명했다. 2006년 말까지 1,000개의 기업을 사업에 참여시킨다는 목표이다.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발족한 ‘가족을 위한 지역연대’는 상점의 개점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하거나 기업이 직원의 자녀양육에 지원한다면 가정의 삶이 질적으로 개선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을 위한 지역연대’는 지자체, 사회단체, 교회, 기업, 노조, 시민단체의 협력을 유도해 구체적인 가족프로그램과 보육서비스의 개선과 확대를 통해 가정과 일의 조화를 실현코자 노력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예나시(市)는 보육서비스 중앙상담소를 설치해 자녀양육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다. 또 역내 기업들이 가정친화적 경영을 하도록 장려한다. 반대로 역내 기업은 그들의 조직과 재정에 관한 노하우를 지역단체에 전해줘 시민사회의 기반을 확대하는데 기여한다. 지역의 주체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협력체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주의 가족을 위한 10개 지역연대가 좋은 사례이다. 이 지역연대는 상호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가정친화적 지역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전(全)세대의 집’ 사업은 전 세대를 초월하는 지역인프라를 만들고 있다. ‘한

지붕 전(全)세대'라는 모토 하에 시민의 참여와 전문적 지원을 통해 연령을 불문하고 전 국민에게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육아에 관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부모들의 자녀교육을 돕고, 특수한 상황에 처한 가족들을 지원하고, 다음세대에 경험과 역량을 전수하고 상호협력을 장려한다. 가정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서 '전(全)세대의 집'은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한다. 2010년까지 독일의 각 주에 '전(全)세대의 집'을 세울 예정이며, 신 연방주에만 최소 103개가 들어서게 된다.

## 나.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구연방주에서보다 신연방주에는 취학아동을 둔 여성이 전일 근무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현재 양 지역의 격차가 줄고 있기는 하다. 이는 신연방주의 여성이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늘기 때문이기도 하다. 남녀청소년들의 선호직업은 차이가 거의 없다. 신구연방주 모두에서 여성 직업훈련생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사무직과 간호조무사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이 2000년 21%에서 2004년 23%로 증가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자녀의 유무에 따라 여성의 임원비율과 직업적 성공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여성임원 비율확대를 위해 해결안을 찾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www.frauenmachenkarriere.de](http://www.frauenmachenkarriere.de)는 여성의 직장생활과 생계형창업에 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여성이 가정과 일을 병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전문상담자를 연결해 주기도 한다.

이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일과 가정의 진단'은 일과 가정의 조화를 돕는 전략적인 관리도구로서 기업의 정책을 개인별 맞춤형식으로 실행한다. 현재 300개 기업, 기관, 대학이 가정친화적 인사정책 인증 프로그램을 실행 중이다. 작센-안할트 주는 2003년 6월부터 기업과 기관에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사이트 내 또 다른 항목인 '다양성 (Vielfalt)'은 2006년 1월 새로이 개설된 이래

이민여성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이민자를 일상과 직장생활에 통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유럽연합의 동유럽 확대와 그에 따른 노동시장의 자유화로 체코와 폴란드인 노동자가 많이 이주해왔다. 때문에 신연방주의 이주자 사회통합 문제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여성의 직장생활 지원조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향하고 있다.

- 젊은 이민여성, 특히 이슬람계 여성들에게 사회, 경제, 정치 참여기회 확대
- 이민여성이 스스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지원
- 이민여성이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사회참여모델을 장기적으로 확대

#### 다. 청소년 정책: 신연방주의 미래전망 제시와 참여의식 장려

신연방주는 청년층의 이탈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교육수준이 높은 청년과 여성이 서독지역으로 이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연방주의 혁신력과 자발적인 참여와 조직력을 약화시킨다. 신연방주의 젊은이와 여성의 이탈을 막으려면 신연방주에 남아 고향을 지키는 이들에게, 특히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한다. 청소년에게 일자리와 자기 삶을 스스로 가꾸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또한 다양성과 관용, 민주주의의 가치를 심어주고 극우주의, 외국인 적대주의, 인종차별을 지양토록 인도해야 한다.

신연방주의 주민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청소년재단은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지원을 받아 2005년 3월 1일 ‘청년의 미래’ 사무소를 개소했다. 사무소의 과제는 참여주체들과 협력해 신연방주 청년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다. 즉 고향에서 그들의 미래를 펼칠 수 있도록, 또한 고향을 등진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 또한 이미 완료된 연방사업인 ‘우리... 지금, 여기서’ 이니셔티브의 결과를 검토해 이를 토대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청년실업퇴치를 다루는 ‘청년의 미래’는 ‘청소년 능력개발과 기회제공(이하 E&C)’ 사업의 지원을 받는다. E&C(www.eundc.de)는 연방-주 연합사업인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복지도시’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 E&C를 실시하는 234개 시

중 77개가 신연방주 지역이다.

E&C 프로그램의 핵심은 ‘역량강화센터’이다. 이는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통합을 지원한다. 이 역량강화센터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개인별 형편에 맞는 지원 방법을 개발해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12개 연방주에 16개 센터가 건립되었으며, 그 중 5개소가 신연방주이다. 그동안 약 3,000명의 청소년이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사업기간은 2002~2006년이고 1,050만 유로가 투입되었다. 그간 ‘역량강화센터’의 실효성이 입증되어 현재 센터를 200개로 늘일 계획이다.

2003년부터 연방정부는 유럽사회기금(ESF)을 지원받아 ‘사회복지를 위한 지역자본(이하 LOS)’ 사업을 실시, 노동시장에서 차별받는 이들을 위한 소규모 프로젝트와 지역이니셔티브를 지원한다. LOS 사업의 지원대상의 절반은 차별받는 청소년들이다. LOS는 청소년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고용 확대, 지역의 사회적 연대강화, 관용과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에 힘쓰고 있다. 전국 286개 LOS 지역 중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에 60개가 위치한다. 2005년에는 이들 지역에 903개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신연방주에 배당된 약 2,300만 유로 중 현재까지 약 1,600만 유로가 사용되었다. LOS는 2007년 중순에 종료되며, 종료 후에는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개편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2001년 ‘관용과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청소년-극우주의, 반외국인주의와 반유태주의 추방’이라는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의 민주적 태도를 배양하고 사회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2006년에 완료되는 이 캠페인은 세 분야(크세노스(XENOS)-다양성 속에서의 삶과 노동’, ‘엔티몬(ENTIMON)-폭력과 극우주의에 대한 공동대응’, ‘시비타스(CIVITAS)-신연방주 내의 극우주의 추방운동’)로 나뉘어 실시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년 말까지 연방정부는 총 약 1억 9천 2백만 유로를 지원한다. 또한 주정부도 예산을 지원한다.

‘관용과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청소년-극우주의, 반외국인주의와 반유태주의 추방’이 2006년으로 종료하면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민사회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방안

을 보완하여 장기 캠페인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본 캠페인은 2007년 초부터 2010/11년까지 추진되며 다음 세 가지를 골자로 한다.

- 지자체의 책임 하에 통합지역전략 개발
- 청소년, 교육, 노동에 관한 조치
- 다양성과 관용에 관한 지역사회의 대화를 전국적으로 실시

## 라. 노인 정책: 노후 생계대책, 노인 잠재력 활용, 노인 보호와 지원

신연방주를 비롯한 인구고령화 지역에서는 노인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반면, 노인들은 고향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 인프라와 노인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인구고령화가 야기하는 문제는 노년층의 잠재력을 활용할 때만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노년상(像)을 새롭게 정의, 노년층의 능력과 관심, 욕구를 고려한 새로운 역할모델을 만들어 노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노인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노인의 자발적인 사회참여도 늘어야 한다. 이는 세대 간 결속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인프라와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직장과 가정에서 쌓은 노하우를 겸비한 노인은 은퇴 후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다. 이러한 노년층의 잠재력을 사회에 유용하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노인이 시민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도록 지원코자 노년층 교육프로그램인 “참여를 위한 경험지식(EFI, 2005~2006)”이 마련되었다. 프로젝트 개발, 협상, 분쟁해결, 공공서비스분야 등에서 교육을 받은 후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원로 트레이너로서 자원 봉사를 하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튀링엔 주 등 32개 지역에서 큰 성공을 거둬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독일과 유럽에서 대표적인 또 하나의 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는 지자체와 노인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노인 자치조직’을 들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12개로 대부분은 신연방주에 위치해 있다. 전국에서 선정된 12개 지자체의 ‘노인 자치조직’이 자원봉사를 할 때면 이를 위해 외부로부터 특별한 상담과 안내를 받게 된다.

노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개발과 주거지 재건축 시에도 이들의 요구를 잘 반영해야 한다. 신연방주의 많은 지역에서는 노년층을 배려하는 특별한 전제조건이 정해져 있다. 즉 주택재건축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조립식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개조하고 있다. 이렇듯 적극적 참여로 노인문제와 도시개발을 연계한 사업은 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혁신성이 돋보이는 모범답안이라 하겠다. 자세한 정보는 [www.baumodelle-bmfsfj.de](http://www.baumodelle-bmfsfj.de)에 나와 있다.

법정 연금보험제도는 신연방주지역에서도 노후생계를 보장하는 최우선책으로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1992년 1월 1일, 전국 통합 연금법이 제정된 이래 구동독의 400만 명 이상의 기존 연금수급자가 과거 수입에 따라 연금을 받게 되었고, 수령액은 당시 동서독 소득차를 감안해 서독의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2003년 7월 1일 이래 연금액수를 비교해보면 구연방주는 26.13유로, 신연방주는 22.97유로로 신연방주의 연금은 구연방주의 88.1% 수준이다. 2004년 기준 구연방주가 법정 연금보험 지급을 위해 신연방주에 지원한 공공재정이전 액수는 138억 유로에 가깝다. 2005년 7월 1일 기준으로 연금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한 연금총액, 즉 실제 지급액은 신연방주의 경우 남녀 평균 약 1,006유로와 약 659유로로 구연방주의 약 962유로와 약 477유로보다 높다.

이렇듯 신연방주지역에서 실제 지급한 연금액이 표준연금 평균액보다 높은 것은 첫째, 통일에 따른 연금제도 통합과정에서 기지급액 보호가 적용되었기 때문이고 둘째, 신연방주 연금생활자의 재정원이 구연방주지역에 비해 단순하고 통합적이기 때문이다.

신연방주의 경우 연금이 거의 유일한 소득원이며, 구연방주처럼 생명보험, 개인적 노후대책(예를 들어 부동산), 혹은 직장연금 등 기타 수입원을 가진 경우는 드물다.

2006년 4월 연방의회가 제정한 「연금현상유지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신규연방주의 연금수준의 차는 올해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2006년 2월 초 정부는 각료회의에서 임금연동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금액의 저하를 막고자 연금현상유지법을 제안했다.

때문에 향후 몇 년 간은 연금액의 변화추이를 분명히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이미 2005년 의회가 보호약관을 통해 신규연방주의 임금 격차의 감소에 반응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본 약관에 따르면 신연방주의 연금은 최소한 구연방주의

연금만큼 상승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약관을 통해 연금평준화 정책은 신연방주의 임금이 하락할 시에도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

## 마. 국민건강

최근 신연방주의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상당히 개선되어 구연방주와 비견할 정도가 되었다. 신연방주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상승과 평균수명 연장이 이러한 사실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 1990~2004년 사이 구동독지역의 평균수명은 구서독지역보다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여성은 4.59년, 남성은 5.27년이 연장되었다. 신구연방주의 여성 평균수명은 각각 81.3세와 81.6세로 거의 같다. 반면 남성의 평균수명은 여전히 구서독지역이 높다.

2001년 1월 1일부터 동서독의 의료보험 가입자, 의료서비스 제공자, 의료보험이 원칙적으로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게 되면서, 법정 의료보험부문에서 사회통합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신연방주는 구연방주의 의료시스템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지원센터처럼 신연방주가 가진 우수한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 ○ 의료지원센터

의회는 신연방주에서 효율성이 입증된 의료지원센터를 구연방주로 확대기로 결정했다.

2003년 11월 14일 제정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정 의료보험제도 현대화에 관한 법(GMG)」을 통해 의료지원센터 설립이 허가되었다. 이 센터는 진료과목 전체를 아우르며 계약의사가 진료한다. 이 센터의 조직은 다양하게 구성되는데, 전문 의료진이 정부로부터 허가나 위임을 받아 센터를 설립한다.

「의료지원센터에 관한 법」이 발효된지 2년 반만인 2006년 3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420개의 센터가 설립을 허가받았다.

### ○ 신연방주지역 의사 소득추이

최근 몇 년 간 연방정부는 일련의 법규를 통해 신연방주 의사의 소득을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2001년 12월 11일 「의사 거주지에 따른 진료비 결정법」이 도입됨으로써 의료보험 별로 의료수가가 달라져 의사의 소득격차가 발생하는 일이 줄어들었다. 본 법안이 도입된 후 환자가 의료보험을 변경해 발생하는 ‘진료비 손실’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신연방주에서 의료보험업계가 피보험 환자의 응급조치를 위해 의사조합에 지급하는 보험비 총액은 2001~2002년 사이 4억 유로 이상 증가했다. 1999~2004년 사이 약 6억 유로, 20.2%의 증가세를 보였다. 2003~2004년에도 총 진료비는 1.67%인 약 6천 유로가 증가했다. 이러한 추이는 신연방주에서 의료보험금 지급이 구연방주에 서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함을 보여준다.

2005년에는 「하르츠VI」 입법으로 법정 의료보험이 가족보험으로 변경되어 계약의 사의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구연방주보다는 신연방주에서 보다 뚜렷이 나타났다.

최근 몇 년 간 신연방주 내 의사의 소득은 전체적으로 증가해 구연방주와 평준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보험 가입자 1인당 의료보험기관이 지출하는 진료비와 의사 1인당 소득을 통해 알 수 있다. 의사의 소득증가를 유발하는 것은 바로 「법정 의료보험제도 현대화에 관한 법(GMG)」이다. 2004~2006년 사이 신연방주 내 의사의 총 수입은 3.8% 증가한 반면 베를린을 제외한 구연방주에서는 0.6% 감소했다. 또한 신연방주의 의사들이 구연방주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되는 안정정보조금을 통해 매년 1천 5백만 유로가 추가 지급된다.

2006 의료보험 개혁은 의료수가 산정시스템을 단순화하고 관료주의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본예산과 변동가점제로 구성된 진료비 시스템은 유로-진료수수료 규정으로 대체된다. 이 새로운 의료수가 산정시스템으로 의료비 수가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의사들은 진료비를 정확하게 계산해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가계산을 통합함으로써 현 시스템 하의 불필요한 진료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된다.

#### ○ 신연방주지역의 주치의 수급현황

전국적으로는 주치의 수가 충분한데도 신연방주 내 농촌지역에서는 주치의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주치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연정협약에 근거, 「계약의사

권리 및 기타 법 변경에 관한 법(VAndG)」을 통해 신축적이고 구조적으로 적합한 수단을 마련코자 한다.

#### ○ 법정 의료보험의 재정현황

1998년 말 당시 신연방주의 법정 의료보험은 약 8억 유로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었으나, 1999~2001년 사이 상당부분을 상환했다. 그러다 2002~2003년 재차 적자를 기록했으나 「법정 의료보험제도 현대화에 관한 법(GMG)」의 지출은 줄이고 수입은 확대하는 규정에 따라 신연방주의 의료보험재정은 2004년 말 기준으로 약 7억 유로에 달했다. 2005년 결산한 바로는 약 13억 유로로 증가했다. 재정이 늘어난 것은 대부분 전국 위험분담사업(RSA)의 일환으로 구연방주에서 신연방주로의 공공재정을 이전한 덕분이다.

#### ○ 입원환자 의료서비스 촉진 방안

응급환자 진료부문의 만성적 투자부족은 신연방주 내 병원에 대한 투자로 대부분 해결되었다. 연방정부는 1995~2001년 사이 매년 약 3억 5천 8백만 유로를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의 병원에 투입했다. 또한 신연방주의 주정부도 유사한 규모의 재정지원을 단행했고, 보험사도 간병보험에 연간 약 1억 7천 9백만 유로를 지원했다. 이러한 투자는 신연방주 노동시장도 활성화시켜 100만 유로를 투자할 때마다 3~4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병원에 대한 약 6백 30만 유로에 달하는 공동투자로 신연방주의 병원과 의료 인프라는 구연방주 수준으로, 부분적으로는 그 이상으로 개선되었다.

#### ○ 간병보험 지원

연방정부는 「간병보험법」에 따라 1995~2002년 사이 응급진료와 입원진료의 수준을 개선코자 매년 약 4억 9백만 유로를 지원했다. 총 약 33억 유로에 달하는 정부의 지원으로 1999~2005년 사이 1,025개에 달하는 간병시설이 생겼다.

이밖에도 연방정부는 ‘간호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91년

부터 97개의 프로젝트에 약 8천 20만 유로를 지원, 신연방주 내 응급의료서비스, 파트타임 간호직, 입원환자 간호시설, 호스피스 등에 투입되었다.

## 4. 에너지와 환경

### 가. 에너지 정책

#### (1) 재생에너지

독일의 재생에너지 정책의 근간은 연방정부의 시장도입사업, ‘농업구조 및 해안보호 개선(GAK)’의 일환인 농업투자촉진사업(AFP), 그리고 「재생에너지법」이다. 또한 바이오에너지, 지열, 태양열, 풍력, 수력발전 산업에 투자를 가능케 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재생에너지분야는 2005년 독일 전역에서 총 약 160억 유로의 실적을 냈다.

신연방주 지역에도 재생에너지 생산이 상승일로에 있다. 2005년에는 총 518개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906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전국 생산의 약 50% 규모이다. 지금까지 신연방주에서 생산된 풍력에너지는 총 7,121MW이며 이는 전국 생산량의 약 40%에 해당한다. 풍력 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은 니더작센, 브란덴부르크, 작센-안할트 주(州)이다.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 역시 신연방주에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약 300개의 바이오 가스 시설이 설치되어 112MW의 전력을 생산, 전국 생산량의 약 17%를 차지한다. 125개 태양에너지 업체 중 30% 가까이가 신연방주에 위치해 있어 태양광 산업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신연방주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4년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자리가 약 157,000개 만들어졌다. 조사에 따르면 2005년에는 17만 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상당수의 일자리가 신연방주에서 창출되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은 기후보호를 위한 훌륭한 수단이자, 혁신 동력이며, 독일의 환경기술의 수출을 촉진한다.

## (2) 온실가스 방출권 거래

2005년 1월 1일 유럽연합은 기후 보호를 위한 새로운 환경보호정책인 온실가스 방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온실가스 방출권 거래제도는 이산화탄소(CO<sub>2</sub>) 방출량을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며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로 시장경제의 성격을 띤다. 제1차 온실가스 방출권 거래기간(2005~2007년), 독일은 매년 4억 9천 5백만 톤까지 방출할 수 있다. 이 중 약 23%는 신연방주에 할당된다.

방출량을 배분할 때 고려하는 점으로는 온실가스의 조기감축(early action)이 대표적이다. 시설 현대화를 통해 방출권 거래제 시행 이전부터 이산화탄소를 대량 감축한 업체는 현대화 조치 종료 후 12년 간 모든 감축의무에서 배제된다. 그러므로 이 규정의 혜택을 보는 업체의 75% 이상은 이미 1990년대 이산화탄소를 상당량 감축한 신연방주 기업들이다. 제2차 온실가스 방출권 거래기간(2008~2012년) 중 할당받을 매년 5천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도 이 특별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연방정부의 법안에 따르면 매년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2만 5천 톤 이하인 소규모 시설은 기준년 대비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추가로 감축하지 않아도 된다. 나아가 소규모 시설의 신청서접수와 결과보고 시의 행정절차도 간소화되었다. 한편 열병합발전(KWK)시설에 관한 규정은 신연방주에 특히 유리하다. 열병합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 방출 감소규모는 기준년 대비 1.25%에 불과하나, 일반 발전소는 15%나 되기 때문이다. 새로 신설되는 열병합발전 시설은 향후에도 열과 전기 둘 다 기준으로 하는 이중기준에 따라 의무감축량을 할당받게 된다.

### 나. 환경유해 산업시설의 현대화

#### ○ 환경유해 산업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구동독의 환경유해 산업시설의 현대화에 관해 연방정부와 신연방주정부는 1992년 12월 행정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신탁청에 속했던 기업들의 유해시설을 제거비용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60%와 40%씩 부담하게 된다. 다만 규모가 큰 사업일 경우 연방정부의 부담이 늘어난다(연방정부 75%, 주정부 25%).

정부는 1999년 튀링엔 주, 2001년 작센-안할트 주, 2003년 1월 1일에는 메클렌부

르크-포어포머른 주와 각각 환경유해시설 현대화에 관한 일반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으로 주정부 단독으로 사업을 맡게 되었다.

브란덴부르크, 베를린, 작센에서는 유해시설 현대화작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비용부담을 연방이 맡은 것은 주요 산업단지를 유지하고, 지속적 이용을 통해 산업시설의 휴지를 방지하며 산업에 불필요한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다.

그림 2-III-3 동독지역 환경유해 산업시설 현대화 대규모 프로젝트 시행지역



## ◦ 갈탄지역 재개발

신연방주의 넓은 갈탄광과 갈탄정제소는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갈탄생산지의 재개발은 통일 직후 연방정부의 고용창출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고 1993년부터는 연방정부와 갈탄생산지 주정부 간 맺은 환경유해시설 재개발에 관한 행정협정에 근거해 진행되었다.

1990년 이래 연방과 주정부 예산 약 78억 유로가 채굴이 멈춰선 노천광의 안전재선과 재활용에 투입되었다. 현재 이 작업의 90% 가량, 특히 비탈 낙석방지, 폐광입구 차단, 피복층의 안전이동 및 산적, 가동중단 석탄공장 및 발전소 안전철거 등은 이미 마무리 된 상태이다.

2003~2007년 갈탄생산지 14억 유로가 재개발에 책정되었는데 연방과 해당 주정부가 각각 75%와 25%를 분담한다. 이 외에도 연방과 주정부는 노천광지역 지하수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고자 각각 1억 유로씩 공동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갈탄생산지 주정부는 2007년까지 갈탄광 지역의 재활용도를 제고하고자 추가로 1억 7천 5백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2006년 초 연방과 해당 주정부는 2008~2012년 갈탄지역 재개발 방안에 관한 회의에 착수했다.

갈탄지역 재개발사업의 총괄책임은 연방정부 산하 라우짓츠 중부 탄광관리 주식회사(LMBV)에 있다. 이 기업은 현재 약 7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전문기업이다. 또한 LMBV사는 2005년 총 212명의 청년에게 직업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등 라우짓츠와 중부독일 갈탄생산지 내 직업훈련을 선도하고 있다.

갈탄생산지 재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최종쟁점인 탄광지역 지하수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갱구 지하수의 흐름을 재개하고 탄광지역 지하수 수질개선과 지하수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앞으로도 갈탄지역 재개발은 역내 인력고용에 기여할 것이다. 2006년 초 기준, 중부독일과 라우짓츠 지역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약 5,500개에 달한다.

폐광지역의 재개발과 현대화에 많은 인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 노력한 결과 라우짓츠와 중부독일 탄광지역은 오늘날 매력적인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도 많은 시간과 돈이 투자된 폐광지역 재개발의 이득을 차츰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재개발사업은 독일 산업사(史)에 있어 전 세계에 자랑할만한 성공담으로 2005년

9월 연방총리의 지원 하에 개최된 국제재개발회의에서도 크게 소개되었다.

### ○ 방사능 방출시설 폐기

연방 산하 비스무트 주식회사(Wismut GmbH)는 1991년부터 정부의 위임을 받아 작센, 튀링엔 지방에 소재한 구동독 우라늄 탄광시설을 철거·재개발해오고 있다. 방사성 물질과 기타 유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토지와 시설을 재개발, 현대화하는 이 사업의 목표는 인구밀집지인 이곳의 주민에게 다시금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연방은 이에 총 62억을 단독 지원하고 있다.

그림 2-III-4 Ronneburg지역 광산 현대화



비스무트 주식회사는 2/3 이상 재개발을 완료했으며 이에 소요된 정부예산은 약 46억 유로이다. 이런 노력으로 방사선과 기타 독성물질 등 환경유해요소가 크게 감소했다. 더불어 기존 탄광지역의 경제와 주거환경 개선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재개발된 토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게다가 비스무트사가 재개발해 판매한 토지로 역내 약 4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재개발된 기존 폐광지역의 상당부분은 2007년 게라-론넨부르크에서 열릴 독일전국정원박람회(BUGA)의 부지로 사용될 예정이다(론넨부르크 신부지).

비스무트 주식회사는 독일경제 전반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회사는 현재

약 2천 명을 고용하고 있고, 매년 약 300명의 청소년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역내 기업에 매년 대규모 사업을 발주하고 있다.

비스무트사의 재개발 노하우는 자회사인 비스무트 환경기술 주식회사(WISUTEC)가 관리, 상품화하고 있다. 이는 비스무트사와 역내 기업의 고용안정과 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아직 남아있는 재개발 사업들도 201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종료 후에도 장기적인 사업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즉 폐광지역 지하수 이용과 지속적인 환경보호 등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03년 연방과 작센 주정부가 체결한 구(舊)탄광 재개발에 관한 행정협정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연방과 작센 주정부는 2012년까지 총 7천 8백만 유로를 절반씩 부담하여 역내 낙후한 우라늄탄광 시설을 철거하고 환경유해 잔여물을 제거하기로 했다. 2005년 말 기준으로 천만 유로가 투입되어 시급한 철거작업은 이미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 ○ 그라이프스발트, 라인스베르크 구(舊) 원자력발전소

그라이프스발트/루브민, 라인스베르크에는 가동이 중단된 소련형(刑) 원자력발전소가 있다. 연방은 예산을 투입해 이 발전소의 철거와 폐기물 처리를 진행 중인데 2005년에도 계획대로 진척되었다. 연방 산하 북(北)에너지사(EWN)는 이 사업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토대로, 서방선진 8개국의 협정에 따라 2003년 가을부터 착수한 러시아 핵잠수함 폐기사업에 대표기업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외의 여러 원자력발전소 철거사업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과거 원자력발전소로 유명했던 그라이프스발트시(市)의 부지용도 변경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의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하나로 산업항구가 건설되었을 뿐 아니라 항구의 깊이를 7미터까지 넓히는 작업이 2006년 중반 마무리 될 수 있었다. 항구조합이 실소유주로 항구사용의 허가를 모두 받은 상태다. 또한 2004년에는 항구 진입부에 1.8MW용량의 태양광발전소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독일-러시아 가스 파이프가 발트해를 거쳐 루브민에 연결된다고 발표된 후 이 지역의 부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바이오디젤 생산공장이 건설 중이다. 특히

바이오에너지 사업자들은 해안과 가까운 입지조건 때문에 이 지역의 부지를 원하고 있다. 철강업체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발트해-지하가스 파이프가 들어올 것에 대비해 가스압축소가 세워질 예정이다.

#### ○ 연방군 토지 재개발

연방군 국토관리부는 연방군 자체의 통일된 기준에 따라 군 소유의 부지 중 낙후된 곳을 파악해 조사한 후 필요에 따라 재개발하고 있다.

1990년대 초 신연방주에 유독 많이 분포해 있던 황폐화된 부지는 이제 상당부분 사라졌다. 부지조사와 재개발에 연방군 소속 지질학자와 군의 위임을 받은 신연방주 내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 다. 자연보호

#### ○ 국가 자연유산의 보호

국가 자연유산의 보호는 현 정부에서도 핵심사업 중의 하나이다. 정부는 전국에 있는 연방소유의 대표적인 자연보호지역 12만 5천 헥타르를 연방재단에 무상제공하거나 주정부에 이전하겠다고 결정했다. 또한 여러 자연보호 단체와 기타 재단에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그리하여 자연보호지역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보존할 길이 열리게 되었다. 125,000헥타르 중 100,000헥타르는 즉시 이전된다. 나머지 25,000헥타르는 현재 각종 용도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기간이 끝난 후에 이전될 예정이다.

#### ○ 녹색벨트

이 계획의 일환으로 녹색벨트는 최우선 환경보호지역으로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과거 동서독 국경지대는 수십년 간 접근금지 구역이었다. 바로 그 때문에 이 국경지대는 멸종 위기의 동식물의 서식지가 되었으며 일반 경작지와는 다른 큰 중요성을 띤다.

### ○ 자연보호 프로젝트

2005년 자연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신연방주에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의 ‘렌체너 엘브탈아우에(Lenzener Elbtalae)’, 작센 주의 ‘라우짓처 제엔란트(Lausitzer Seenland)’, 튀링엔 주의 ‘튀링어 뢰후통엔(Thüringer Rhönhutungen)’가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은 현재 제2차 실행에 들어간 상태이며 제2차 사업에서는 각 지역 담당자의 의견조율을 거쳐 제1차에서 추진된 계획을 심화,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브란덴부르크주의 ‘운터레 하벨니더룽(Untere Havelniederung)’은 올해 처음 시작되었다.

‘렌체너 엘브탈아우에’ 사업은 엘베 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엘베 강 제방을 420헥타르 확장해 제방 주변에 초원지대를 조성하는 것이다. ‘튀링어 뢰후통엔’ 사업은 수십년간 양떼 방목으로 훼손된 초원에 다양한 식물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라우짓처 제엔란트’ 사업은 광산개발로 보기 흉하게 변한 자연경관을 푸른 초원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계획이다.

‘운터레 하벨’ 사업은 ‘렌체너 엘브탈아우에’과 더불어 자연보호와 홍수방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2008까지 ‘운터레 하벨’ 사업의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 ○ 통합 해안관리

해안지역의 역동적인 변화로 해안의 통합관리(IKZM)는 경제, 사회, 문화, 생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지역인 오데르강 합류지대는 경관이 다양하고 해수가 풍부해 훌륭한 자연자원이지만, 경제가 좋지 않고 동서 간, 해안과 내륙 간 격차도 심하다. 이에 연방정부는 해안의 통합관리를 위해 3년 간 2백만 유로를 지원해 연구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해안의 통합관리를 위한 구조를 확립하고,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지역이 실질적으로 해안의 통합관리에 참여토록 해 해당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 ○ 연방군의 자연보호 의무

2002년 발효된 ‘군 훈련장의 지속적 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자연보호는 연방군의 주요의무가 되었다. 이 지침은 자연보호에 관한 최신지식과 더불어 자연보호에 대한

사회, 정치 전반의 인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통독 이후 연방군은 구소련연방군(WGT)과 구동독 인민군(NVA)이 집중적으로 사용하던 군 훈련장을 서독수준의 환경·자연친화적 상태로 개선하는 데 큰 몫을 담당했다.

이와 같은 환경개선의 결과 신연방주는 ‘자연 2000(동식물 서식지(Flora-Fauna-Habitat)와 조류보호지역)’에 군 훈련장을 등록시킬 수 있었다. 현재도 연방군은 주정부와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군 훈련장 이용·관리의 일환으로 자연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 5. 예술과 문화

새로 출범한 정부 역시 전임정부와 마찬가지로 연방차원의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해 신연방주에 위치한 문화시설의 국내외적 명성을 드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프로이센 성 및 정원, 바이마르 고전주의 재단, 데사우-뵈를리츠 문화재단 등 정부의 등대 프로그램에 포함된 곳은 앞으로도 여전히 투자가 이뤄져야 할 곳이다.

### 가. 등대 프로그램

연방정부는 신연방주 주정부가 범지역적 문화시설을 보존토록 지원한다. 2006년 정부는 약 3,300만 유로를 투입했다.

-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 성과 정원 보호재단
- 바이마르: 고전주의 및 문화재 보호재단
- 데사우: 바우하우스 재단
- 라이프치히: 바흐 자료실 보호재단
- 작센 안할트: 루터 기념관 보호재단
- 슈트랄준트: 독일 해양박물관 재단
- 할레: 프랑크 재단
- 데사우: 뵈를리츠 문화재단

- 바트 무스카우: 퀴클러 영주 공원 보호재단
- 퀴클러: 영주 박물관 공원과 브라니츠 성 보호재단
- 아이제나흐: 바르트부르크 성곽요새 재단

이 외에도 올해에는 쾰비카우의 로베르트 슈만의 집과 귀스트로우의 에른스트-바를라흐 재단이 일회적으로 연방예산을 지원받았다.

연방정부는 프로이센 성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정원 보호재단(SPSG)에 매년 천 4백만 유로를 지급하는 최대 후원자이다. 본 재단은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지역에 위치한 역사적인 유물인 300개가 넘는 성곽과 고(古)정원 760여 헥타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연방 내무부 산하 총무처는 본 재단의 구조조정을 통해 인사개혁을 마무리했다. 이제 시급한 현안은 화재·재해로부터 보호할 방재조치에 대한 예산이다. 신궁전을 조속히 보수하고 저장고와 복원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이마르 고전주의 및 문화재 보호재단 역시 26개에 달하는 박물관, 기념관, 성곽, 공원, 피테-쉴러 자료실, 안나 아말리아 여공작 도서관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문화재단이다. 그러나 2004년 9월 안나 아말리아 여공작 도서관에 대형화재가 발생해 국가적인 문화재앙으로 기록되었다. 이 도서관은 2007년에 복원을 마칠 예정이다. 이에 2005년부터 350만 유로의 연방예산이 투입되었다. 2006년에는 260만 유로를 추가 지원해 방재시설 확충과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올해 연방지원금은 약 670만 유로에 달한다.

#### 나. “동독지역 국가문화시설 투자”사업

문화국가라는 명성에 맞는 독일의 문화시설의 상당수가 신연방주에 위치한다. 신연방주의 문화시설들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더불어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정부는 문화의 등대 역할을 하는 이런 문화시설들을 지속적으로 재건하고 있다. 정부는 “동독지역 국가문화시설 투자”사업을 통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주정부와 지자체의 주요 문화재의 보수·복원 노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2006년 약 600만 유로를 지원했다. 예산의 50%를 부담하는 각 주정부는 예산의 용처에 대한 계획을 수립·제출

한다. 2006년에는 슈베린 국립박물관, 할레의 모리츠부르크 재단, 켐니츠 미술관 등이 지원받는다.

#### 다. 라이프치히 독일도서관

1912년 설립된 라이프치히 소재 독일도서관은 프랑크푸르트(마인)의 독일도서관, 베를린 독일 음악도서관과 더불어 ‘독일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부여 받은 국립 도서관이다. 제4차 증축사업을 벌이는 라이프치히 독일도서관은 신문·잡지실이 추가로 만들어져, 독일도서관 내의 독일 도서·문서 박물관이 이 신문·잡지실로 이관된다. 그리고 현재 베를린-슈테글리츠의 넉넉지 않은 공간에 소장된 독일 음악자료가 독일도서관으로 옮겨진다. 건축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슈투트가르트 출신의 건축가 가브리엘레 글릭크러는 1916년 세워질 당시의 역사적인 건물과 1970년대 만들어진 책의 탑 옆에 현대적인 독립건물을 세울 계획이다. 약 5천만 유로가 투입된 이 증축공사는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뿐만 아니라 독일 음악자료가 라이프치히 독일도서관으로 이전됨에 따라 독일 음악자료의 중심지가 베를린에서 라이프치히로 이동하게 된다.

#### 라. 연방문화재단

2002년 1월 연방정부가 문화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던 연방문화재단이 마침내 설립되었다. 연방정부가 이 재단을 잘레(Saale)강 유역 할레시에 설립한 것은 신연방주에 대한 국가적 책임감을 표하고, 협력적 문화연방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연방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을 새로운 방식으로 장려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당면한 문화적 도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토록 한다. 문화재단의 주요목표 중 하나는 국제 문화교류의 심화이다. 연방문화재단은 매년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다. 재단 설립초기인 2002년에는 천 3백만 유로, 2006년에는 약 3천 8백만 유로가 지원되었다.

#### 마. 문화수도 베를린 건설

연방정부는 문화수도 베를린 건설에 활발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일이 된 후부

터 정부는 독일의 상징적 이미지 구축과 문화적 자긍심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방국가인 독일의 문화적 특성을 수도 베를린에서 잘 드러나도록 힘쓰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문화수도 건설에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베를린 문화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2006년 4억 3천만 유로를 넘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베를린 문화사업으로는 프로이센 문화재 보호재단, 독일 역사박물관, 베를린 유대인박물관, 베를린 연극제, 베를린 국제영화제, 세계 문화의 집,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베를린 예술아카데미, 독일영화 자료관, 베를린 홀로코스트 기념비 등이 있다.

2003년 12월 9일 연방정부는 문화수도 베를린 건설조약을 통해 베를린 주정부의 문화재정 부담을 덜어주었다. 연방의 이 같은 재정지원을 통해 베를린 주 의회는 ‘베를린 오페라’ 재단을 신설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문화수도 베를린 건설기금은 혁신적인 베를린 문화를 창조할 뿐 아니라 독일을 넘어 해외에까지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문화수도 베를린 건설 기금은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협력 강화와 교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바. 프로이센 문화재 보호재단

베를린 문화지원의 대표적 성공사례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전체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프로이센 문화재 보호재단이다. 구동베를린 내 위치한 프로이센 문화재 보호재단의 건축물과 기념비들은 단 하나의 예외 없이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이 귀중한 유산이 전쟁과 전후 동독시절 많이 파손되었다. 이를 복구함에 있어 본연의 특색을 살리되 현대적인 감감에 맞게 복원해야 할 것이다. 박물관 섬(베를린 중심지를 가로지르는 슈프레강 안의 섬으로 박물관 밀집지역-역주)의 건물이나 “운터덴린덴(보리수 나무 아래)” 대로(大路)의 국립도서관 본관 등을 복구하는 데 건축상으로는 재정적으로 매우 큰 노력과 부담이 요구된다. 1999년 유네스코(UNESCO)는 베를린 박물관 섬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호·감독하고 있다. 박물관 섬 중 2001년 말 구국립화랑이 가장 먼저 보수작업을 마치고 재개관했다. 2006년 10월에는 보데 박물관이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마치고 관람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2009년에는 박물관 섬의 신박물관이 다시 문을 연다. 박물관 섬 공사에 약 12억 유로가 드는 것으로 추정한다.

운터텐린덴 국립도서관 보수 및 열람실 신설공사는 현재 베를린에서 추진하는 최대 규모의 건설사업이다. 2006년 성공적인 기공식을 시작으로 열람실 신설공사는 2008년에, 베를린-미테 구역 내 역사적인 복합단지 보수작업은 2011년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 공사에 약 4억 5천 4백만 유로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부터 프로이센 문화재 보호재단이 추진하는 보수·재건 공사는 연방예산으로만 지원되고 있다.

### 사. 동유럽 문화유산 보존사업

독일이 통일되면서 구동독과 동유럽에 산재해 있던 독일 역사유물들을 보존,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라이프스발트의 포머른 주립 박물관과 괴를리츠의 슐레지엔 박물관이 이 업무를 담당한다.

연방정부와 문화·언론위원회의 막대한 재정지원으로 진행된 포머른 주립 박물관의 건설작업은 2005년 완료되었다.

2006년 5월 13일에는 괴를리츠시 역사 중심가에서 슐레지엔 박물관이 개관했다. 이 박물관을 짓는데 정부는 예산을 지원했으며 앞으로 박물관의 운영과 관련해 제도적인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 슐레지엔 박물관은 지역의 문화재를 선보이는 장기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유럽지역의 독일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 신연방주는 재단설립과 연구진 초빙, 국경을 초월한 학술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아. 소르비아 소수민족을 위한 지원사업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4대 소수민족에 대한 재정지원의 일환으로 연방정부의 문화·언론위원회는 브란덴부르크와 작센 주에만 살고 있는 소르비아 소수민족을 지원하고 있다. 연방지원금은 바우첸에 위치한 ‘소르비아 민족재단’과 재단 산하 문화기관의 소르비아 언어·문화 보존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2006년 연방은 760만 유로를 지원했다.

## 6. 스포츠 육성

### 가. 2006 독일 월드컵: 독일을 세계에 알리다

2006 독일 월드컵의 우승컵은 이탈리아에게 돌아갔으나, 월드컵 행사의 승자는 2006 월드컵 개최국인 독일이었다. 월드컵이 열리는 4주간 전 세계인들은 평화롭고 즐거운 축구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 이번 월드컵 행사로 독일은 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또한 독일이 가지고 있던 정확하고 원칙적인 이미지뿐 아니라 친절하고 명랑하고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국민으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월드컵 개최를 위해 구축된 경기장과 교통시설 등의 인프라를 통해 독일 국민과 스포츠계는 향후 수십 년 이상 경제적 이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연방정부는 베를린 올림픽 경기장의 현대화와 라이프치히 센트럴 경기장의 개축에 총 약 2억 4천 7백만 유로라는 사상최대의 예산을 지원했다. 원칙적으로 경기장 건축비는 주정부가 담당하나, 양 경기장의 건축비는 지역형편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연방정부가 지원했다. 라이프치히 센트럴 경기장에서는 네 번의 예선전과 16강전이 치러졌다. 844,000명의 전 세계 축구팬이 라이프치히를 찾았다. 라이프치히 센트럴 경기장은 2005년 6월 미니월드컵인 FIFA 컨페더레이션스컵대회에도 이용되었다. 2005년 12월에는 라이프치히에서 월드컵 조추첨이 열려 전 세계 5억만 시청자들에게 생중계된 바 있다. 또한 연방정부가 2006 독일 월드컵을 위해 준비한 문화예술 전시행사도 라이프치히에서 활발히 개최되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축구 지구본(FUSSBALL GLOBUS)은 2004년 여름 라이프치히에서 경기개최도시 순회를 시작했다.

### 나. 스포츠시설 구축

연방정부는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스포츠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프로스포츠시설 구축은 정부의 스포츠 육성의 핵심으로 연방내무부가 스포츠 기관과 주 정부, 지자체와 공동으로 실행한다. 정부는 1991~2005년 사이 신연방주에 약 2억 4천 백만 유로를 투입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연방정부 스포츠부문 예산인 약 4억 4천 백만 유로의 약 54%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또한 2005년 지원금은 약 천 3백만

유로이다. 정부는 이처럼 대규모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신연방주 내 전문 스포츠시설의 개보수를 촉진한다.

1999년 연방정부는 ‘동독지역의 황금계획’이라는 스포츠시설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신연방주의 낙후된 국민체육 시설을 개선해 구연방주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체육 보급은 주정부와 지자체의 몫이지만 연방정부는 1999~2005년 사이 약 6천 3백만 유로를 지원했다. 그리하여 총 3억천 만 유로가 넘는 예산을 들여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에서 440개 이상의 특별지원사업을 펼쳤다. 국민체육시설의 현대화와 유지는 본래 주정부의 임무이나 연방정부는 2001~2002년 지원금을 확대하고 2005년 프로그램을 연장 운영했다. 이는 정부가 연방차원에서 국민체육 활성화에 큰 가치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정정부는 이 특별사업을 계속 추진키로 합의했다.

#### 다. 응용 훈련학 연구소: 스포츠 기기 연구개발원

라이프치히의 응용 훈련학 연구소(이하 IAT)와 베를린의 스포츠 기기 연구개발원(이하 FES)은 독일 스포츠 연구의 핵심기관으로 전문스포츠와 신진스포츠 종목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이들 연구소는 선수와 종목에 따라 구체적이면서도 여러 종목의 연관성과 복합성 또한 고려하는 훈련기술을 개발하고 스포츠과학을 연구한다. 2006년 IAT, FES는 전년보다 79만 유로가 많은 8,451,000유로의 연방예산을 지원받았다.

#### 라. 올림픽촌과 연방 체육육성센터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와 베를린지역(대부분의 올림픽 관련 스포츠시설은 구동베를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의 일곱 군데 올림픽촌(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포츠담, 코트부스/프랑크푸르트(오더), 캄니츠/드레스덴, 라이프치히, 막데부르크/할레, 튀링엔)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 이들 올림픽촌은 전문선수 관리와 코치연합육성의 일환인 코치의 고용 활성화와 올림픽촌 내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약 천 3백만 유로의 연방예산을 지원받았다. 또한 연방은 올림픽촌 내 ‘체육인의 집’ 운영의 일환으로 프로선수 지

원과 어린이 체육육성을 접목시켜 지원한다.

총 네 군데의 연방 체육육성센터 중 하나는 신연방주의 킨바움에 위치하고 있다. 킨바움 센터는 2006년 연방으로부터 약 97만 유로를 지원받았다.

## 마. 전문 스포츠 지원

### ○ 연방경찰

연방경찰(BPOL)은 젊은 운동선수를 지원하는 동시에 경찰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선수들이 은퇴 후에도 경찰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토록 지원한다.

연방경찰은 현재 코트부스/프랑크푸르트(오더) 올림픽촌 내 50명이 넘는 육상, 사이클, 유도 선수들을 지원한다. 이 선수들은 이미 지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종합 4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를 획득했으며, 주니어세계선수권대회와 유럽선수권대회에서도 많은 메달을 수확했다.

### ○ 연방군

연방군은 독일 전문스포츠인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총 22개 연방군 선수단 중 6개가 신연방주에 있다. 선수의 소속팀 결정은 출신지역보다는 독일올림픽연맹과의 협의 하에 최고의 훈련여건을 고려해 이뤄진다. 예를 들어 구연방주 출신의 토비아스 앙거러는 튀링엔 주 오버호프에서 동계올림픽 훈련을 받는 한편, 신연방주 출신인 카티 빌헬름은 바이에른에서 훈련 중이다.

따라서 투린지역에서 훈련받는 연방군 소속 선수들의 뛰어난 기량은 지역을 초월한 국가적 성공이라 하겠다.

## 바. 연방정부의 구동독 도핑 피해자 보상

정치적 기본결정에 근거해 연방의회는 2002년 8월 인도주의와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구동독 도핑 피해자 보상법(DOHG)」을 통과시키고 피해자 보상금으로 연방총무처에 2백만 유로의 예산을 편성했다.

총 308명의 보상 신청자 중 194명(63%)에게는 보상이 결정되었고, 108명(35%)은 기각, 6명(2%)은 신청을 철회했다. 보상불가 이유로는 시효초과(17건), 경기참여 횟수 부족(42건), 임신기간 중 약물 비투여(21건), 그 밖에 의사소견 불충분과 프로선수 자격입증 불가(28건)이다.

보상이 결정된 구동독 도핑 피해자 194명은 2005년 8월 말까지 총 보상금 2백 2만 5천 유로에서 항소심이나 소송 등 재판진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각각 10,438.71유로씩 보상받았다.

# IV

## 국제협력 및 유럽협력

### 1. 국제협력

#### 가. 동독 제품과 서비스 판매와 수출 촉진

지난 해 신연방주는 수출이 증가해, 제조업의 총이익 중 수출비중이 2006년 1/4 분기 29.4%로 상승했다. 그러나 구동독 기업의 수출이 지난 10년 이상 매년 증가하고는 있으나 구연방주 기업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이에 연방정부는 2006년에도 시장개척특별사업을 통한 무역증진 정책으로 구동독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한다. 매년 약 500개의 구동독 중소기업이 이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가 세계은행의 자회사인 국제금융공사(이하 IFC)와 공동으로 출연한 '신연방주 컨설턴트를 위한 독일/IFC 신용기금(CTF)'을 통해 구동독 컨설팅 기업들은 기술원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후진국과 개도국의 사업성 검토 사업을 수주했다.

#### 나. 경제입지로서 신연방주의 국제수준 향상

신연방주는 지난 몇 년 간 투자지역으로서의 입지를 굳혀왔다. 이러한 발전에는 홀

를한 연구·교육인프라, 현대적인 교통·물류인프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수준 높은 인력에 서유럽 대비 값싼 인건비 등 신연방주의 장점이 크게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투자비 지원, 저금리 재출, 인건비와 직원교육비용 보조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신연방주의 투자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그 외에도 신속한 인허가와 적은 규제가 외국기업 유치에 크게 기여한다.

신연방주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지난 몇 년 간 기계공학, 항공·우주공학, 해양산업, 화학·의약품, 마이크로일렉트로닉, 텔레메틱스, 생명공학, 환경공학, 신소재개발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클러스터’와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역내 산업부문의 클러스터와 협력네트워크는 지역 단위의 연구·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통일 후 신연방주에는 최신 연구센터가 많이 들어서 생명공학, 의료기술, 나노공학, 전자, 태양광발전, 안전시스템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런 네트워크로 특히 신연방주의 중소기업이 크게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네트워크가 없었더라면 이들 중소기업이 고비용 혁신사업에 참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 다. 투자유치

외국인 투자자 유치는 앞으로도 신연방주의 주요과제이다. 연방정부와 신연방정부가 절반씩 투자해 운영하는 산업투자위원회(Industrial Investment Council, IIC)는 투자를 고려 중인 외국기업에 산업입지 분석과 투자결정과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투자위원회에는 전망이 밝은 선별된 산업부문의 해당 전문가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자문을 제공한다. 이들은 시장, 하청구조, 비용 등을 분석하고, 투자안을 기획해 주고, 적합한 부지를 찾아준다. 또 필요에 따라 구동독 내 적합한 협력 파트너도 소개해 준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업투자위원회는 신연방주에 현재까지 약 44억 유로에 달하는 100건이 넘는 투자를 유치했고, 이를 통해 19,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탄생했다.

연방정부는 산업투자위원회와 독일투자청(Invest in Germany GmbH)를 2007년 1월 1일부로 단일 연방투자청으로 통합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계획이다. 그리하여 산업투자위원회의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단일 연방투자청은 2005년

11월 11일 연정계약에서 합의한 내용인 구동독 내 외국투자자 유치의 지속적 강화를 담당할 독립부서를 둘 계획이다. 그렇다고 신연방주의 투자유치 노력 강화가 구연방주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 2. 동독재건을 위한 유럽 네트워크

### 가. 유럽연합의 확대: 유럽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신연방주

유럽대륙의 심장에 위치한 구동독에 범지역적 협력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폴란드와 체코 등 인근국가와의 협력뿐 아니라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국가간, 지역간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유럽 내 지역협력은 시너지 효과를 내어 역내 경제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000~2006년 유럽연합 구조기금으로 신연방주의 시와 지자체, 기관들은 발트해와 남동유럽 지역(CADSES)의 지역간, 국가간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해 왔다<sup>26</sup> 이러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기 유럽연합 구조기금 기간인 2007~2013년에는 ‘유럽 지역 협력’이 제3목표로 새로이 추진된다.

전략적 연합방식에 따라 향후 유럽연합이 재정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에서는 유럽지역이 투자자와 우수인력을 끌어들이 수 있도록, 또한 지식과 혁신, 성장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다. 이는 성장과 고용 촉진을 위한 리스본 전략의 시너지효과를 강화해 그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중동유럽센터

유럽연합이 동유럽으로 확장함에 따라 연방정부는 중동유럽 센터(MOEZ)를 구축해 신연방주가 유럽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의 발돋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프라운호퍼 협회에 중동유럽센터의 운영을 위임했다. 중동유럽센터는 신연방주의 다양한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경제, 학문, 기술 분야에 관한 정보

<sup>26</sup> p. 39, ‘4. 국제적, 범유럽적 협력’ 참조.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성장할 것이다. 중동유럽센터는 2006년 7월 업무를 개시했고, 2006년 안에 역내 대학과의 협력을 시작할 예정이다.

## 나. 범국가적 협력

범국가적 협력의 목적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와의 통합과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함이다. 국경을 맞댄 국가들은 시장, 노동력, 투자활동, 인프라, 기관, 서비스 등과 관련해 공동의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폴란드와 체코와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구동독지역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유럽연합 구조기금을 활용해 다양한 범국가적 조치를 공동으로 취해야 할 것이다. 범국가적 협력의 목표는 이웃국가 간 공동의 사업을 통해 직접적으로 협력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국경지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특히 양국 국경지방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경우 이러한 협력은 경제사회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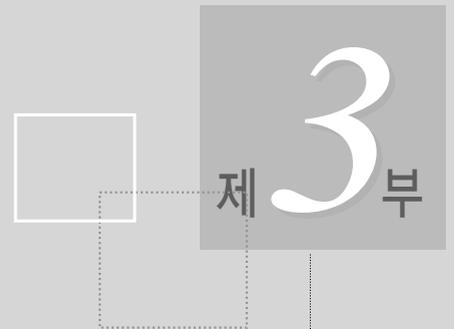
## 다. 국가 간 협력

독일은 현재까지 유럽 내 5개 협력지역에서 범국가적 협력을 지속해왔으며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러시아 등과도 지역개발 공동사업을 수행해왔다. 이 협력사업에서 신연방주는 비단 인접국과 국경을 마주하지 않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지역개발 공동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신연방주는 역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유럽 내 국경 없는 협력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독일은 범국가적 협력 시 발트해와 중동부유럽 협력지역(CADSES) 등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국내적, 지역적 관심사를 유럽의 이해에 맞춰갈 것이다. 범국가적 협력의 주요목표는 다음과 같다.

- 학문과 기술 교류, 국경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한 지역 혁신력 강화
- 수자원 관리, 에너지효율, 재난방지 등 범국가적 차원의 환경보호
- 범국가적 차원의 교통·통신인프라 개선
- 다양성 촉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 신연방주지역 경제통계



## I. 지역통계

### 1.1. 신연방주지역 경제통계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면적(km <sup>2</sup> ) <sup>1)</sup>	892	29,478
인구(천명) <sup>1)</sup>	3,395	2,559
각 연방주 면적대비		19.2
인구밀도(인구/km <sup>2</sup> ) <sup>1)</sup>	3,807	87
<b>2005년 국내총생산(GDP)<sup>2)</sup></b>		
1995년 가격기준(2004년 대비(%))변화율)	-0.2	-1.5
<b>2005년(GDP)<sup>2)</sup></b>		
(경상가격)(10억 유로)	79.6	48.1
인구1인당 GDP <sup>2)</sup>	23,470	18,755
취업인구 1인당 GDP <sup>2)</sup>	51,736	47,772
<b>2005년 제조업분야 총부가가치<sup>2)</sup></b>		
2004년 대비(%)		
-경상가격	0.4	3.8
-1995년 물가기준	-1.1	0.9
<b>2005년 총부가가치(물가인상분 포함)<sup>3)</sup>(경상가격)(10억 유로)</b>	71.9	43.4
-농업, 임업, 어업	0.1	0.8
-공업(건설업 제외)	11.1	8.5
* 제조업	8.8	6.5
-건설업	2.2	2.3
-교역, 음식숙박업, 교통분야	11.7	8.4
-금융, 임대업, 서비스업	24.5	11.2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업	22.3	12.2
<b>2005년 취업률<sup>4)</sup></b>	72.7	76.5
<b>2005년 사업장별 취업률(천명)<sup>5)</sup></b>	1,539	1,006
<b>실업자수<sup>6), 7)</sup></b>	294,271	217,296
<b>실업률<sup>6), 7)</sup></b>		
-당월	17.5	16.3
-작년동기(월기준)	19.5	17.9
<b>단기 비정규직 노동자<sup>6), 7)</sup></b>	1,828	1,771
<b>여분 일자리수<sup>6), 7)</sup></b>	31,415	21,212
<b>사회보험가입 정규 노동자<sup>6), 7)</sup></b>	1,018,300	702,900
(교육훈련소를 알선 받지 못한) <b>직업교육 희망자 수(2005.7 기준)<sup>6), 7)</sup></b>	24,961	29,669
<b>직업교육장 여분 수용도<sup>6), 7)</sup></b>	11,031	13,406
<b>사업등록<sup>8)</sup></b>	517,291	475,327
2004년 1-12월 사이 사업등록건수	47,158	30,163
2005년 1-12월 사이 사업등록건수	44,015	26,310
2004년 1-12월 창업된 신규사업장	39,070	21,914
<b>사업폐기신고<sup>8)</sup></b>	384,033	309,825
2004년 1-12월 사이 사업폐기신고	30,404	18,245
2005년 1-4월 사업폐기신고	32,833	20,755
<b>지원 프로그램</b>		
<b>창업, 투자보조 및 자산성(ERP/EKH) 프로그램 신용대출<sup>9)</sup></b>		
-총 책정예산(100만 유로)	1,853	8,077
<b>각 지역별 지원프로그램<sup>10)</sup>(사업 및 기업경제분야)</b>		
-총 책정예산(100만 유로)	1,498	6,171

베를린부르크 포어포머른	작센-안할트	작센	튀링엔	총계
23,179	20,446	18,415	16,172	107,689
1,707	2,470	4,274	2,335	13,345
12.8	18.5	32.0	17.5	100.0
74	121	232	144	124
-0.1	0.9	0.1	0.1	-0.1
31.3	48.1	85.8	44.7	257.9
18,264	19,376	20,033	19,047	19,267
44,520	48,701	45,521	44,649	46,207
9.1	11.2	7.7	5.3	7.3
7.7	8.1	7.8	4.4	6.0
28.3	43.4	77.5	40.3	232.9
0.8	0.7	0.8	0.6	3.8
3.8	10.0	17.9	10.6	50.8
3.1	8.4	15.3	9.4	42.7
1.6	2.4	4.6	2.3	13.2
5.8	9.0	12.6	6.5	42.3
7.0	9.0	21.0	9.3	57.4
9.2	12.3	20.6	11.0	65.3
77.2	75.6	77.3	75.2	75.7
703	988	1,885	1,000	5,582
160,012	225,403	349,502	179,342	1,425,826
18.2	17.9	16.0	14.9	16.7
19.7	20.1	17.8	16.9	18.6
734	1,610	3,441	2,033	11,417
15,661	21,785	34,766	16,762	141,601
499,000	722,400	1,332,900	708,100	4,984,000
22,672	26,742	47,247	26,819	178,110
11,602	8,909	15,509	10,546	71,003
305,880	437,469	830,408	453,763	3,020,138
20,407	25,071	49,171	25,276	197,246
17,200	21,615	45,386	22,224	176,750
15,194	19,232	39,738	18,918	154,066
205,996	304,684	551,726	315,324	2,071,588
14,169	17,688	32,630	18,346	131,482
14,185	18,913	35,776	18,550	141,012
7,269	8,125	13,113	9,075	47,512
3,330	7,281	9,169	5,474	32,922

<sup>0)</sup> 총계에는 베를린지역 제외.

<sup>1)</sup> 연방통계청 (2005년 12월 31일). 베를린은 전역 기준. 총계는 베를린지역 제외. 인구밀도는 각 연방주 통계 따름.

<sup>2)</sup> 바덴-뷔템베르크 주 통계청. 거시경제지표 연구분과. 2006년 3월 기준. 베를린은 전역 기준. 총계는 베를린을 제외한 전 신연방주 지역.

<sup>3)</sup> 연방통계청. 2005년 실시한 인구 센서스 조사 결과. 15-65세 사이 거주인구 당 취업인구 조사.

<sup>4)</sup> 연방 통계청 및 각 연방주 통계청 취업인구 조사분과. 2006년 3월 기준. 베를린 전역 기준. 총계는 베를린을 제외한 전 신연방주 지역.

<sup>5)</sup> 연방 노동중개소. 2006년 7월 기준 (사회보험가입 정규직 노동자수: 2006년 3월 추정치) / 베를린 전역 노동시장 통계. 총계는 상기 언급된 6개 연방주를 모두 포함한 수. 실업자 수는 모든 노동가능 인구를 대상으로 함.

<sup>7)</sup> 연방 노동경제부. 2006년 3월 기준. 1990년 이후 창업, 투자 지원 및 자산성 대출 프로그램(ERP/ EKH) 지원 승인예산 (지원포기, 감축, 취소분을 제외한 순지원액).

<sup>8)</sup> 연방통계청. 1991년 이후 통계. 1995년까지는 구 동베를린 지역, 1996년 이후에는 베를린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

<sup>9)</sup> 연방 경제 및 수출감독청(BAFA), 1991년 1월-2005년 6월 기간.

<sup>10)</sup> 유럽 지역발전기금(EFRE) 지원분 포함.

## 1.2. 구연방주 및 신연방주지역 사회경제지표

연방주	인구	취업인구 2005년			실업인구 2005년 <sup>4)</sup>	
	2005년 12월 31일 현재(천명)	실제취업 인구(천명) <sup>2)</sup>	취업률 <sup>2)</sup> (%)	독일국내 취업 인구 <sup>3)</sup> (천명)	연평균 (천명)	민간인취업 총인구에 대한 실업 인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1,707	924	77.2	703	180	20.3
브란덴부르크	2,559	1,369	76.5	1,006	244	18.3
작센-안할트	2,470	1,293	75.6	988	259	20.3
튀링엔	2,335	1,222	75.2	1,000	210	17.1
작센	4,274	2,241	77.3	1,885	402	18.3
<b>신연방주<sup>1)</sup></b>	<b>13,345</b>	<b>8,809</b>	<b>75.7</b>	<b>5,582</b>	<b>1,614</b>	<b>18.7</b>
슐레스비히-홀슈타인	2,833	1,375	73.9	1,225	162	11.6
함부르크	1,744	883	74.4	1,051	98	11.3
니더작센	7,994	3,749	71.9	3,524	457	11.6
브레멘	663	311	71.1	381	53	16.8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18,058	8,425	70.7	8,409	1,058	12.0
헤센	6,092	2,974	73.1	3,030	297	9.7
라인란트-팔츠	4,059	1,959	73.4	1,779	179	8.8
바덴-뷔템베르크	10,735	5,388	75.3	5,401	385	7.0
바이에른	12,469	6,270	75.5	6,356	505	7.8
자알란트	1,050	481	70.0	506	54	10.7
<b>구연방주 (합계)</b>	<b>65,697</b>	<b>31,816</b>	<b>73.2</b>	<b>31,662</b>	<b>3,247</b>	<b>9.9</b>
베를린	3,395	1,760	72.7	1,539	319	19.0
<b>독일 (합계)</b>	<b>82,438</b>	<b>40,625</b>	<b>73.7</b>	<b>38,783</b>	<b>4,861</b>	<b>11.7</b>

국내총생산(GDP) (2005년) <sup>5)</sup>			각종산업분야수익 (2005년) <sup>6)</sup>		수출비중 <sup>7)</sup>	총지출 중 조세명목지 출 <sup>8)</sup>	인건비 지출 <sup>8)</sup>	투자 명목 지출 <sup>8)</sup>	이자지출 <sup>8)</sup>
명목GDP (10억 유로)	명목1인 당 GDP (유로)	2000년 물가기준 GDP (2000=100)	10억 유로	2005/ 2004 변화율 (%)	(2005년) (%)	(2005년 잠정치)(%)	(2005년 잠정치)(%)	(2005년 잠정치)(%)	(2005년 잠정치)(%)
31.3	18,264	100.5	9.6	7.8	19.8	41.3	25.7	18.5	6.7
48.1	18,755	101.0	18.7	4.7	21.8	44.8	21.7	18.1	8.1
48.1	19,376	104.4	29.7	14.2	23.4	41.6	22.8	19.7	8.6
44.7	19,047	106.2	24.6	5.5	29.2	43.0	26.9	17.8	7.8
85.8	20,033	108.8	44.6	9.6	30.6	46.0	26.8	23.7	3.8
<b>257.9</b>	<b>19,267</b>	<b>105.0</b>	<b>157.7</b>	<b>7.0</b>	<b>27.3</b>	<b>43.8</b>	<b>24.9</b>	<b>20.2</b>	<b>6.7</b>
69.0	24,381	102.5	32.1	6.0	41.2	60.4	39.2	8.1	10.5
80.0	45,992	102.2	65.3	1.6	19.2	73.6	33.6	10.8	10.1
188.4	23,534	100.1	157.5	7.4	40.1	64.8	38.5	8.5	10.8
24.5	36,927	103.9	18.8	-10.0	53.9	43.5	30.9	19.0	12.1
489.1	27,080	102.0	322.6	4.6	38.7	68.6	40.1	13.3	9.0
197.7	32,454	101.3	90.0	3.9	43.2	74.2	38.6	8.7	7.7
97.5	24,007	102.3	69.5	5.1	47.3	62.1	40.4	11.1	9.3
330.7	30,818	105.2	261.9	4.2	46.9	70.3	40.5	8.6	6.2
403.7	32,408	109.3	290.3	3.4	45.4	75.5	43.1	11.4	3.0
27.5	26,090	105.8	22.7	10.1	44.5	56.7	39.2	10.6	11.7
<b>1,908.0</b>	<b>29,045</b>	<b>103.9</b>	<b>1,330.7</b>	<b>2.1</b>	<b>42.1</b>	<b>69.5</b>	<b>40.1</b>	<b>10.9</b>	<b>7.9</b>
79.6	23,470	95.6	30.4	-0.5	30.4	37.6	30.8	13.4	11.1
<b>2,245.5</b>	<b>27,229</b>	<b>103.7</b>	<b>1,488.4</b>	<b>4.6</b>	<b>40.5</b>	.	.	.	.

<sup>1)</sup> 신연방주: 베를린 제외, 구연방주: 베를린 제외(단, 실업률 통계의 신연방주 합계는 베를린지역 포함).

<sup>2)</sup> 1995년 유로 거시경제지표(ESVG) 산출기준. 베를린=베를린 전역. 신연방주=베를린 제외. 구연방주=베를린제외. 2006년 3월 현재.

<sup>3)</sup> 제조업 및 광업분야의 종업원 2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통계.

<sup>4)</sup> 총 수익에서 해외수출이 차지하는 비율. 신연방주: 구동베를린 포함. 구연방주: 구서베를린 포함.

<sup>5)</sup> 각 연방정부예산 총 지출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 신연방주: 베를린 제외. 구연방주: 베를린 제외. 2006년 3월 현재.

<sup>6)</sup> 각 연방정부예산 총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신연방주: 베를린 제외. 구연방주: 베를린 제외.

<sup>7)</sup> 총 매출에서 해외매출이 차지하는 비율.

<sup>8)</sup> 각 연방정부예산 총 지출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 신연방주: 베를린 제외. 구연방주: 베를린 제외. 2006년 3월 현재.

출처: 연방통계청, 연방노동증개소 '각 연방주 거시경제지표 연구분과' 및 '취업인구 조사분과', 연방재무부, 연방정부 자체.

## II. 국민소득

### 2.1. 경제 전반에 관한 주요통계지표 / 신연방주 vs. 구연방주<sup>1)</sup>

		구연방주 <sup>2)</sup>	
		1991	2005
1995년 가격기준 국내총생산(GDP) <sup>1)</sup>	10억 유로	1,364.0	1,908.0
거주인구 <sup>3)</sup>	천명	61,914	65,698
취업인구(국내) <sup>1)</sup>	천명	30,153	31,662
피고용자(국내) <sup>1)</sup>	천명	27,098	28,120
실업인구 <sup>4)</sup>	천명	1,594	3,247
경상가격기준 인구 1인당 GDP	유로	22,030	29,045
경상가격기준 취업인구 1인당 GDP	유로	45,235	60,260
* 경상가격기준 취업인구 노동시간 당 GDP <sup>8)</sup>	유로	37.11	42.45
1995년 물가기준 인구 1인당 GDP	2000=100		102.6
1995년 물가기준 취업인구 1인당 GDP (노동생산성)	2000=100		103.9
1995년 물가기준 취업인구 노동시간당 GDP	2000=100		105.7
총 인건비 <sup>1)</sup>	10억 유로	723.5	955.6
근로자 1인당 인건비 <sup>1)</sup>	유로	26,698	33,982
근로자 노동시간당 인건비 <sup>1), 8)</sup>	유로	22,84	25.29
근로자 노동시간당 인건비 <sup>1)</sup>	2000=100		105.7
총임금 및 급여 <sup>1)</sup>	10억 유로	589.7	769.3
근로자 1인당 총 임금 및 급여 <sup>1)</sup>	유로	21,763	27,356
인구 1인당 시설, 설비투자 <sup>3), 5)</sup>	유로	4,800	4,900
인구 1인당 자본금 <sup>2), 6)</sup>	유로	114,000	139,000
임금단위비용(절대치) <sup>1), 7)</sup>	%	61.55	59.58

신연방주 <sup>2)</sup>		독일전체에서 구연방주가 차지하는 비율 <sup>2)</sup>		독일전체에서 신연방주가 차지하는 비율 <sup>2)</sup>	
1991	2005	1991	2005	1991	2005
170.6	337.5	.	.	11.1	15.0
18,071	16,740	.	.	22.6	20.3
8,468	7,121	.	.	21.9	18.4
8,003	6,308	.	.	22.8	18.3
1,023	1,614	.	.	39.1	33.2
9,442	20,177	42.9	69.5	.	.
20,150	47,402	44.5	78.7	.	.
25.26	31.59	68.1	74.4	.	.
	105.7			.	.
	107.8			.	.
	112.3			.	.
121.5	174.5	.	.	14.4	15.4
15,185	27,662	56.9	81.4	.	.
16.65	19.32	72.9	76.4	.	.
	109.2				
101.4	140.5			14.7	15.4
12,676	22,274	58.2	81.4		
3,300	3,900	69	79	.	.
51,000	103,000	45	74	.	.
		*구연방주에 대한 신연방주 우위분			
65.91	61.16	7.1	2.7	.	.

1) 1995년 유럽 거시경제지표(ESVG) 산출기준. 2006년 3월 현황.

2) 신연방주: 베를린 포함. 구연방주: 베를린 제외.

3) 1991년: 연평균 수치. 2005년: 연말수치.

4) 1991년: 연평균 수치. 신연방주: 구동베를린 포함. 구연방주: 구 서베를린 포함/2004년: 신연방주: 베를린 전역 포함. 구연방주: 베를린 제외.

5) 이포(ifo) 경제연구소 추정치(2005년 7월 현재) - 건물투자부문 통계: 연방통계청 및 연방정부 공동 조사자료. 시설/설비투자=신규건축물이나 시설, 기타 설비물에 대한 투자 (당시 물가기준). 신연방주: 구 동베를린 포함. 구연방주: 구서베를린 포함.

6) 1991, 2003.

7) 명목 GDP 100유로 당 피고용인 급여로 지출되는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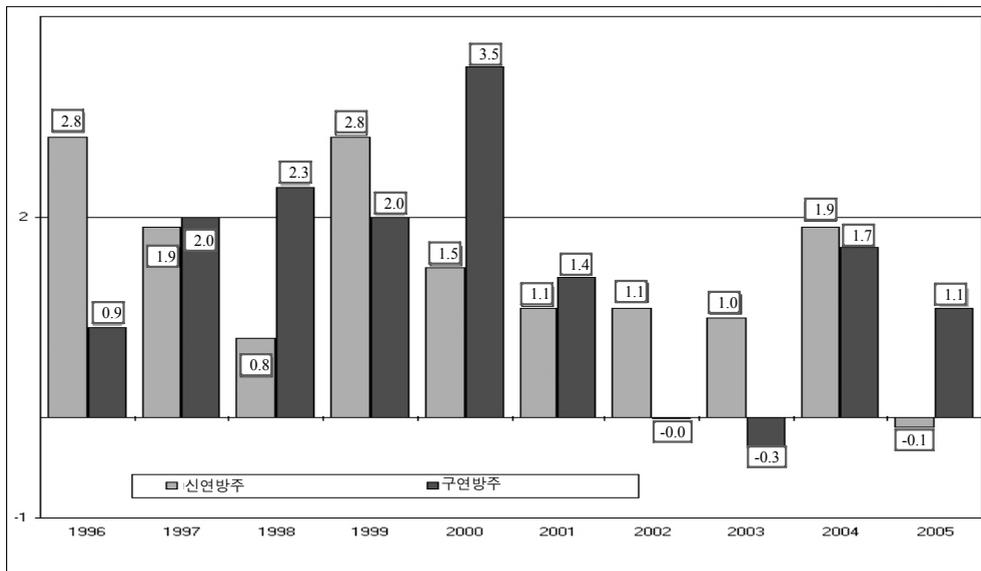
8) 1998, 2005.

출처: '각 연방주 거시경제지표 연구분과' 및 '연방 및 각 연방주 취업인구 조사분과', 이포(ifo) 경제연구소(투자관련통계), 연방통계청, 연방정부 자체산출통계(비교, 대조통계).

## 2.2. 국내 총생산(GDP) / 신연방주 vs. 구연방주

### 2.2.1. 전년대비 GDP 실질 성장률<sup>1)</sup>

(단위: %)



<sup>1)</sup> 1995년 유럽 거시경제지표(ESVG) 산출기준; 1995년 물가기준; 신연방주 vs. 구연방주: 각각 베를린지역 제외.  
2004년 8월/2005년 2월 현황.  
출처: 연방주 통계청 '거시경제지표 연구분과'.

### 2.2.2. 취업인구 1인당 GDP 성장률(생산성)<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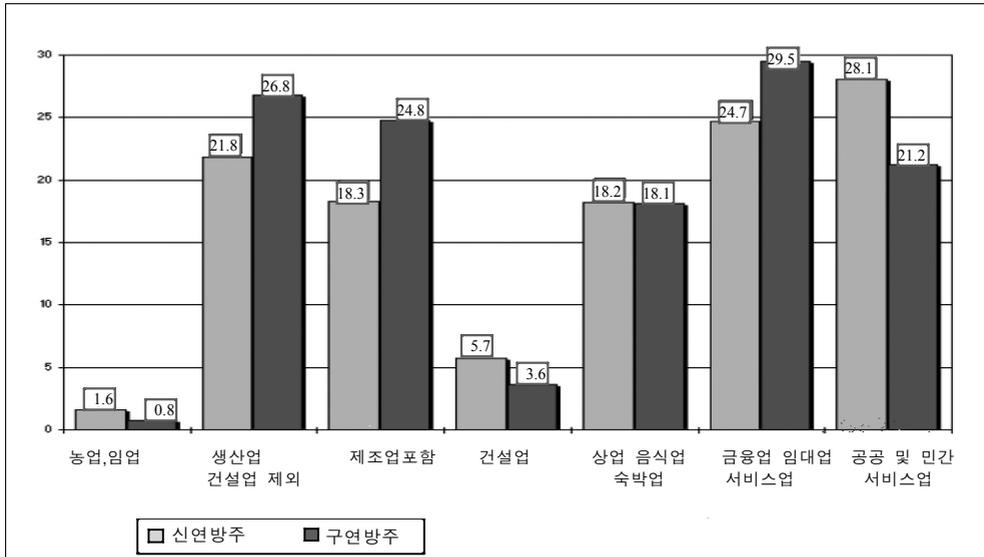
(전년대비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구연방주	1.0	1.7	0.8	0.4	1.1	0.5	0.3	0.6	1.2	1.1
신연방주	3.7	3.2	0.5	2.6	2.4	2.8	2.7	2.1	1.9	1.2

<sup>1)</sup> 위 도표와 동일.  
출처: 연방주 통계청 '거시경제지표 연구분과', '연방 및 각 연방주 취업인구 조사분과'.

### 2.3. 2004년 경제분야별 총부가가치 생산비중 (분야별 총부가가치/경제전반 총부가가치)<sup>1)</sup>

(경상가격 기준)



출처: 연방주 통계청 '거시경제지표 연구분과'.

## 2.4. 신연방주 경제분야별 총부가가치 성장률<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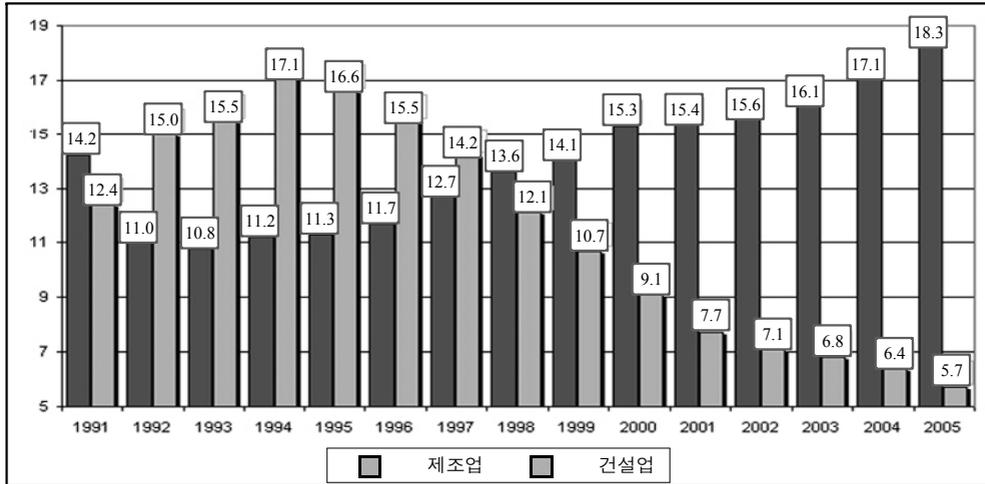
(1995년 물가 기준, 전년동기대비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b>경제전반 총부가가치 총계</b>	<b>3.2</b>	<b>2.0</b>	<b>0.8</b>	<b>2.7</b>	<b>1.9</b>	<b>1.3</b>	<b>1.3</b>	<b>1.1</b>	<b>2.3</b>	<b>0.1</b>
농업, 임업, 어업	-1.2	9.2	-3.3	13.1	-7.9	7.4	-9.0	-1.5	20.6	-5.2
생산업 (건설업 제외)	8.9	5.5	2.0	5.5	10.1	2.8	1.9	5.8	7.9	4.5
* 제조업 포함	5.7	11.2	4.9	7.4	12.8	4.0	2.6	6.1	9.2	6.0
건설업	-4.4	-4.7	-11.2	-7.6	-12.4	-13.3	-5.7	-3.4	-2.5	-9.4
상업, 음식숙박업, 교통분야	2.2	0.1	3.1	5.4	2.4	2.6	2.7	-0.8	1.5	1.0
금융업, 임대업, 서비스업	9.2	6.2	7.9	3.5	4.2	6.9	4.5	2.2	2.1	0.9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업	1.7	1.3	-0.1	2.3	1.1	-0.6	0.4	-0.5	-0.8	-1.9

<sup>1)</sup> 1995년 유럽 거시경제지표(ESVG) 산출기준; 2005년 8월/2006년 3월 현황; 신연방주: 베를린 제외.  
출처: 연방주 통계청 '거시경제지표 연구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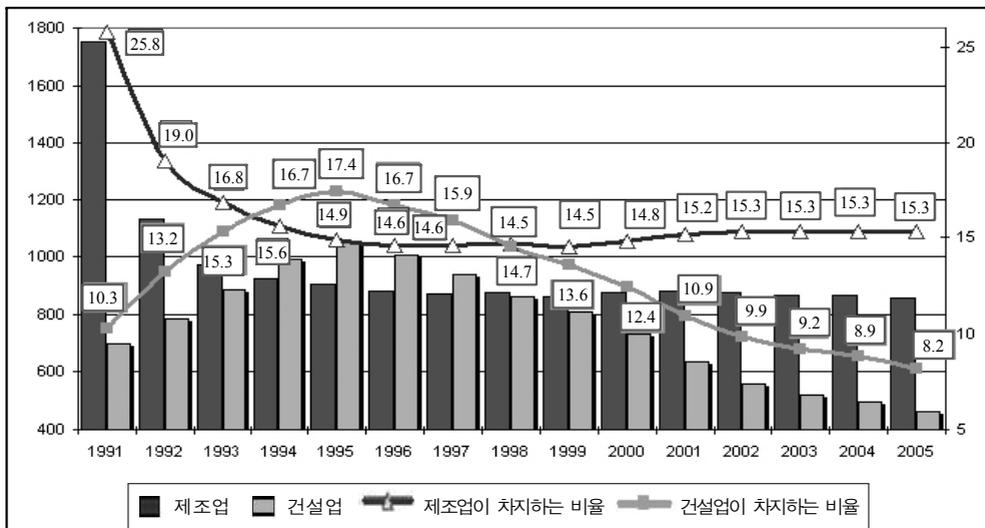
## 2.5. 신연방주지역의 제조업 및 건설업 총부가가치가 신연방주 경제전반 총부가가치 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율<sup>1)</sup>

(경상가격 기준, %)



<sup>1)</sup> 1995년 유럽 거시경제지표(ESVG)산출기준; 베를린을 제외한 신연방주지역; 2005년 8월/2004년 3월 현황.  
출처: 연방주 통계청 '거시경제지표 연구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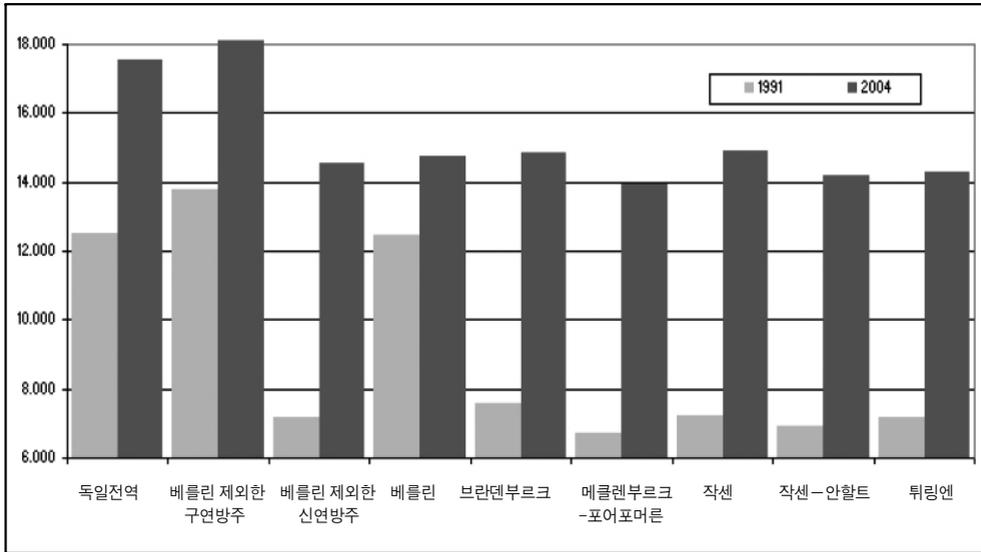
## 2.6. 신연방주지역의 제조업 및 건설업 취업인구<sup>1)</sup>



<sup>1)</sup> 1995년 유럽 거시경제지표(ESVG)산출기준; 베를린을 제외한 신연방주지역; 2005년 2월/2004년 8월 현황;  
도표 좌측수치: 취업인구(천명)/도표 우측수치: 각 분야 취업인구가 전체 취업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출처: 연방주 통계청 '거시경제지표 연구분과', '연방 및 각 연방주 취업인구 조사분과'.

## 2.7.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수입<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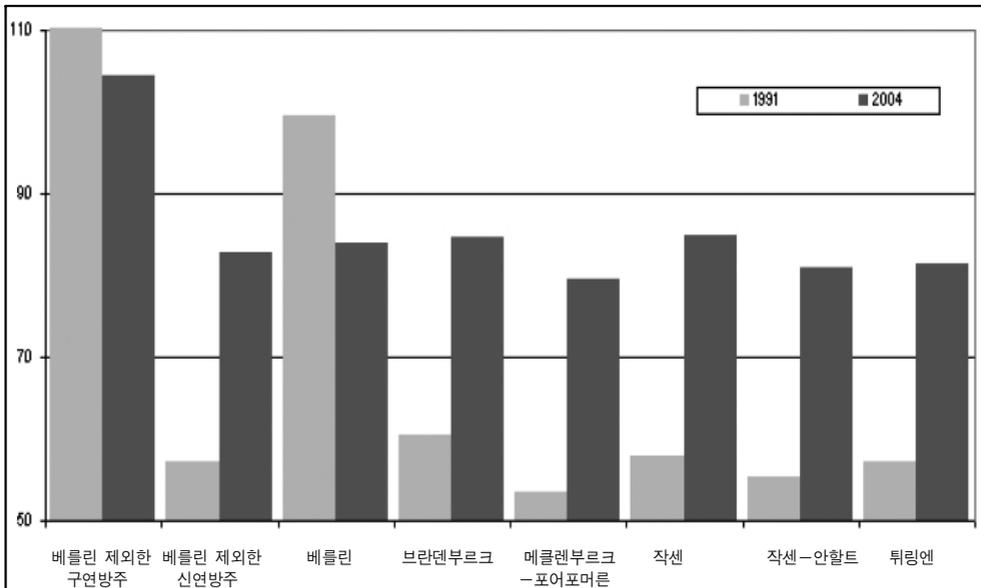
(단위: 유로)



<sup>1)</sup> 비영리 시설 민간단체까지 포함한 각 가구당 가용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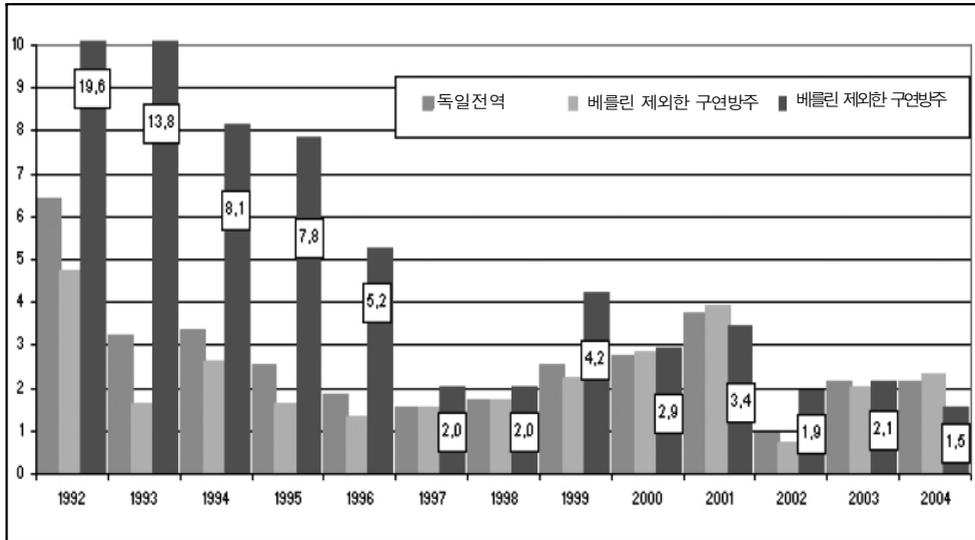
## 1991년과 2004년 비교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독일전체=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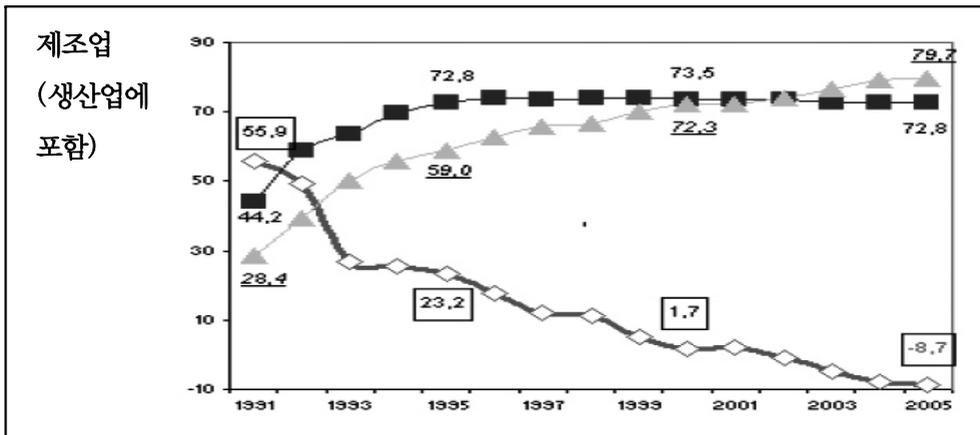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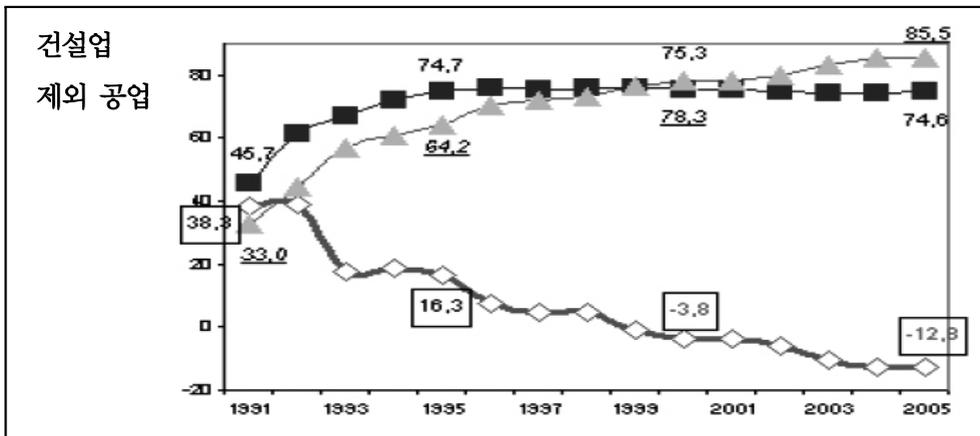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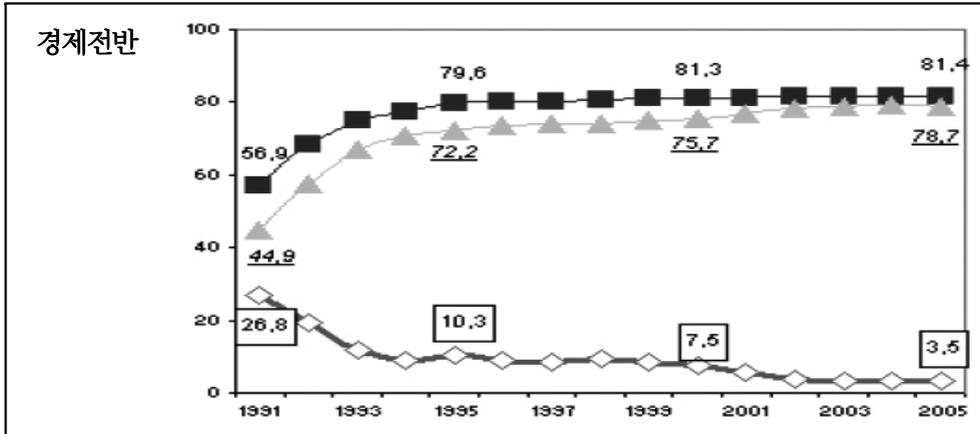
##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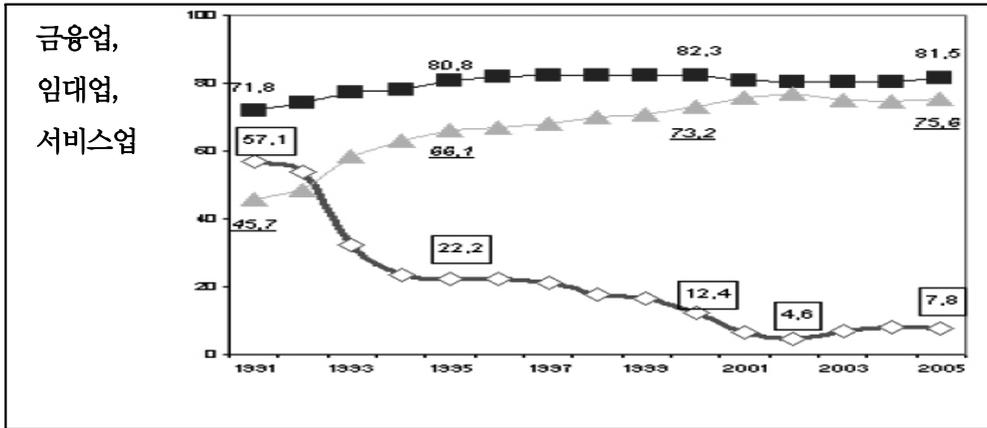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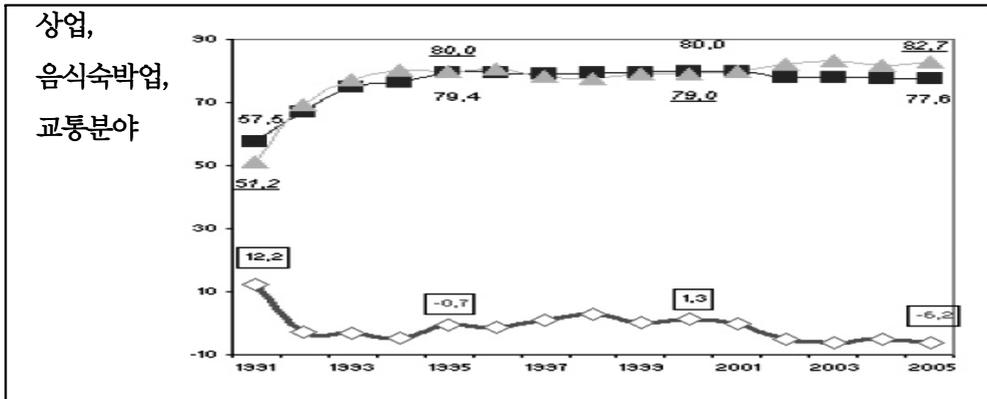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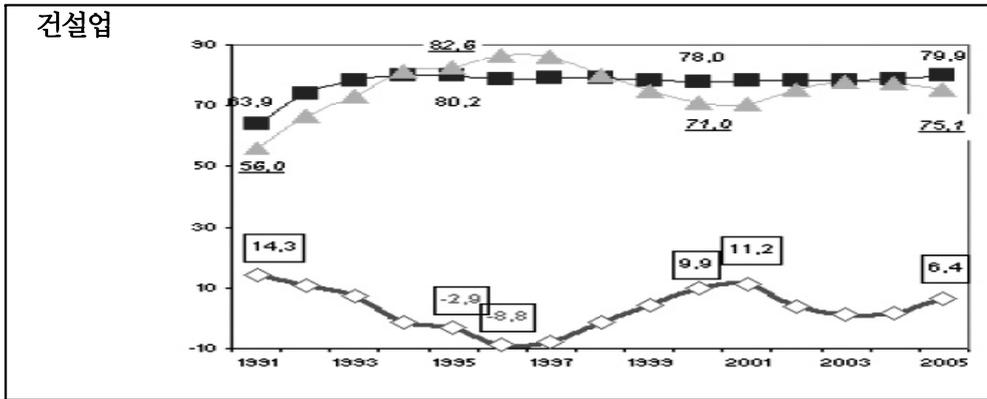
(전년대비 변화율 %)



출처: 연방주 통계청 '거시경제지표 연구분과'. 2005년 8월 현황.

2.8. 임금비용, 생산성<sup>1)</sup> 및 임금단위비용<sup>2)</sup>/신연방주 vs. 구연방주





◆ 구연방주대비 임금단위비용 신연방주 우위부(%)	■ 구연방주 취업인구 1인당 총수입(%)
▲ 구연방주 취업인구 1인당 생산성(%)	

<sup>1)</sup> 1995년 유럽 거시경제지표(ESVG)산출기준: 구연방주는 베를린 포함, 신연방주는 베를린 제외.

<sup>2)</sup> 취업자 1인당 총생산비용에서 노동자 1인당 기업 내 지출된 비율(%).

출처: 연방 노동경제부, 거시경제지표 연구분과.

### Ⅲ. 경제지표

#### 3.1. 신연방주지역 내 생산변화 추이

(생산지표 2000=100 - 최종수치)

	신연방주 및 동 베를린				
	1995	1996	1997	1998	1999
<b>공업분야 전체</b>	<b>87.8</b>	<b>89.3</b>	<b>91.4</b>	<b>93.6</b>	<b>97.5</b>
주요건설부문 제외	75.6	78.6	83.0	88.3	93.4
에너지 및 주요건설부문 제외	71.6	75.6	82.2	87.4	92.7
광업 및 토지, 광물채취 및 가공처리	73.2	76.3	81.4	87.2	92.8
반제품생산자	66.7	70.5	78.9	85.2	90.6
투자재생산자	78.5	77.9	81.8	88.2	93.3
내구소비재생산자	63.9	69.1	76.0	84.2	91.8
소모용품생산자	72.9	81.4	87.9	90.3	95.0
소비용품생산자	71.8	79.9	86.4	89.5	94.6
에너지	93.6	92.6	86.8	92.2	96.7
Energy(E부분 대치)	89.9	84.2	73.5	85.5	94.3
광산업	136.9	127.2	116.4	102.2	101.1
석탄, 이탄, 석유, 천연가스 등	130.2	120.3	108.1	93.9	92.5
기타 광물, 토양 채굴업	150.4	141.1	133.1	119.0	118.5
<b>제조업</b>	<b>71.2</b>	<b>74.7</b>	<b>80.3</b>	<b>86.7</b>	<b>92.5</b>
식품 및 담배가공업	71.4	81.4	88.4	90.1	96.2
섬유 및 의류업	80.7	83.5	88.5	94.3	94.7
가죽, 모피제조업	103.9	96.1	98.2	108.0	91.7
목재업(가구생산자 제외)	51.8	58.5	63.3	78.7	89.8
제지업, 출판 인쇄업	82.1	85.3	95.6	102.5	102.2
코크스 및 정유	77.4	73.0	62.8	82.9	94.9
화학제품 생산업	58.1	66.1	71.4	73.7	79.8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업	62.0	67.4	75.6	81.0	90.1
유리, 도자기 생산업 및 광물, 토양 가공업	92.0	95.4	98.8	96.8	101.9
금속 생산 및 가공업	68.4	71.7	78.2	86.5	91.8
기계/설비 생산업	77.7	79.5	86.5	90.7	93.2
사무실 기기/전자기기 생산업	47.9	53.2	65.7	72.3	81.2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생산업	84.5	76.6	76.0	86.4	91.6
가구, 장신구, 악기, 재활용 제품 생산업	73.5	76.5	83.0	91.6	94.2
에너지 및 급수시설	96.6	99.3	97.4	97.6	98.7
<b>주요건설사업</b>	<b>132.3</b>	<b>127.8</b>	<b>121.9</b>	<b>112.8</b>	<b>112.2</b>
지상건설사업	140.1	138.5	132.3	120.7	116.1
지하건설사업	120.1	111.2	105.6	100.3	106.2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					베를린 포함한 신연방주	
2000	2001	2002	2003	2004	2004	2005
<b>100</b>	<b>100.5</b>	<b>100.5</b>	<b>104.3</b>	<b>110.0</b>	<b>102.1</b>	<b>108.1</b>
100	103.8	105.8	111.7	120.1	110.1	119.1
100	104.8	107.5	113.6	123.5	111.0	121.3
100	104.4	106.6	112.8	121.8	110.7	120.7
100	103.7	109.5	120.2	135.4	114.6	122.4
100	107.2	108.3	111.1	118.7	117.6	122.7
100	106.4	100.3	97.3	106.4	93.5	97.6
100	103.8	104.9	109.1	114.2	102.0	121.7
100	104.1	104.3	107.7	113.2	101.0	118.8
100	99.1	98.3	102.8	104.3	106.1	108.8
100	99.8	97.7	104.0	103.8	107.8	114.1
100	100.8	104.4	107.8	104.1	99.6	97.5
100	106.6	107.9	107.5	105.9	108.8	105.9
100	88.8	97.3	108.4	100.3	80.9	80.5
<b>100</b>	<b>104.5</b>	<b>106.7</b>	<b>112.9</b>	<b>122.4</b>	<b>111.1</b>	<b>121.4</b>
100	103.3	101.9	103.3	109.4	102.0	129.1
100	99.4	90.7	89.5	84.2	78.3	75.0
100	101.0	101.6	100.7	102.7	92.6	90.7
100	101.4	115.9	126.5	143.5	114.0	120.6
100	103.7	113.7	128.3	135.4	113.2	122.4
100	97.7	94.6	102.9	103.2	107.5	116.6
100	100.2	113.1	117.6	139.0	111.8	126.3
100	102.6	104.2	117.2	126.9	111.6	115.5
100	94.2	92.3	93.4	94.8	91.7	90.8
100	105.5	105.5	110.0	116.8	109.5	109.6
100	106.0	103.8	104.9	113.7	107.4	112.2
100	114.0	124.5	141.8	167.9	129.4	147.0
100	108.8	113.6	119.7	130.4	143.2	149.4
100	103.0	103.2	103.0	110.5	93.3	97.3
100	98.5	98.7	101.8	104.7	104.7	104.6
<b>100</b>	<b>88.5</b>	<b>81.2</b>	<b>77.9</b>	<b>73.4</b>	<b>73.2</b>	<b>68.5</b>
100	83.5	74.4	70.3	64.5	64.7	59.1
100	96.2	91.8	89.8	89.3	86.4	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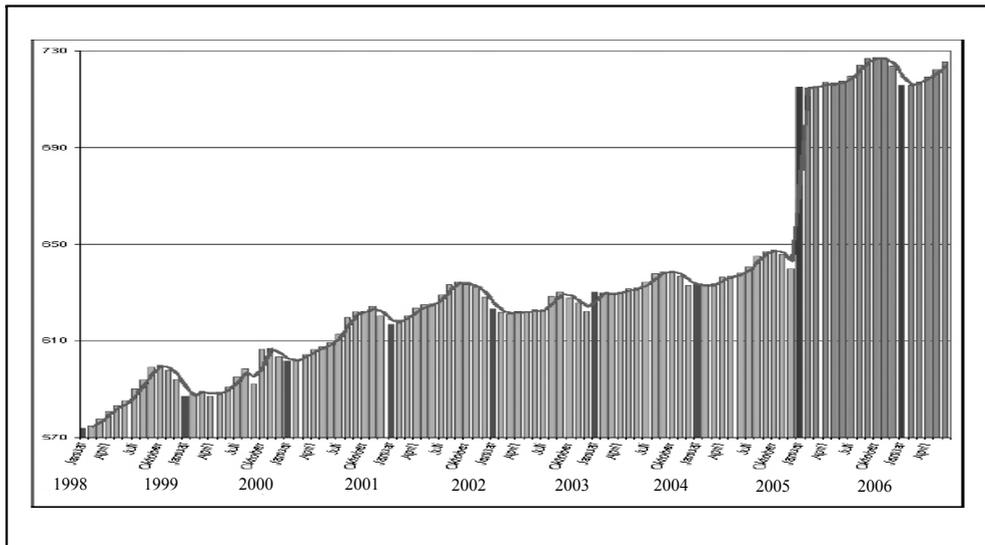
주: 2003년 기준에 따른 업종구분. 통계자료는 2000년 기준(종업원 20인 이상인 기업체).

출처: 연방통계청.

### 3.2. 제조업 및 광물, 토양 채굴분야 종사자 변화추이

년도	독일전역	구연방주	구동베를린 및 신연방주	독일전역	구연방주	구동베를린 및 신연방주
	해당분야 종사자(천 명)			전년대비 변화율(%)		
1997	6,416	5,834	581	-1.6	-1.7	-1.1
1998	6,405	5,817	588	-0.2	-0.3	1.1
1999	6,368	5,773	596	-0.6	-0.8	1.3
2000	6,376	5,764	613	0.1	-0.2	2.9
2001	6,390	5,764	627	0.2	0.0	2.3
2002	6,209	5,584	624	-2.9	-3.2	-0.4
2003	6,133	5,500	633	-2.6	-2.9	0.2
2004	6,015	5,376	640	-1.9	-2.3	1.1
2005	5,928	5,208	720	-1.4	-1.6	-0.3
2006	5,836	5,144	719	-1.0	-1.2	0.4

#### 신연방주 및 구동베를린지역 제조업 종사자(1,000명)



출처: 연방통계청(광업 및 제조업에 관한 월말보고서).

2003년부터 조사범위 확대, 전년통계와의 일대일 불가능, 2005년도까지: 신연방주에 동베를린 포함, 구연방주에 서베를린 포함; 2005년부터: 신연방주에 베를린 포함, 구연방주에 베를린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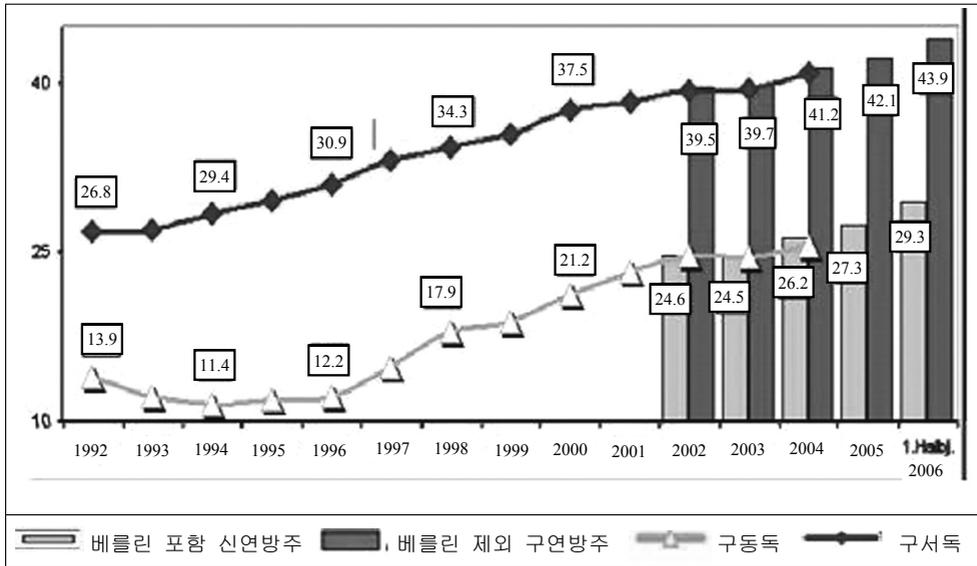
### 3.3. 신연방주의 주택건설 관련 건설허가건수 및 완공건수<sup>1)</sup>

	건설허가건수	*신축건물	완공건수	*신축건물
1991	5,484	5,144	16,670	16,430
1992	26,525	24,640	11,477	11,302
1993	82,529	77,138	23,598	21,879
1994	126,088	116,561	67,704	62,495
1995	180,011	164,010	104,214	95,872
1996	186,155	165,074	143,366	130,421
1997	155,368	133,606	177,829	160,783
1998	113,973	91,693	128,447	110,748
1999	91,874	73,267	102,865	82,963
2000	66,104	54,886	86,284	70,533
2001	50,036	42,719	58,254	48,558
2002	42,103	36,368	49,007	41,339
2003	44,568	39,434	41,836	36,222
2004	38,680	33,723	39,718	35,263
2005	32,994	29,383	35,552	31,177

<sup>1)</sup> 거주 및 비거주 건물: 기존건물의 보수공사도 포함; 2004년 임시통계.  
출처: 연방통계청.

### 3.4. 광업 및 제조업 수출비중<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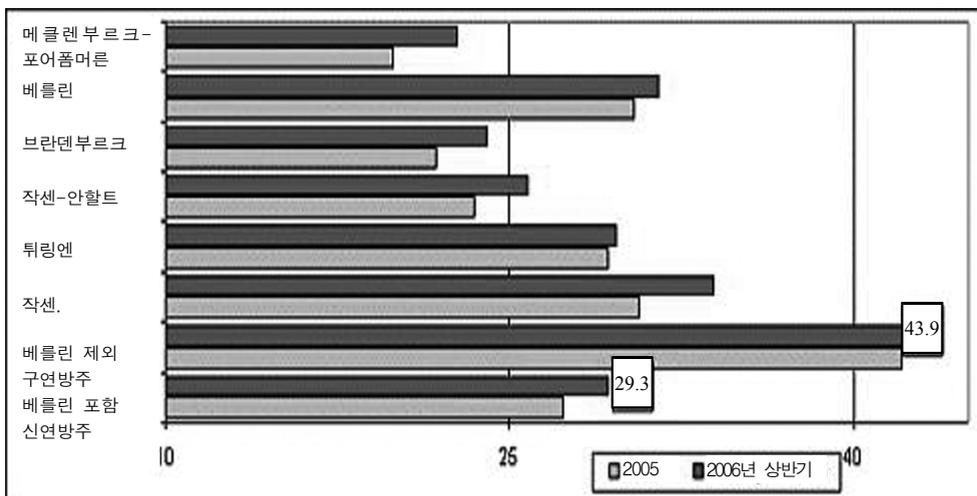
(단위: %)



<sup>1)</sup> 종업원 20인 이상 기업의 총이윤에서 해외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신연방주: 구동베를린 포함한 구동독 전역; 구연방주: 구서독 전역; 1995년 경제부문 분류기준을 변경하여, 1995년 전후 통계자료 일대일 비교 불가능. 출처: 연방통계청, 자체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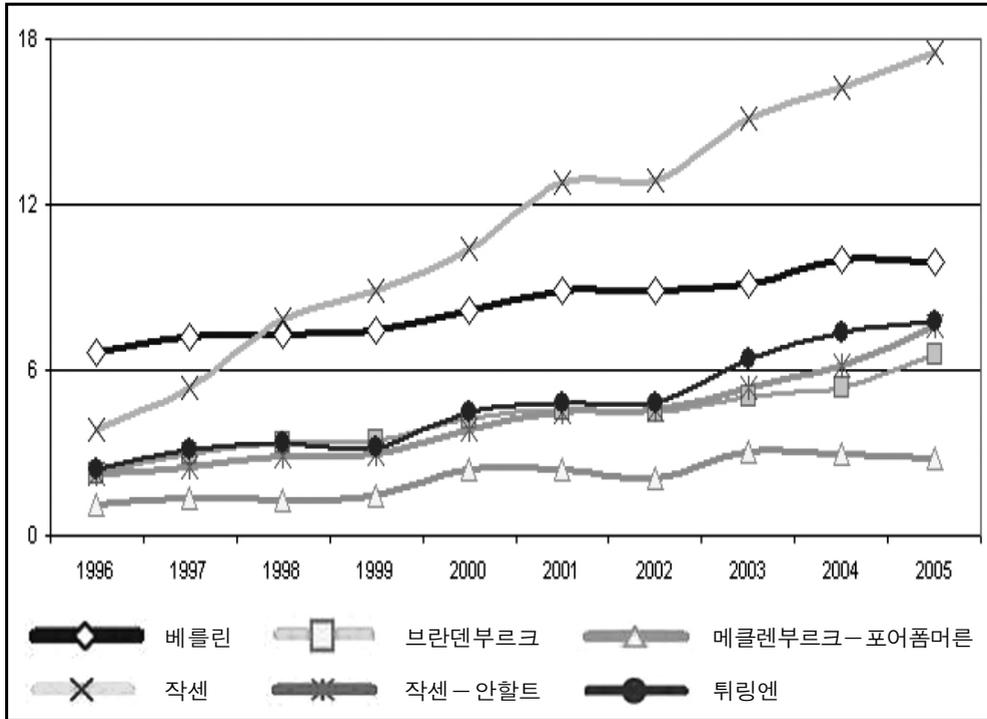
### 각 연방주별 수출비중

(단위: %)



### 3.5. 각 연방주별 수출액 변화

(단위: 100만 유로)



출처: 연방통계청.

## IV. 노동시장지표

### 4.1. 신연방주지역<sup>1)</sup> 노동시장 주요지표

(2006년 7월 기준)

조사대상군	2006년	
	7월	6월
<b>사회보험가입 정규노동자</b>		
-당월 말 현황		
<b>실업인구</b>	1,425,826	1,432,687
여성 49.3%	702,634	692,980
남성 50.7%	723,133	739,683
25세 이하 12.6%	179,532	160,101
(20세 이하 청소년 2.6%)	37,081	26,498
50세 이상 27.2%	388,228	395,844
(55세 이상 12.5%)	177,852	179,539
<b>실업률</b>		
-민간인 취업 총인구 대비	16.7	16.8
-민간인 비정규직 총인구 대비	18.6	18.7
남성	18.4	18.9
여성	18.7	18.5
25세 이하 청년	17.8	15.8
(20세 이하 청소년 포함)	11.5	8.2
<b>실업수당 수혜자</b>		
실업수당 <sup>3)</sup>	398,332	395,155
실업수당 II <sup>3)</sup>	1,849,465	1,873,145
생활보조금 <sup>3)</sup>	532,118	538,015
<b>등록 일자리 수<sup>4), 5)</sup></b>		
-당월 추가분(총계)	68,349	67,904
당해 초부터의 누적통계	454,400	386,051
-당월 말 현황	141,601	135,246
정부 비지원 일자리 수 <sup>6)</sup>	68,828	65,334
즉시 취업 가능 일자리 수	118,941	113,830
<b>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참여자</b>		
-당월 말 현황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직원 및 상담		
직장생활명행		
노동장출정책		
<b>단기직 지원</b>	-	11,417
	전월(前月) 대비 변화추이	
<b>시즌정산 이후 통계</b>	2006.07	2006.06
-실업인구	-26,000	-25,000
-등록 일자리 수(정부지원 일자리 포함)	5,000	7,000
-정부 비지원 일자리 수 <sup>6)</sup>	5,000	5,000
-민간인 취업총인구 대비 실업인구	16.9	17.2

2006년		전년동기대비 변화추이(실업률-전년동계)			
5월	4월	7월 <sup>2)</sup>		6월	5월
		절대치	%	%	%
4,984,000	4,927,200	14,166	0.3	-	0.3
1,489,803	1,589,486	-170,880	-10.7	-10.0	-9.3
708,123	732,480	-59,278	-7.8	-7.5	-7.3
781,627	856,960	-111,657	-13.4	-12.3	-11.0
168,889	184,556	-41,149	-18.6	-17.0	-15.1
27,260	29,872	-10,427	-21.9	-15.4	-10.9
407,356	428,689	-30,720	-7.3	-6.8	-6.3
182,433	189,051	-6,572	-3.6	-3.1	-2.9
17.4	18.5	18.6	-	18.5	19.0
19.4	20.4	20.4	-	20.4	20.7
19.9	21.5	20.9	-	21.2	21.7
18.9	19.2	19.9	-	19.6	19.8
16.7	17.5	21.0	-	18.3	18.2
8.5	8.7	13.9	-	9.2	8.4
412,226	486,323	-100,531	-19.6	-	-19.6
1,880,294	1,865,420	-	-	-	-
531,365	527,693	-	-	-	-
71,004	77,301	-2,971	-4.2	-1.0	6.0
318,147	247,143	45,637	11.2	14.4	18.3
130,894	127,161	40,409	39.9	41.6	33.5
60,055	55,040	27,617	67.0	57.8	33.3
104,581	85,185	43,951	58.6	64.6	48.6
	447,167		-14.7		
	55,870		-21.2		
	144,240		-7.7		
	144,240	-12,099	-7.7	-11.4	-14.4
	170,299	42,266	33.0	30.7	40.7
13,630	16,639	-15,151	-57.0	-57.0	-52.8
전월(前月) 대비 변화추이					
2006.05	2006.04	2006.03	2006.02	2006.01	2005.12
-33,000	-16,000	-5,000	1,000	19,000	-27,000
0	6,000	-2,000	-3,000	1,000	-1,000
5,000	3,000	2,000	1,000	-1,000	
17.5	17.7	17.9	18.0	18.0	17.7

- 1)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 주.  
2) 당월 최신통계와 전년 동월통계 비교 지난 두 달간 실업자 수당에 따른 추정치.  
3) 조사당월 및 전월(前月) 추정치.  
4) 기업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2004년 4사분기 노동청에 등록된 일자리 수는 실제 공석의 30.3%였다.  
5) 2004년에는 등록일자리 중 평균 74%만이 실제 공석이였다. 추가분 중 52%가 즉각 고용을 원하는 자리였는데 이 중 30일에 걸친 모집기간 후 실제 배분된 일자리는 49%였다.  
6) 임시고용전담기관(Personal Service Agenturen), 노동창출정책(Arbeitsbeschaffungsmaßnahmen), 노동창출 인프라정책(Beschäftigung schaffenden Infrastrukturförderung)이 알선한 일자리 및 의무저임금노동 제외.  
출처: 연방노동증개소.

4.2. 신연방주 노동시장정책 프로젝트 참여자<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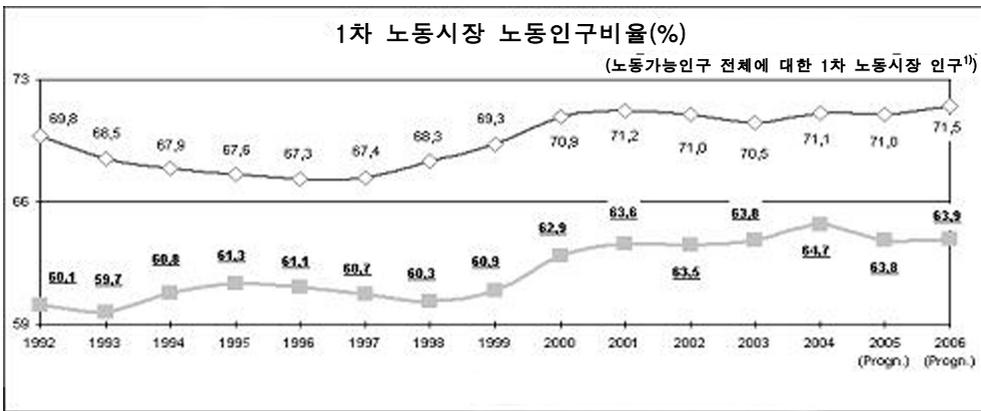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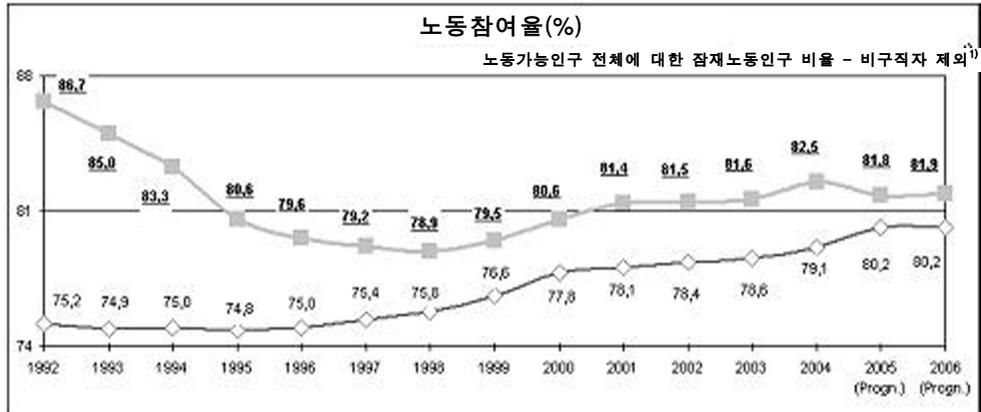
(당해 연도별 평균, 1,000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b>실업인구</b>	<b>1,375</b>	<b>1,344</b>	<b>1,359</b>	<b>1,374</b>	<b>1,411</b>	<b>1,624</b>	<b>1,599</b>	<b>1,614</b>
<b>정규직 직접지원</b>	<b>158</b>	<b>185</b>	<b>120</b>	<b>108</b>	<b>112</b>	<b>140</b>	<b>150</b>	<b>145</b>
<b>임금비용지원</b>	<b>146</b>	<b>171</b>	<b>106</b>	<b>94</b>	<b>97</b>	<b>107</b>	<b>81</b>	<b>40</b>
신규채용보조금	17	26	40	53	65	98	71	32
신규사업장 고용 보조금	1	3	5	6	5	8	8	4
자회사 및 지사 고용보조금	-	-	-	-	0	0	1	0
고령노동자 수입안정 보조금	-	-	-	-	-	1	2	1
신연방주경제기업 구조조정 지원책	-	-	-	-	0	0	1	1
구조조정조치보조금(OfW) <sup>2)</sup>	115	131	51	23	13	3	-	-
장기 실업자 취업보조지원	13	11	10	12	14	4	-	-
취업지원수당	-	-	-	-	-	-	-	2
<b>창업지원</b>	<b>12</b>	<b>14</b>	<b>14</b>	<b>14</b>	<b>15</b>	<b>33</b>	<b>68</b>	<b>106</b>
초기안정금	12	14	14	14	15	20	21	20
창업 특별보조금	-	-	-	-	-	13	47	86
<b>인력서비스 에이전시</b>	<b>-</b>	<b>-</b>	<b>-</b>	<b>-</b>	<b>-</b>	<b>4</b>	<b>9</b>	<b>6</b>
<b>직업 및 기타교육 지원</b>	<b>261</b>	<b>263</b>	<b>252</b>	<b>253</b>	<b>256</b>	<b>240</b>	<b>198</b>	<b>160</b>
직업 재교육	151	143	140	136	129	99	63	37
장애인 취업교육	38	37	38	38	41	46	45	42
독일어 교사자격증 취득과정	6	6	6	5	5	5	4	1
취업준비과정 지원정책	20	21	24	26	29	33	28	27
저소득층등 기타 하류층의 직업교육	46	56	44	48	52	57	58	53
<b>노동창출정책</b>	<b>198</b>	<b>217</b>	<b>193</b>	<b>159</b>	<b>130</b>	<b>113</b>	<b>104</b>	<b>163</b>
노동창출정책	151	168	146	116	86	73	65	35
전통적 구조조정 정책	47	49	47	43	44	39	28	12
노동창출성의 인프라 구축, 확대정책	-	-	-	-	0	1	2	1
총 고용 장려책	-	-	-	-	-	-	9	115
<b>적성시험 및 직업훈련 지원</b>	<b>14</b>	<b>16</b>	<b>19</b>	<b>21</b>	<b>22</b>	<b>31</b>	<b>31</b>	<b>20</b>
<b>기타 자유지원금</b>	<b>17</b>	<b>25</b>	<b>24</b>	<b>28</b>	<b>27</b>	<b>5</b>	<b>16</b>	<b>8</b>
<b>청소년 긴급프로그램</b>	<b>-</b>	<b>34</b>	<b>35</b>	<b>45</b>	<b>46</b>	<b>46</b>	<b>36</b>	<b>2</b>
<b>장기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지원</b>	<b>-</b>	<b>-</b>	<b>-</b>	<b>-</b>	<b>-</b>	<b>1</b>	<b>16</b>	<b>2</b>
<b>노년층 파트타임 취업지원 (연방노동중개서 등록건수만)</b>	<b>2</b>	<b>5</b>	<b>5</b>	<b>10</b>	<b>13</b>	<b>17</b>	<b>16</b>	<b>16</b>
<b>참가자 (총계)</b>	<b>650</b>	<b>745</b>	<b>648</b>	<b>624</b>	<b>606</b>	<b>597</b>	<b>576</b>	<b>628</b>
<i>참고</i>								
단기 비정규직	34	27	24	27	41	35	29	24
취업인구중 사회법 III조 423항에 의한 생활보조비 수급자	96	94	88	94	111	136	131	72

<sup>1)</sup> 2002년까지 동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지역; 2003년부터 베를린 전역을 포함한 신연방주지역.

<sup>2)</sup> OfW: Ost für Wirtschaftsunternehmen.

### 4.3. 신연방주 및 구연방주의 노동참여율



—■— 신연방주      —◇— 구연방주

<sup>1)</sup> 15~65세 사이 독일 거주 독일인. 신연방주: 베를린 제외/구연방주:베를린 포함.  
출처: 연방노동청, 연방통계청, 연방 및 각 연방주 취업인구 조사분과, 할레 경제연구소 산출(2006년 5월 현재).

## V. 재정지원지표

### 5.1. 신연방주지역 주요 지원 프로그램 현황

(2006년 6월 현재)

	1995		1997		1999		2000		2001	
	지원 건수	100만 유로								
<b>창업, 투자지원 및 자산성 대출 프로그램 (ERP/EKH)</b>										
-지원예정액	15,386	3,520	16,552	2,618	11,745	2,207	7,539	1,522	4,491	1,138
-실투자액	-	8,700	-	7,048		5,293		4,179		2,858
<b>주거환경 현대화 프로그램<sup>1)</sup></b>										
-지원예정액 (제1,2차)	53,900	4,880	47,660	4,988	44,754	5,918	8,643	1,299	4,833	750
<b>지역발전 지원 프로그램</b>										
-기업경제 지원예정액	4,549	4,302	4,540	4,475	4,999	4,313	3,848	3,336	3,320	2,818
-실투자액	-	10,016	-	7,364		9,178		7,339		6,459
-경제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예정액	896	4,007	664	2,089	467	1,351	424	1,235	362	764
-실투자액	-	3,064	-	1,630		1,041		938		571

<sup>1)</sup> 신연방주 재건 신용대출청의 보완 프로그램으로, 연방정부예산으로 이자삭감혜택을 받았다. 통계는 반올림한 수치이다.

2002		2003		2004		2005		2006 상반기		누적통계	
지원 건수	100만 유로	지원 건수	100만 유로	지원 건수	100만 유로	지원 건수	100만 유로	지원 건수	100만 유로	지원 건수	100만 유로
										1990년 3월 이래	
2,889	934 2,606	2,190	1,216 2,900	1,382	859 1,200	1,098	1,242 2,400	616	709 1,300	466,529	47,512 114,000
										1990년 10월	
5,028	1,079	6,792	486	5,476	561	2,890	310	4,112	423	731,669	43,798
										1991년 1월 이래	
2,975	1,649 7,087	2,877	1,658 7,957	2,213	1,229 8,186	1,910	1,091 5,481	1,103	506 2,442	63,218	32,922 156,293
391	680 861	468	556 682	320	307 410	362	517 711	73	58 72	11,172	17,231 25,514

출처: 연방노동경제부(BMWi), 연방 경제 및 수출감독청(BAF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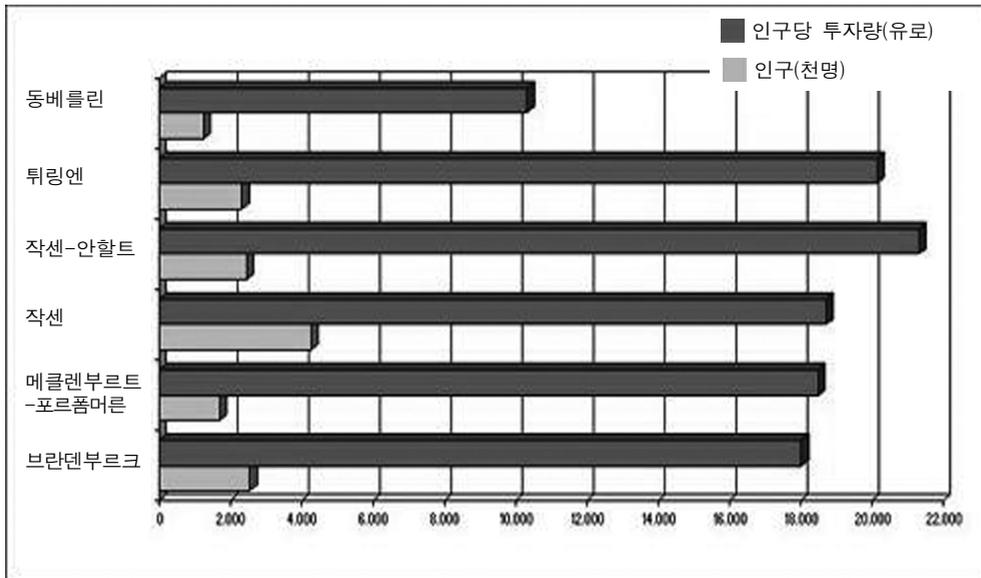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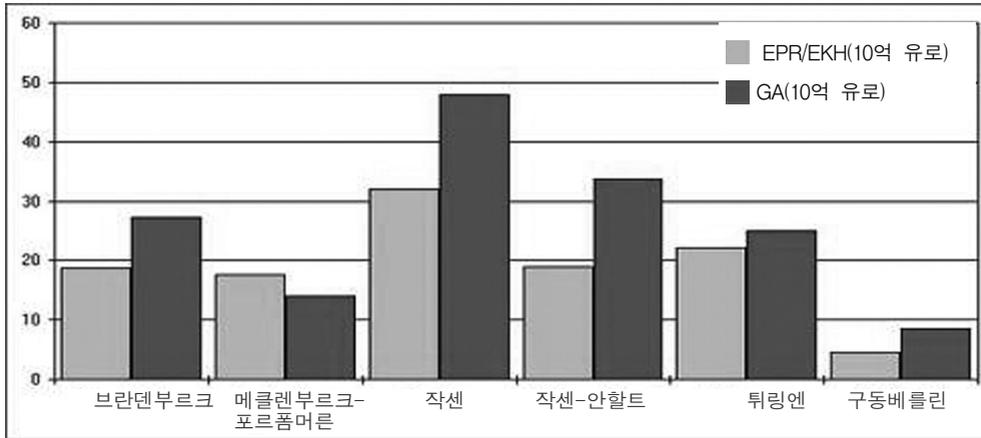
## 5.2. ‘지역경제 구조개선’ 공동 프로그램(GA), 투자지원 대출 프로그램(ERP) (자산성 대출 프로그램 <EKH> 포함)에 의한 신연방주 지역별 투자현황(1990~2006.06)

	ERP/EKH <sup>1)</sup> (10억 유로)	GA <sup>2)</sup> (10억 유로)	인구 <sup>3)</sup> (천명)	주민 1인당 투자액(유로)
브란덴부르크	18.8	27.3	2,599	18,000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17.6	14.0	1,707	18,500
작센	32.0	47.9	4,274	18,700
작센-안할트	18.9	33.7	2,470	21,300
튀링엔	22.1	24.9	2,335	20,100
구동베를린	4.6	8.5	1,271	10,300
<b>총 계</b>	<b>114.0</b>	<b>156.3</b>		<b>18,500</b>

<sup>1)</sup> 전체 지원건수 중 5%이하만이 ERP/EKH와 GA, 양 프로그램 모두의 지원을 받았음.

<sup>2)</sup> <sup>1)</sup>과 동일.

<sup>3)</sup> 2005년 12월 31일 현재(구동베를린 지역통계는 2001년 6월 30일 기준).



출처: 연방노동경제부(BMWi), 연방 경제 및 수출감독청(BAFA).

## VI. 회사설립

### 6. 1991년 이후 신연방주지역 창업 및 폐업건수<sup>1)</sup>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창업건수	140,000	96,000	79,000	74,000	76,000	86,000	108,500
폐업건수	11,000	24,000	41,000	44,000	49,000	74,000	87,900
폐업건수 중 부도	392	1,092	2,327	3,911	5,874	7,419	8,126
-제조업	131	262	423	610	776	950	998
-건설업	27	122	461	1,027	1,893	2,685	3,137
-상업	57	301	682	961	1,438	1,586	1,532
-교통 및 미디어분야	13	74	188	368	414	411	363
-서비스업	53	227	484	828	1,224	1,624	1,914 <sup>2)</sup>
-기타 경제분야	111	106	89	117	129	163	182 <sup>2)</sup>
신규 창업건수	129,000	72,000	38,000	30,000	27,000	12,000	20,600

<sup>1)</sup> 1999년 이전: 구동베를린지역 포함한 신연방주지역.

1999년 이후: 베를린을 제외한 신연방주지역.

2004년 창업건수, 폐업건수 및 순수창업건수: 중산층연구센터(IfM)의 추정치.

<sup>2)</sup> 경제분야 분류체계의 변화로 전년도 통계와 일대일 비교가 불가능.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10,400	104,200	95,500	90,400	87,300	110,700	132,500	106,700
91,000	91,000	87,500	84,100	82,000	87,600	86,100	90,200
8,615	7,567	8,047	8,506	8,847	7,575	7,296	7,104
889	836	788	856	869	887	783	665
3,402	3,078	3,253	3,360	3,176	2,347	2,275	2,086
1,575	1,278	1,379	1,345	1,610	1,306	1,247	1,257
322	260	367	410	411	430	310	395
2,193	1,904	2,067	2,340	2,589	2,411	2,492	2,545
234	211	193	195	192	194	189	156
19,400	13,200	8,000	6,300	5,300	23,100	46,400	16,500

출처: 연방통계청(부도건수), 중산층연구센터(IfM), 본 지부(기타 통계, 참고: 1990년, 순수창업건수: 11,000).

## VII. 연구개발(R&D)

### 7. 경제분야의 연구개발인력

연도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 인력수 (전체)	전체연구 인력 중 신연방주 비율	인구 1만명 당 연구개발 인력(명)	근로자 1만명 당 연구개발(명)	신연방주 근로자 부족비율(%)
1995	구연방주	250,704		40	87	
	신연방주 <sup>1)</sup>	32,612	11.5	18	43	-51
1997	구연방주	250,545		39	87	
	신연방주 <sup>1)</sup>	35,725	12.5	20	47	-46
1999	구연방주	271,148		42	94	
	신연방주 <sup>1)</sup>	35,545	11.6	20	47	-50
2001	구연방주	270,354		42	92	
	신연방주 <sup>1)</sup>	36,903	12.0	21	50	-46
2003	구연방주	267,609		41	86	
	신연방주 <sup>1)</sup>	30,463	10.2	18	42	-49
2004	구연방주	267,560		41	84	
	신연방주 <sup>1)</sup>	30,457	10.2	18	42	-50

<sup>1)</sup> 베를린 포함

출처: 연구개발 2003/4 자료, 독일과학재단협회 2006.2.23 언론보도.

## Ⅷ. 투자활동

### 8.1. 신연방주 설비투자 변화 추이<sup>1)</sup>

(경상가격 기준, 10억 유로)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설비투자	50.9	70.4	85.2	102.4	105.5	100.8	96.2	91.5	88.4	83.8	76.1	68.7	66.9	67.2	65.3
시설 <sup>2)</sup>	22.1	24.7	26.7	29.0	30.1	30.4	29.1	31.0	32.4	33.9	32.7	30.1	28.6	29.2	30.2
건축물 <sup>2)</sup>	28.7	45.7	58.5	73.4	75.5	70.4	67.1	60.5	56.1	49.9	43.4	38.7	36.3	34.9	35.1
건축분야투자가 설비투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56.5	65.0	68.6	71.6	71.5	69.9	69.7	66.1	63.4	59.6	57.1	56.3	54.2	51.9	53.8

<sup>1)</sup> 신연방주(동베를린 포함, 구연방주).

<sup>2)</sup> 연방통계청, 이포(ifo) 경제연구소.

출처: 연방통계청, 이포(ifo) 경제연구소 추정치(신연방주 투자 상황 통계-2006년 6월 현재).

### 8.2. 신연방주<sup>1)</sup> 주민 1인당 설비투자 및 자본축적 변화 추이<sup>2)</sup>

(구연방주=100기준)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신규시설 포함 기타 설비투자 <sup>3)</sup>	58.9	68.8	89.0	100.3	103.2	102.0	92.2	90.0	87.8	84.2	84.1	84.3	83.6	85.2	85.7
건축투자 <sup>3)</sup>	71.4	106.1	137.5	168.0	175.4	167.8	161.5	143.2	129.2	114.9	103.5	98.2	94.4	92.4	95.9
자본축적 <sup>4)</sup>	37.4	40.2	43.4	47.0	48.5	52.1	55.5	58.6	61.5	64.2	66.5	67.9	68.9		

<sup>1)</sup> ESGV 1995 통계치.

<sup>2)</sup> 신연방주(동베를린 포함).

<sup>3)</sup> 연방통계청, 이포(ifo) 경제연구소.

<sup>4)</sup> 전 경제분야, 1995 경상가격, 신연방주(베를린 제외), 구연방주(베를린 포함).

출처: 연방통계청, 이포(ifo) 경제연구소(신연방주 투자 상황 통계-2006년 6월 현재), 연방통계청.

8.3. 신연방주지역 경제분야별 투자 변화 추이<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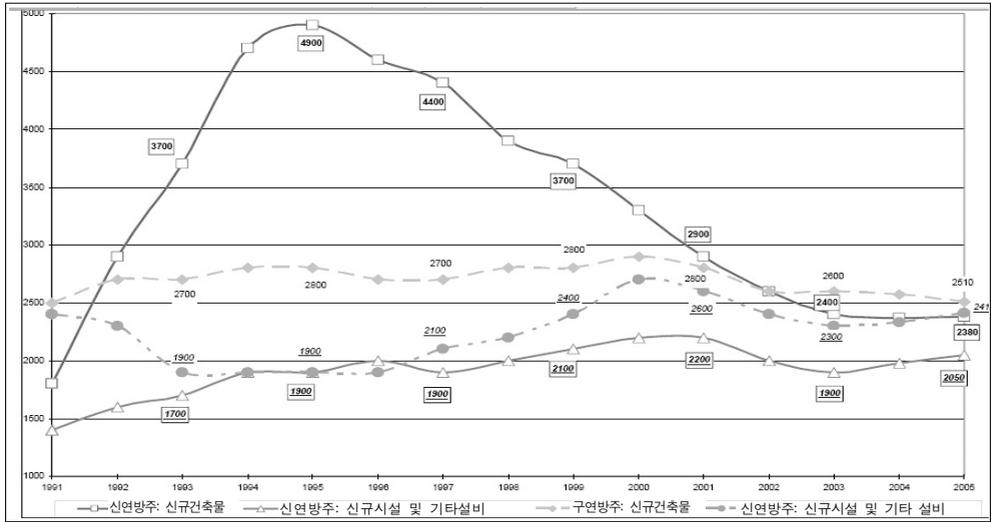
분야	신규 설비 투자. 경상가격 기준(10억 유로) <sup>2)</sup>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b>경제분야 전체</b>	<b>50.9</b>	<b>70.4</b>	<b>85.2</b>	<b>102.4</b>	<b>105.5</b>	<b>100.8</b>	<b>96.2</b>	<b>91.5</b>	<b>88.4</b>	<b>83.8</b>	<b>76.1</b>	<b>68.7</b>	<b>66.9</b>	<b>67.2</b>	<b>65.3</b>
<b>농업, 임업, 어업</b>	<b>0.6</b>	<b>0.9</b>	<b>1.1</b>	<b>1.5</b>	<b>1.6</b>	<b>1.4</b>	<b>1.2</b>	<b>1.4</b>	<b>1.5</b>	<b>1.3</b>	<b>1.2</b>	<b>1.3</b>	<b>1.2</b>	<b>1.1</b>	<b>1.1</b>
<b>공업</b>	<b>14.4</b>	<b>20.1</b>	<b>21.7</b>	<b>21.8</b>	<b>21.2</b>	<b>20.0</b>	<b>16.9</b>	<b>16.0</b>	<b>15.5</b>	<b>14.5</b>	<b>14.3</b>	<b>12.4</b>	<b>11.5</b>	<b>12.4</b>	<b>11.6</b>
제조업	9.5	11.0	12.4	12.6	10.9	10.4	9.7	9.3	9.5	9.7	10.3	8.9	8.6	9.6	8.9
건설업	2.4	3.0	3.2	3.2	2.2	1.9	1.5	1.3	1.3	1.2	1.0	0.8	0.7	0.6	0.6
에너지/해운, 광업	2.5	6.0	6.1	6.0	8.2	7.6	5.8	5.4	4.7	3.7	3.1	2.8	2.2	2.2	2.1
<b>서비스업</b>	<b>35.8</b>	<b>49.4</b>	<b>62.5</b>	<b>79.2</b>	<b>82.8</b>	<b>79.4</b>	<b>78.1</b>	<b>74.1</b>	<b>71.5</b>	<b>67.9</b>	<b>60.5</b>	<b>55.1</b>	<b>54.2</b>	<b>53.7</b>	<b>52.5</b>
무역, 음식/ 숙박업, 교통	9.6	11.5	12.5	13.8	13.3	10.2	8.7	8.5	8.8	9.2	8.9	8.7	8.5	8.6	8.6
금융업, 임대업, 기업서비스	14.5	22.2	30.2	40.8	44.2	47.6	49.5	45.2	42.4	39.1	33.6	29.3	28.9	28.6	28.1
공공 및 사적 부문 서비스	11.7	15.6	19.7	24.6	25.3	21.7	19.9	20.4	20.3	19.6	18.0	17.1	16.8	16.5	15.9

분야	전년대비 <sup>2)</sup>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b>경제분야 전체</b>	-	<b>38.4</b>	<b>21.1</b>	<b>20.2</b>	<b>3.0</b>	<b>-4.5</b>	<b>-4.5</b>	<b>-4.9</b>	<b>-3.4</b>	<b>-5.2</b>	<b>-9.2</b>	<b>-9.7</b>	<b>-2.7</b>	<b>0.5</b>	<b>-2.8</b>
<b>농업, 임업, 어업</b>	-	<b>46.0</b>	<b>15.2</b>	<b>38.7</b>	<b>5.4</b>	<b>-12.3</b>	<b>-11.0</b>	<b>13.2</b>	<b>5.8</b>	<b>-8.3</b>	<b>-6.8</b>	<b>4.8</b>	<b>-10.0</b>	<b>-5.4</b>	<b>1.9</b>
<b>공업</b>	-	<b>39.3</b>	<b>7.9</b>	<b>0.4</b>	<b>-2.6</b>	<b>-5.8</b>	<b>-15.3</b>	<b>-5.3</b>	<b>-3.1</b>	<b>-6.4</b>	<b>-1.3</b>	<b>-13.8</b>	<b>-6.9</b>	<b>7.5</b>	<b>-6.2</b>
제조업	-	15.9	12.5	1.4	-13.6	-4.0	-7.3	-3.7	1.7	2.2	6.3	-14.0	-2.8	11.3	-6.7
건설업	-	24.7	4.0	1.3	-32.0	-12.0	-22.0	-12.1	1.5	-9.8	-20.8	-20.0	-12.6	-8.1	-5.0
에너지/해운, 광업	-	20.6	8.7	10.4	-4.1	-23.5	-14.3	-1.8	3.2	-22.7	-15.1	-11.3	-18.4	-2.4	-4.2
<b>서비스업</b>	-	<b>52.8</b>	<b>36.2</b>	<b>35.0</b>	<b>8.4</b>	<b>7.6</b>	<b>4.0</b>	<b>-8.7</b>	<b>-6.2</b>	<b>-4.9</b>	<b>-11.0</b>	<b>-9.0</b>	<b>-1.6</b>	<b>-0.9</b>	<b>-2.2</b>
무역, 음식/ 숙박업, 교통	-	33.6	26.2	24.6	3.0	-14.2	-8.2	2.5	-0.6	4.8	-3.3	-3.1	-1.7	1.6	-0.6
금융업, 임대업, 기업서비스	-	52.8	36.2	35.0	8.4	7.6	4.0	-8.7	-6.2	-7.6	-14.3	-12.7	-1.3	-1.1	-1.6
공공 및 사적 부문 서비스	-	33.6	26.2	24.6	3.0	-14.2	-8.2	2.5	-0.6	-3.5	-8.1	-4.8	-2.0	-1.7	-3.8

<sup>1)</sup> ESGV 1995 통계치.

<sup>2)</sup> 이포(ifo) 경제연구소 추정, 2006.6 기준.

#### 8.4. 경제분야 전체 1인 당 투자액(신·구연방주 비교)



출처: 연방통계청, 이포(ifo) 경제연구소 추정(2006년 6월 기준), 연방정부 자체작성.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총서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 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 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 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2007-0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저	6,000원
20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09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저	6,000원
2007-10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태 외	공저	7,000원
2007-12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 외	공저	8,500원
2007-13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배정호	저	6,000원
2007-14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최춘흠	저	5,000원
2007-15( I )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외	공저	10,000원
2007-15(II)-1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3	北東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4	东北亚区域合作的新联系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6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외	공저	8,000원
2007-17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 석	저	8,500원
2007-18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이금순	저	7,000원

### 학술회의총서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9,000원

### 협동연구총서

2006-04-01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2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I ): 안보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3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II ): 경제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7-10-02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 외	공저	9,000원
2007-10-03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외	공저	7,500원
2007-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7-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공저	6,000원
2007-11-03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500원
2007-11-04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공저	6,000원
2007-11-0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성훈 외	공저	6,500원
2007-11-06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저	8,000원
2007-11-07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11-08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외	공저	7,500원
2007-11-09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외	공저	8,500원

##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2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2 (2007)			10,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i>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 독일통일백서

2006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	-------------	--	--------

## 연례정세보고서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200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7~2008	6,000원

## ◆ 비매품 ◆

## 통일정세분석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운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운
2006-07	주일미군 재판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운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민국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곤
2007-14	하반기('07년 7월~12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정영태,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6차 회의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곤,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2007-06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
2007-07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최진욱
2007-08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전성훈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	임순희, 이금순, 김수암
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	임순희, 이금순, 김수암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	이금순, 서재진, 김수암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2호	이금순, 최진욱, 김수암

## 월간 북한동향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2007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제1호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 민, 조정아
------	----------------------	------------------------------

## Studies Series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정기회원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기회원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회원의 구분

- 1)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2)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가입방법

- 1) 「도서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2)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3)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가입기간

- 1)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 회원으로서의 자격유지
- 2)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하실 분은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 4. 회원의 특전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15-20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협동연구총서(연평균 5-10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 5. 회원가입 문의

- (142-728)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6동) 통일연구원
-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전화: 901-2559, FAX: 901-2547)

※가입기간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6 독일통일백서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2006



